

2019년도 제23차 정기총회

2019년도 제23차 정기 총회 자료집

일 시 : 2019년 1월 28일(월) 18:00

장 소 : 여성미래센터 지하 교육장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2019년도 제23차 정기총회

2019년도 제23차 정기 총회 자료집

일 시 : 2019년 1월 28일(월) 18:00

장 소 : 여성미래센터 지하 교육장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차 례

■ 정기총회 순서	1
■ 제21차 정기 총회 회의록	5
■ 2018년 감사 보고	11
■ 2018년 사업보고 및 평가	13
I. 사업 총평	15
II. 사업보고 및 평가	21
【1】조직 사업	21
【2】평화·통일 사업	26
【3】정보·홍보 사업	37
【4】회원 사업	39
【5】연대 및 협력사업	40
【6】부설기구 갈등해결센터	48
한국여성평화연구원	56
■ 2018년 결산보고	69
■ 임원 인선안	73
■ 2019년 사업계획(안)	75
사업구조와 방향	77
부설기구 갈등해결센터	81
한국여성평화연구원	82
조직사업	83
■ 2019년 예산안	85
■ 부록	89
평화여성회 정관	
평화여성회 조직 현황	
2018년 성명서 목록	
회원가입서	

정기총회 순서

I 부 회원등록 및 식사 나눔, 인사나누기 (오후 6:00 ~ 오후 6:30)

II부 본 회의 (오후 6:30 ~ 오후 8:30)

1. 개회선언
2. 서기임명
3. 성수보고
4. 회순채택
5. 전차회의록 낭독
6. 2018년 감사보고
7. 2018년 사업보고와 승인
8. 2018년 결산보고와 승인
9. 임원 선출 및 승인
10. 2019년 사업계획안 보고와 승인
11. 2019년 예산안 보고와 승인
12. 기타토의
13. 모범회원상 시상
14. 회의록 받음
15. 폐회

2018년도
제22차 정기 총회 회의록



제22차 정기총회 회의록

- 서기: 신민시, 이덕경
- 일시: 2018년 1월 29일(월) 19: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지하 교육장
- 주요내용

1. 개회선언

- 안김정애 의장이 19:00로 개회를 선언하고, 정기총회를 시작하다.

2. 서기임명

- 이덕경, 신민시 회원을 총회 공동서기로 임명하다.

3. 성수보고

- 신민시 활동가가 재적회원 39명중 위임 12명, 참석 11명 총 23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안김정애 의장이 정관에 의거 성회되었음을 선언하다.

4. 회순채택

- 안김정애 의장이 자료집의 회순을 낭독하다.
- 조영희 회원이 8번 조직개편의 건은 지난 총회에서 논의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다.
- 김성은 동의, 이덕경 재청으로 모두 가하여 이를 받기로 하다.

5. 전차회의록 낭독

- 안김정애 의장이 안전대로 보고하다.

6. 2017년 감사보고

- 이덕경 회원이 사업 감사 보고서를 대독하다.
- 사업 감사 내용에서 갈등해결센터 분리 과정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바로 잡아함을 확인하다.
- 김정수 회원이 회계감사 보고서를 대독하다.

7. 2017년 사업보고와 승인

- 조영희, 김정아 회원이 총평을 낭독하다.
- 김명신 회원이 2018년, 더 많은 회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회원들에게 관심, 동기 부여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각종 사업들을 회원들과 의사소통의 기회

로 삼을 것을 제안하다.

- 조영희 회원이 대중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논의와 노력이 필요한 것에 대해 동의하다.
- 이덕경 회원이 각종 사업을 홍보할 것을 제안하다.
- 한정숙 회원이 21쪽 '평화올림픽예'를 '평화올림픽이'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다
'실무역량에도 불구하고'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다.
- 김정수 회원이 동의하고, 김정은 회원이 재청하여 모두 가하여 받다.

8. 2017년 결산보고와 승인

- 별도 자료를 토대로 신민시 활동가가 보고하다.
- 김정수 회원이 89쪽 회계 보고에 총결산내역과 함께 자산, 부채를 추가하여 정리할 것을 제안하다.
- 이덕경 회원 동의, 조영희 회원 재청으로 가하여 받다.

9. 2018년 임원선출

- 조영희 인선위원회위원장이 인선위원회 구성에서 '김정아', '이은영'이 오타임을 확인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임원선출안을 설명하다
- 김명신 회원이 동의, 한정숙 회원이 재청하여 가하여 받다.
- 조영희회원이 공식적인 사업감사를 이사회에서 가선임하여 감사로서 활동을 보장하고 차기 총회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하다.
- 조영희회원이 P. 96 배상의 감사에 사임을 임기만료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다
- 김정아 회원 동의, 김명신 회원 재청하여 가하여 받다.
- 김명신 회원이 현재 임기 중인 이사들의 임기를 비교란에 명기할 것을 제안하다

10. 2018년 사업계획안 보고와 승인

- 안길정에 의장이 원안대로 보고하다.
- 100쪽 '프로그램의' -> '프로그램을' 로 수정
- 한정숙 회원이 기초와 방향에 동의하며 최근에 젊은 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 선생님들과 평화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등, 어린 세대들이 평화통일에 열린 자세를 가지기 위해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계획을 제안하다.
- 김정수 회원이 교사, 공동체의 역할을 통해 북한에 대한 누적된 적대감을 줄이는 교육 콘텐츠 사업을 공모하기로 했음을 공유하다.
- 조영희 회원이 '제주 4.3 사건'을 '제주 4.3'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일회성 만남'을 빼고 '남북여성교류의 지속적으로 진행'을 위하여 6.15, 8.15등의 계기를 이용하도록 하며, 나아가 DMZ 여성평화공동체...등의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다.

- 한정숙 회원이 '열리는' 중복표현 수정을 제안하였고, '기회를 활용하여'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다.
- 김명신 회원이 여성평화결기행사에 대한 재언으로 재외동포 참여, 국내에 더 많은 여성단체들이 참여하는 실질적 여성연대로 5.24 결기행사가 될 것을 제안하다.
- 조영희 회원이 국내 여성단체들(여연)의 결합과 역량을 강화하는 계획이 필요함을 제안하다.
- 한정숙 회원이 한국사회 전반의 감동을 주는 행사가 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할 것을 제안하다.
- 김명신 회원 등의, 한정숙 회원 재청으로 가하여 받다.
- 김성은 회원이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다.
- 조영희 회원이 사업계획은 사업기조에 나와 있는 것을 담아야하므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가하고 순서를 바꿀 것을 제안하다.

1. 남북여성교류의 지속적인 추진

2. 분단/정전체제 종식을 위한 캠페인과 국제적인 연대활동 모색
3.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결의 1325' 국가행동계획 모니터링 계획수립 등 대응모색
4. 여성의 일상적 삶과 연결된 평화의제를 발굴
5. 한반도의 군사기지와 반대 활동
6. 평화협정 체결 촉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
7. 2018 평화, 여성평화결기

- 수정된 내용으로 총회자료집 보관용을 만들어야함을 확인하다.

- 김명신 회원 동의. 심민시 회원 재청으로 가하여 받다.

11. 2018년 예산안 보고와 승인

- 업무추진비 비교란에 20만원으로 수정
- 김정수 회원이 부설기구에 예산이 상정되지 않았기에 논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다.
- 조영희 회원이 이에 동의하며 큰 틀로는 총회에서 승인하고, 세부사항은 운영위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할 것을 제안하다.
- 김정수 회원 동의. 한정숙 회원 재청하여 박수로 가하여 받다.

12. 기타 토의

- 조영희 회원이 활동가 변동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을 제안하다.

회의록 받음

- 신민시 서기가 회의록을 낭독하다.
- 김성은 회원 동의, 박현선 회원 재청으로 가하여 받다.

13. 폐회

- 21:10분에 안김정애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2018년 감사 보고



2018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사업감사 보고

1. 2018년도에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이하 ‘평화여성회’)는 “여성의 힘을 모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한다”는 단체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성실히 매진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평화여성회는 제한적인 인원과 재정적 불충분함에도 남북여성교류와 여성평화건기 행사, 분단/정전체제 종식을 위한 캠페인과 심포지엄, 국제적인 연대활동 등 다양한 자체활동과 연대활동을 통하여 평화·통일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3. 또한 평화여성회는 부설기구인 ‘갈등해결센터’와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의 활발한 활동으로 사회에 평화와 갈등해결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를 마련하고 있으며, 연구와 적용의 균형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 2019년도에도 성평등한 한반도, 평화로운 한반도와 동북아를 만들기 위한 ‘여성평화역량 강화’와 ‘자체조직력 강화’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 1. 28.

감사 박 유 희



2018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회계 감사 보고
(별지)

2018년 사업보고 및 평가

I. 2018년 사업 총평

II. 2018년 사업 보고 및 평가

1. 2018년 사업 총평

2018년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획기적인 대북정책을 구사한 해로 기록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꾸준히 준비해 온 '운전자론'에 입각한 '평화공존·공동번영' 정책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구체화시키려는 노력이 돋보인 한 해였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보수 정권과 달리 남북 상호존중의 정신과 신뢰에 기반하여 북핵문제를 근원적·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동북아 평화와 세계평화 달성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며, 북한도 "우리민족끼리" 문제해결을 중시하며 이에 적극 호응·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올 한 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남북당국의 만남과 2월에 개최되는 23회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북남관계 개선을 통해 민족사의 특기할 만한 사변적인 해'로 만들자는 제안을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화답하였고, 실제로 북한대표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통해 한반도 화해무드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한반도기를 앞세운 분단 이후 남북 역대 10번째 공동입장이 이루어졌으며,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이 구성되는 등 전세계적으로도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4월 27일에는 분단 이후 최초로 판문점에서 양국 정상인 만나 '한(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실질적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의 필요성을 천명하였다.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대통령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갖고 '북미 공동성명'을 통해 북-미간 새로운 관계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유해 송환 등에 합의하였다. 일부 언론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명기가 누락되었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북미간 최초의 정상회담으로 기록된 싱가포르 회담은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문제해결을 위한 2차 정상회담의 가능성과 계기를 마련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9월 19일에 평양에서 개최된 3차 정상회담에서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다시 한 번 '전쟁 없는 한반도'를 국내외에 천명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군사분야 합의서 채택, 한반도에서 핵무기·핵위협 제거, 남북 각계 각층의 대화와 협력·교류 증진,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 등을 합의하였다. 한반도 해빙 무드로 인해 더 이상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한미 양국은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 상태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분단 이후 최초의 북한 지도자의 방남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서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다. 남북은 공동합의문에 명시된 대로 한강하구 평화수역 조사, 비무장지대 내의 감시초소 폐쇄, 남북철도 점검, 조일사업 등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말까지 불안정했던 한반도 정세가 다소 안정되긴 했으나, 미국이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경제정책을 지속함으로써 미

사일 발사 실험 중단·핵실험장 폐쇄 등을 실행한 데 대해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북한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1차 북미회담 직후 연내 2차 정상회담을 약속했으나 11월 미 중간 선거를 전후로 회담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는 등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벌어진 미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북핵 관련 가짜 뉴스 살포, 유엔인권위의 대북인권문제 제기 등 미국 내 보수 언론의 부정적 보도 행태도 한반도의 평화 앞당기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반도의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지만 평화여성회는 본단의 장벽을 열고 남북 사이에 새로운 평화의 길을 만드는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2018년 평화여성회의 활동은 아래와 같이 전개되었다.

1. 남북여성교류의 지속적인 추진

11월에는 남북 민간인 교류형태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금강산에서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가 열려 남북여성이 한 자리에 마주할 수 있었다. 북한측에서는 5명의 대표단이, 남한측에서는 평화여성회를 비롯한 민화협 여성위원회 소속 7명의 여성대표단이 마주한 간담회 형식의 상봉모임에서 북한측 여성대표단은 미국의 계속된 대북제재를 남북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고, 남측 여성대표단은 3·1혁명 100주년 기념 남북여성공동행사, 5·24세계여성평화군축의날 행사 등을 제안하였다. 비록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지만, 이번 만남을 계기로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북여성 대화의 끈을 이어갈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만나야 평화고 만나야 통일이 다’라는 공통 인식 하에 남북여성들이 정례적인 만남을 이어갈 것과 일정한 만남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남북평화협상과정에서 북측이 주장하는 ‘역사의 한 수레바퀴’로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해야 하며, 여성이 만드는 미래 한반도 평화상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였고, 여건이 조성되는대로 내년도에도 남북여성교류를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2. 본단/정전체제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캠페인과 국제적인 연대활동 모색

1) 2018평화평창 여성평화 걷기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적 개최와 북한의 2018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촉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도하며, 이를 국내외 여론에 호소하기 위해 본회가 주축이 되어 여성평화걷기조직위원회와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여성 상임의 공동주최 행사인 2018 평화평창 여성평화걷기를 진행하였다.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100 명의 평화여성이 참여하는 평창-강릉-속초-고성 DMZ 중 37km를 걷는 행사로 걸으면서 ‘평화구축과정에서의 여성의 리더십 확대,’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갈등의 평화적 해결,’ ‘여성주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남북여성 함께 걷기

등의 구호와 함께, 평화퍼포먼스, 북 토크쇼, 북한영화보기 씨네토크, 라운드테이블 토론 등을 함께 진행하였다.

본회는 2018평화평창 여성평화걸기를 주도적으로 기획·실행하고 마무리하였는데, 독일 방송국 ARD에서 취재를 나와 출발부터 고성 DMZ까지 취재를 하여 국제적으로 한반도 평화문제를 알리는 데 일조하였다. 여성의 평화걸기 취재는 독일 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관심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2) 2018여성평화걸기

본회가 주축이 되어 1997년 이후 진행되어 온 '5·24세계여성평화군축의날' 기념행사로, 2015년에 시작된 여성평화걸기를 올해는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예산지원을 받아 진행하였다. 국제여성평화단체인 WomenCrossDMZ, Nobel Women's Initiative, WILPF 등과 함께 '2018여성평화걸기' 이름으로 진행된 이 행사는 5월 24일 국제여성평화심포지엄, 5월 26일 총 5.5km 길이의 국제여성평화걸기를 주축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내 여성평화걸기조직위원회 30개 단체와 위의 국제여성평화단체들로부터 30 여명의 활동가들이 참가하여 4·27선언 지지와 6·12북미회담 예정대로 개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촉구, 한반도 평화협상 과정에 여성의 동등 참여, 전세계 비핵화,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대북제재 해제, 군비축소와 복지비·환경보호예산으로의 전환, 여성에 대한 전시폭력 금지 등을 촉구하였다. 또한 도라산 평화공원까지 1000 여명의 시민들과의 평화걸기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였다. 애초 북한 여성들도 참여하여 남쪽에서 북쪽으로 DMZ를 통과하기 위해 북쪽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본회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진상 실행에 옮기기가 어려웠다. 본회는 주관단체로서 프로젝트 마무리와 보고서 작성까지 마무리하였다.

3) 여성평화종전 선언문 발표

7월 27일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이하여 김포와 강화도에서 개최된 평화협정체결대회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한반도 종전을 국내외에 공식 선언하는 '7·27여성평화종전선언문'을 평화여성회가 기초하고 여성단체연합 소속단체들의 명목과 여성평화걸기조직위원회 이름으로 발표하여,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과 성평등한 한반도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관련국의 조속한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전세계 비핵화, UNSCR1325에 의거하여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협상단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 DMZ의 평화지대화와 NLL의 평화수역화, 여성혐오와 여성배제 없는 성평등한 법과 제도 수립 그리고 실천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4) 통일협약시민추진위원회 관련 활동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시민단체, 종교계, 전문가 그룹이 함께 구성한 한시적 민간단체인 통일협약시민추진위원회에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실제 시민참여대표단으로 참

여향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 마련을 위한 전국시민회의 준비모임에 대표단으로 참석하여 남남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5) 국제연대 활동

가) 무장갈등예방글로벌파트너십(GPPAC) 젠더 전문가 회의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본 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세계 각 지역으로부터 참석한 여성들로부터 자국 내 여성평화 인권운동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UNSCR1325의 구체적인 현지 적용 사례, 해결책 모색 등을 토론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 4차 무장갈등예방글로벌파트너십(GPPAC) 동북아 회의

12월 2일부터 4일까지 북경에서 열린 4차 회의에 참석하였다. 북한대표단 4명 등 총 24명의 동북아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모여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비핵지대화 등 논의. 원래 9월 경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여건이 어려워 시기와 장소를 변경하여 개최되었다. 북측은 올해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과정이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등 상용조치 불이행으로 인해 난항에 빠졌으며, 해결을 위해 GPPAC 소속 단체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였고, 본회는 한반도 평화는 결국 성평등과 직결되며, 올해 초부터 시작된 #미투운동을 소개하고 앞으로 전개될 한반도 평화협상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성평등이 전제된 한반도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외국 참가단체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조속 재개와 대북 인도적 지원의 재재 해제, 북한 바로알기 국제적 협조 등을 제시하였고, 내년도 5차 회의는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8월 말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다) 동북아 여성·평화·안보 회의 참석

지난 7월부터 시작된 3개 국제여성평화단체(WCD, WILPF, Nobel Women's Initiative)의 '여성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202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2월 4일부터 6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된 위 회의에 남측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코어그룹의 일원으로 참석하여 3명의 북측여성대표단을 비롯한 총 26명의 국제여성평화활동가와 주중 캐나다 대사관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문제인식 공유, 전략회의 등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남북해외 평화여성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여성평화역량 강화, 평화협정 체결 필요성 대중화, 남북여성교류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본회는 2015년 이후 여성평화걸기를 진행하면서 국제여성평화단체들과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행동 실천에서 앞으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다.

6) 기타

1월에는 한국 YMCA가 주관하고 강원도가 후원하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기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세계평화대회'에 평화여성회가 YWCA와 공동으로 여성 Session을 기획하여 'Women, How to Make Peace in Korea?'란 주제로 평화여성회 이름으로 한국여성의 평화운동 사례를 발표하였고, 미군대령 출신 여성평화활동가 Ann Wright를 초빙하여 팔레스타인 등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여성평화운동 소개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평화여성회 이름으로 민주평통 월간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월간지, 통일뉴스와 오마이뉴스 등의 매체에 한반도 평화협상과정의 남성·여성의 동수(同數)참여와 2018평화평창여성평화걷기, 5·24여성평화걷기, 금강산 남북여성대표단 간담회 등에 관한 기사를 송고하여 평화여성회의 활동상을 널리 알리기도 하였다(통일뉴스, "당당하고 용기있는 평화일꾼이 되도록 해 줄 것"(1. 20) "여성 없이 평화없다. 만나야 평화고 만나야 통일이다(5. 31). 오마이뉴스, "그 많은 여성들은 어디로...남북화해 무드 속 '불편한 진실'"(10.16) "남북의 여성들 금강산에서 만나다"(11.6). 민주평통 [통일시대](2018년 4월호), "생명·평화·삼성의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한반도 평화를 만들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 리뷰]인터뷰(2018년 여름호), "평화여성회의 활동과 한반도 평화 전망" 등의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3.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관련 활동:

본회는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대한민국 제2가 국가행동계획 민간자문단 활동을 통해 국가행동계획 이행기반 내실화를 위한 민관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은 여성가족부 연구용역으로 '여성·평화·안보 역량강화를 위한 매뉴얼 개발' 연구를 수행하며 1325 리플렛 제작, 공무원과 일반시민이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매뉴얼을 개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6월 발족한 외교부 '여성'과 함께 하는 평화 이니셔티브'를 통해 분쟁 지역 성폭력, 젠더폭력 피해지원, 여성인권 보호 등을 위한 개발협력에 위한 민관협력사업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였다.

4. 여성의 일상적 삶과 연결된 평화의제 발굴

1) 평화활동가 대회 참석

10월에 진행된 연례 평화활동가대회는 백령도에서 본단의 현장과 생애문제 등을 함께 고민하며, 다양한 단체 평화활동가들의 연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2) 회원 참여 사업(페미니즘과 군축 공부) 실시

7월부터 여성주의적 시각에서의 군축 문제를 들여다 보는 '페미니즘과 군축' 공부를 총 6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팔레스타인, 오키나와 등 폭력과 군사기지에 반대하는 각 국가와 지역의 여성운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사례연구를 통해 회원들이 모여 공부하였다.

5. 한반도 군사기지와 반대 활동

해마다 7월 말에 개최되는 강정평화대행진에 참가하여 제주도에 들어 선 해군기지의 문제점과 관함식 반대 등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행동을 실천에 옮겼다. 그리고 사드배치 반대 공동연대 활동을 계속하였다.

6.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촉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10월에 여성연합과 공동으로 진행한 '남북여성이 만든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위한 여성평화운동 세미나'를 통해 한반도 평화과정의 실상과 여성주의적 당론의 필요성 등을 논의함으로써 구체적인 여성주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7. 갈등해결센터 활동

갈등해결센터는 그동안 학교와 지역사회의 평화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한 '평화적 갈등해결'교육에 분단국의 체제이념대립에 의한 남북, 남남갈등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통일교육을 접목하여 평화·통일교육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특히 미래세대인 2030 청년세대를 위한 교육매뉴얼로 의사소통형, 참여형 수업방식의 갈등해결 교육매뉴얼과 전쟁의 상처와 고통을 기억하고 있는 전쟁기념관을 역사적 트라우마의 치유적 관점에서 재인식함으로써 평화공간으로 재구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평화여성회가 서울시로부터 평화, 시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그 외에도 공론화 진행자 참여와 갈등해결교육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진행하여 우리사회의 일상평화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회는 올해 창립 21주년이 되는 해로서, 그리고 한반도 평화공존의 가능성이 높아진 시기에 무엇보다도 역사의 한 축인 여성이 평화협상 과정에서의 주류화가 필수적임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문제의식 공유와 평화여성활동가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강고한 남성 카르텔은 앞으로 여성평화운동의 주요 장벽으로 존재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깨기 위한 노력은 배가되어야 한다. 서지현 검사, 김지은 안희정 충남지사 전 보좌관의 성폭력 폭로 등으로 연초부터 불붙은 미투 운동은 해화역 시위로 이어졌으며, 여성들은 이제 촛불광장이 매미니즘 광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서도 남북여성이 함께 "성평등 없이 한반도 평화는 없다(No Gender Equality, No Korean Peninsula Peace)"를 외쳐야 한다.

II. 2018년 사업 보고 및 평가

【1】조직사업

1. 회의

1-1.총회

1) 역할: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의 기본 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 계획 및 보고의 승인, 기타 주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2) 구성: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의 사업에 같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3) 내용 : 2018년 사업계획 수립, 공동대표 및 임원 선출 등

4) 사업내용

(1) 정기총회

- 일시: 1월 29일(월) 18:00~21: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지하 교육장
- 성원보고: 재직회원 52명 중 참석 23명, 위임 7명, 총 30명
- 주요 내용: 2017년 사업 및 결산보고, 2018년 사업계획, 예산안 승인, 임원 변경, 조직 변경의 건

(2) 2019년 총회준비위원회

- 구성: 안김정애(위원장/본회 상임대표), 김정수(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장), 이덕경(부설갈등해결센터 부소장), 김정아(부설갈등해결센터 소장), 조영희(이사), 김귀옥, 여혜숙 (이사회 파견, 3차 총준위부터 결함)

① 1차 총회준비위원회

- 일시 및 장소: 11월 19일(월) 18:00~
- 참석: 안김정애, 김정수, 김정아, 이덕경
- 배석: 안지영
- 내용: 총회 자료 분담

② 2차 총회준비위원회

- 일시 및 장소: 12월 26일(수)

- 참석: 안김정애, 김정수, 김정아, 이덕경
- 배석: 안지영
- 내용: 2018년 1월~11월 사업결과 보고, 인선(안) 수정, 2019총회 정경

⑤ 3차 총회준비위원회

- 일시 및 장소: 2019년 1월 14일(월)
- 참석: 김정수, 김정아, 안김정애, 여혜숙
- 내용: 2018년 사업 총평 검토, 2019년 사업기조, 방향 초안 검토, 결산안, 정관, 규정 검토, 예산안 검토

1-2. 이사회

- 1) 역할: 본회의의 사업집행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위원회와 부설 기구의 설치, 정관의 변경 발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재산관리, 총회 부의 안건의 작성, 회원의 제명, 총회 위임 사항,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 결한다.

2) 구성

- 이사장: 김성은
- 이사: 김정아, 김귀옥, 김정수, 김지영, 박현선, 안김정애, 여혜숙, 이나영, 조영희, 한정숙(존칭생략, 가나다순)

3) 회의

(1) 1차(48차) 이사회

- 일시 : 2018년 1월 23일(월) 18:00 ~ 20:00
- 장소 :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참석 : 김성은, 안김정애, 김정수, 이나영, 조영희, 한정숙
- 배석 : 신민서(활동가), 안지영(활동가)
- 내용: 2017년 사업보고 및 평가, 2017년 결산보고 및 평가, 2017년 이사회 평가

(2) 2차(제49차) 이사회

- 일시 : 7월 6일(금) 18:30-21:00
- 장소 :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참석 : 김성은, 김지영, 김정수, 김정아, 안김정애, 여혜숙, 한정숙
- 배석 : 안지영, 이덕경(갈등해결센터 부소장)
- 내용 : 2018 상반기 사업/회계보고, 사업감사 선임의 건

1-3. 운영위

1) 역할: 본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한 주요사업과 기타 정관에 명시한 본회 목적사업과 관련한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 2) 구성 : 공동대표, 각 위원회와 부설기구의 장, 서기, 회계,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 : 안김정애 (상임대표)
 - 위 원 : 안김정애(상임대표), 김정수(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장), 김정애(부설 갈등해결센터 소장), 이덕경(부설 갈등해결센터 부소장), 조영희(이사)

3) 회의

(1) 제1차

- 일시 및 장소: 2월 26일(월) 18:00, 여성교회
- 참석: 안김정애, 조영희, 김정수, 김정애, 이덕경, 안지영(배석)
- 내용: 사무국, 위원회, 부설기구 사업보고, 1월 회계결산보고, 2018년 운영위원회 운영 방식, 총회 위임 사안/총회 회의록 검토, 정기 총회 평가, 3월 사업계획 검토

(2) 제2차

- 일시 및 장소: 3월 30일(금) 18:00, 여성교회
- 참석: 안김정애, 김정수, 김정애, 이덕경, 안지영(배석)
- 내용: 2.3월 사업/회계보고, 4월 사업계획 검토, 5.24 여성평화 프로젝트 사업계획 보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예산안(부설기구 예산안)확정, 통일교육협의회 재가입, 갈등해결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조정,

(3) 제3차

- 일시 및 장소: 4월 28일(토) 10:00, 여성교회
- 참석: 안김정애, 김정수, 김정애, 이덕경, 조영희, 안지영(배석)
- 내용: 4월 사업/회계보고, 5월 사업계획 검토, 2018여성평화결기 국제여성평화심포지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패널 설정,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식 홈페이지 수정안, 시명수씨 명예회원 등록

(4) 제4차

- 일시 및 장소: 5월 31일(목) 18:30, 여성교회
- 참석: 안김정애, 김정수, 김정애, 이덕경, 안지영(배석)
- 내용: 5월 사업/회계보고, 6월 사업계획 검토, 제22차 정기 총회 총회록 사업기조 내용 추가, 2018여성평화결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자체평가,

(4) 제5차 (이사회와 통합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7월 6일(금) 18:30, 여성교회
- 참석: 김정은, 김지영, 여혜숙, 안김정애, 김정수, 김정아, 이덕경, 안지영(배석)
- 내용: 2018 상반기 사업/회계보고

(4) 제6차

- 일시 및 장소: 9월 4일(화) 19:00, 여성교회
- 참석: 안김정애, 김정수, 김정아, 이덕경, 안지영(배석)
- 내용: 8월 사업/회계보고, 9월 사업계획 검토, 통일교육협의회 재가입의 건

(5) 제7차

- 일시 및 장소: 10월 16일(목) 18:30, 여성교회
- 참석: 안김정애, 김정수, 김정아, 이덕경, 안지영(배석)
- 내용: 9월 사업/회계보고, 10월 사업계획 검토, 2020 Women-led Korea Peace Treaty Campaign 사업계획 보고

1-4. 사무국회의

- 1) 역할 : 본회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안을 논의, 진행사업 점검 및 공유 등을 진행한다.
- 2) 구성 : 공동대표, 실무집행 책임자, 실무활동가 등으로 구성한다.
 - 위원 : 안김정애(상임대표), 안지영(활동가)
- 3) 내용 : 주 1회 혹은 격주 1회 시행, 일정 및 업무 공유, 주간 사업 논의.
- 4) 일시: 1/2, 2/13, 3/12, 4/25, 5/30, 7/4, 8/22, 9/17, 10/10, 12/18

2. 법인 행정

2-1. 감사

- 1) 역할 : 본 회 사업과 재정을 감사한다.
- 2) 구성 : 사업감사(박유희 전 이사), 회계감사 (윤수경 전 공동대표)
- 3) 결과 : 감사보고서 참조

2-2. 법인, 행정, 사무

1) 목표

- 본 회 법인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이행한다.
- 여성평화운동의 안정적 추진과 실천, 회원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2) 통일부 법인 업무

- (1) 통일부 2017년도 법인현황 제출 (일시 : 2월 19일)

3) 법인 세무 업무

- (1) 2017년 기부금 내역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 (일시: 1월 17일)
- (2) 4대 보험 취득신고 (일시: 2월 8일; 대상: 안지영)
- (3) 4대 보험 탈퇴신고 (일시: 2018년 2월 7일; 대상: 신민시)
- (4) 퇴직금 지급 (일시: 2월 7일; 대상: 신민시-2017년 1월~2018년 1월 근무)
- (5) 산재보험, 고용보험, 2017년도 보수총액신고 (일시: 2018.03.27 FAX)
- 대상 : 신민시
- (6) 건강보험 2017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신고 (일시: 2018.03.27. FAX)
- (7) 2017년도 12월 결산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일시: 2018.07.11 FAX)
- (8)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일시: 2017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2018.03.31 OK)
- (9) 2017년 귀속 소득총액 신고 (일시: 2018.03.27 FAX)
- (10) 2017년 귀속 소득총액 신고 (일시 : 2018.03.27 FAX -건강,연금,고용,산재)
- 대상 : 신민시

4) 행정 업무

- (1) 갈등해결센터 홈페이지 도메인/호스팅 연장
① 도메인 만료일 2019.01.21 ② 호스팅 만료일 2019.12.07.
- (2) WCD 홈페이지 도메인/호스팅 연장
① 도메인 만료일 2019.04.11, ② 호스팅 만료일 2019.04.10.

(3) 오즈메일러 사용본 결제(12개월)

- 기간 : 2018.3.19. ~ 2019.3.19

(4) dropbox 결제(1년)

- 기간: 2018년 11월 7일-2019년 11월 6일

【2】 평화·통일 사업

<2018년 사업 계획안>

1. 남북여성교류의 지속적인 추진
2. 분단/정전체제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캠페인과 국제적인 연대활동 모색
 - 1) 2018여성평화걷기
3.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모니터링 계획수립 등 대응 모색활동
4. 여성의 일상적 삶과 연결된 평화의제 발굴
5. 한반도 군사기지화 반대활동
6.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촉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7. 2018평창, 여성평화걷기

1. 남북여성교류의 지속적인 추진

1-1. 남북 민화합 연대 및 상봉대회

- 일시 및 장소 : 11월 3일(토)-11월 4일(일)(1박 2일)
- 내용 : 여성대표자 회의(북측 대표단 5명 참석)
- 참석 : 안김정애
- 평가 : 한 정부 이전 정부 하에서 단절되었던 남북여성교류가 공식적으로 10년 만에 재개되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남북여성교류가 정기적으로 계속 추진될 필요성이 있음을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남북여성이 함께 해야 할 여성인권의 문제, 젠더의식에 기반한 성평등한 한반도 평화협상 등 여러 의제를 다루기 위하여 장소와 시기 등 정례적인 만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2. 분단/정전체제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캠페인과 국제적인 연대활동 모색

2-1. 2018여성평화걷기

- 주제 : 4·27 판문점 선언 적극지지, 북·미정상회담 성공 기원
- 주최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전국여성연대, 문화세상이프토피아,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 어린이어깨동무, 너머서, 평화통일연대, 평화어머니회, 경기여성네트워크(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단체협의회,경기여성연대,경기여성자주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새로운100년을여는통일의병, 한국여성학자협의회, NCCK 여성위원회, 세계교회협의회(WCC), 한국장신대문제대책협의회, 올해광인성교육협동조합, 에큐메니칼 청년네트워크,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우리누리평화운동,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고양파주여성민우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천주교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민족화해센터, 한국여성사친가협회

1) 회의

(1) 1차 전체 기획회의

- 주제: 2018 여성평화걷기(5.24세계여성평화군축의날 기념 심포지엄 및 평화걷기)
- 일시와 장소 : 3월 28일(수), 한국 YWCA회관 203호
- 내용 : WPW조직위구성 및 진행 논의
- 비고 : 이하 전체 기획회의 날짜는 상이하나 회의 제목과 장소 동일함.
- 참석 : 안김정애, 안지영

(2) 2차 전체 기획회의

- 일시: 4월 10일(화)
- 내용 : WPW 2018 여성평화걷기 및 심포지엄 준비회의, 국제팀과 일정회의
- 참석 : 안김정애, 안지영

(3) 3차 전체 기획회의

- 일시 : 4월 26일(목)
- 내용 : 세부일정 계획
- 참석 : 안김정애, 안지영

(4) 4차 전체 기획회의

- 일시 : 5월 10일(목)
- 내용 : 광화문 출발행진 준비논의
- 참석 : 안김정애, 안지영

(5) 5차 전체 기획회의(최종)

- 일자 : 5월 18일(금)

- 내용 : 최종 정검과 기자회견 준비 및 선언문 작성
- 참석 : 안김정애, 안지영

(6) 외교부 평화외교 기획단장 만남 이충면/ 북정책협력과 이윤주 서기관 면담

- 일시와 장소 : 5월 28일(월), 외교부 청사
- 참석 : 국제 대표단, 안김정애
- 내용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만들기에 외교부 협력요청

(7) 2018 여성평화결기 평가회

- 일시 및 장소 : 6월 14일(목), 명동성당 지하 1층
- 참석 : 안김정애, 안지영

2) 홍보

(1) 추진위원 권고 당사 및 국회 방문

- 일시와 장소 : 5월 9일(수), 더불어민주당 당사, 정의당 당사, 국회
- 내용 : 2018 여성평화결기 행사 홍보와 추진위원 권고

(2) 보도자료 배포

- 일시 : 1차-5월 11일(금), 2차-5월 23일(수)

3) 2018 여성평화결기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5월 23일(수), 프란치스코 회관

4) 평화촛불

- 일시와 장소 : 5월 23일(수),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퍼포먼스 후 행진
- 표어 : NO WAR YES PEACE

5) 2018 국제여성평화 심포지엄

(1) 자료집

- 제작 일시 및 수량 : 5월 23일(수), 200부
- 내용 : 축사, 기조발제 및 발제자 원고와 이력 등

(2) 행사

- 일시와 장소 : 5월 24일 9:30-18:00,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

□ 심포지엄 본 행사

대회등록과 인사 (09:00-9:30)

1부 개회식 및 기조발제(9:30-10:30)

사회자: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9:30-10:00

개회 선언

2018 WCD 한국위원회 공동대표단
한영수(한국YWCA연합회 회장), 최순영(경기여성네트워크 대표)

축사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남윤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격려사

지은희 (정의기억재단 이사장, 전 여성부 장관)

영상 시청

Herstory

10:00-10:30

기조발제 1. '4.27 판문점선언' 이후 한반도 여성들이 만드는 평화
한반도와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제안
- 김정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기조발제 2. '새로운 평화와 페미니스트 미래로의 안내'
- Mairead Maguire (북아일랜드, 노벨평화상 수상자)

2부 폐널발제(10:30-12:20)

사회자: 한정숙 (서울대학교 교수)

10:30-12:20

발제 1. 최성희(강정국제팀장): 4·3, 강경 그리고 여성의 목소리
발제 2. Mary-Wynne Ashford(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Canada)

발제 3. 고은광순(평화아머니회 대표): 대안지파의 현황과 여성이 만드는 한반도 평화
발제 4. Rebecca Johnson(International Campaigns to Abolish Nuclear Weapons, UK)
: Climbing down from the Nuclear Monster - a Challenging Necessity for Peace and Security

발제 5. 김정수(평화여성회 한국여성평화연구원장): 여성이 만드는 동북아 평화
발제 6. Kozue Akibayashi(국제여성평화자유연맹 회장, Japan)
: Feminist must support Korean Peace Process for a Decolonized and Demilitarized Korean Peninsula

발제 7. Kin Chi Lau(Professor of Global University for Sustainability, Hongkong/China)
: The Korean Peace Treaty as a major step to reverse the arms race in North East Asia

중식 (12:30-14:00)

3부 라운드테이블(14:00-16:30)

14:00-16:30	1주제. 여성과 군사주의 사회: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 Kalama Nheu(Obama Kon-Nuclear Free and Independent Pacific, Hawaii/USA) : Korea Alliance for Justice - Cindy Wiesner(Grassroots Global Justice, USA) : Unresolved Korea War, Militarism in Asia and Pacific and Women's Resistance Roundtable - Lisa Natividad(Guahan Coalition for Peace and Justice, Guam/USA) : Message from Guahan-the Trip of Spear of US Military Might - Medea Benjamin(CODEPINK, USA): Women Say, "Disarm, Disarm"
	2주제. 여성과 인권, 평화만들기 사회: 박현선(이화여자대학교) - 김민문정(한국여성민주회 대표): #MeToo 운동의 함의 - Alice Nderitu(Centre for Humanitarian Dialogue, Kenya) - 장이정수(여성환경연대 대표): 한국의 예코 페미니즘 운동과 한반도 평화 - Mavic Cabrera-Balleza(Global Network of Women Peacebuilders, Philippines): Amplifying Women's Voices towards Sustainable Peace - Katherine Ronderos(LIMPAL COLOMBIA, Colombia) : Feminist Peacebuilding, What is Possible, What Can Be Done? - Yifat Susskind(MADRE Executive Director, USA/Israel) : To the Two Koreas from Israel and Palestine, Lessons Learned
	3주제. 여성이 만드는 동북아 평화 사회: 함희경(한국YWCA연합회 국제협력위원장) - 장미란(한국YWCA연합회 평화통일위원장) : 여성평화운동의 근본을 다시 생각한다 - '평화 감수성' 증진과 일상의 재구성 - Wang Xuan(Research Centre of Biological Warfare in WW II, China) : Japanese Bacteria Battle Investigation and Lawsuit - 이은선(세종대 명예교수) : 동북아 평화프로세스와 4.27판문점 선언 - 여성통합학문연구의 시각에서 - Altan Noogsoi(Blue Banner NGO, Mongolia) : The Role of Mongolian Nuclear Free Status in Peace Building in

	North East Asia - Olga Maltseva(Dialogue of Culture/FEFU, Russia) : Women's Soft Power in Preventive Diplomacy for the Preservation of Sustainable Peace - Patti Talbot(The United Church of Canada, Canada) : Faith and Fierce Patience, Seeking Peace in Korea - Ann Wright(Veterans for Peace, USA) : Women and Peace in North East Asia
	4부 라운드테이블 논의 내용 공유(16:30~17:00) 사회자: 함정숙 (서울대학교 교수)
16:30~17:00	라운드테이블 논의 내용 공유
	5부 폐회식(17:00~17:10) 사회자: 최인숙(문화세상이프토피아 대표)/한미미 (세계YWCA 부회장)
17:00~17:10	2018 국제여성평화결기 선언문 낭독 폐회식 평화의 울림 공연

6)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5월 25일(금) 10:00. 국회 정론관
- 내용 : 북미정상회담 정상개최와 한반도 대인지뢰 제거를 위한 국제여성평화결기 기자회견

7) 긴급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5월 25일(금) 11:30, 미국대사관 앞
- 내용 : 24일 저녁 트럼프가 조미정상회담 연기발표에 대응하여 조미정상회담 정상개최를 요구함

8) 2018 국제여성평화결기

- 일시 및 장소 : 5월 26일(토) 9:30~15:00
- 경로 : 통일대교 ~ 도라산 평화공원, 오주산 전망대
- 참석 : 김성은, 박남희, 안김정애, 안지영, 이덕경

9) 회계 및 정산

(1) 한국여성평등진흥원 최종평가 워크숍

- 일시와 장소: 11월 8일(목) 13:00-17:30, 양성평등진흥원 고양캠퍼스
- 참석 : 안지영, 안김정애

(2) 한국여성평등진흥원 정산완료

- 일시: 12월 4일-6일
- 내용: e나라도움 보안요청전 보완완료 및 정산완료. 지출결의서 원본 우편접수, 이자 잔액 반납완료
- 비고: 10,000,000원 이상 사업 2019년 1월 정보공시, 2018년 공모사업 선정단체 사례집 제작 등재

10) 평가

한반도 평화공존, 한반도를 생명 평화 상생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여성들의 노력이 돋보이는 행사였다.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공모사업 프로젝트 '2018 한반도 여성의 평화 그리고 안보 : 5·24여성평화걷기 등을 통한 여성평화안보 의식 제고'를 통해 진행되었다. 1997년부터 본회가 주축이 되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5.24 세계여성평화근축의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2015년 여성평화걷기 이후 2018년까지 계속된 여성평화걷기는 여성의 힘으로 한반도의 평화 가져오기, 생명·평화·상생의 여성주의적 패러다임 만들기 등 기존의 남성중심의 통일 패러다임, 군사적 '안보' 중심의 패러다임이 아닌 것으로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행사 한 달 전에 이루어진 '4·27판문점 선언'은 국내외 평화여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외세의 간섭 없이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 노력을 지지하는 국제평화여성들의 지지선언으로 이어졌으며, 국내에서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지향하는 시민들의 의식을 확대시키고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북해외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평화 이슈를 드러내고 여성의 참여와 대표성을 요구하고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성평화걷기가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제여성평화심포지엄의 경우, 시간과 공간의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국참가팀과의 조율이 부족하였다. 전체 제목 선정과 부문별 주제는 좋았으나 국외 참석자들의 발표는 참석자 위주로 짜여져 세션 주제가 산만하게 이루어졌다. 외국 발표자가 국내 발표자에 비해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국내 여성평화운동의 목소리와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느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초부터 시작된 한국여성운동의 하이라이트인 #미투운동을 소개할 수 있었고, 강정해군기지문제와 제주 4·3 70주년과 여성인권문제, 여성의 시각에서 본 대인지뢰문제 등을 소개할 수 있었다. 국내 여성발제자들은 한결 같이 여성인권이 기본에 깔린 성평등 없는 한반도 평화는 무의미함을 국내외에 천명하였다. 국제 여성들의 경우 본인이 속한 사회와 국가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즉 미군사기지 문제, 환경문제, 여성인권 문제, 청소년 교육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를 하여 여성들간의 문제인식 공유와 연대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여성평화걷기의 경우, 1000 여 명의 각계각층의 시민이 함께 참석하여 일반 시민들이 통일대교를 걸어서 건넌 최초의 역사를 기록하였고, 걸으면서 다양한 구호 제창이 있었다. 도라산 평화공원에서서는 국내외 참가들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4·27판문점 선언 지지와 6·12북미정상회담의 정상개최, '여성의 힘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외치며 평화춤과 합창, 커피민스, 여성평화선언문 낭독, 대동놀이 등을 통해 국내외 연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 행사를 끝내고 여성평화걷기조직위원회의 단체들은 '5.24 세계여성평화군축의날 기념'행사에 맞추어 반군사주의, 기지반대, 군축 등의 구체적인 실천과 국내연대를 이어가기 위해 '때미니즘과 군축' 공부를 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총 6회에 걸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7·27 정전협정 65주년 기념 여성평화선언문 발표 제안과 함께 2019년 3.1혁명 100주년 기념 남북여성 평화걷기와 5·24세계여성평화군축의날 기념 남북여성 실폘지엄 개최 등의 제안이 제시되기도 하여 계속적인 여성평화걷기 후속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본 행사에 참석한 WomenCrossDMZ, WILPF, Nobel Women's Initiative 등 국제여성평화단체들의 경우 2018년부터 2년간 Novo Foundation의 펀드를 받아 'Women-Led 2020 Korea Peace Treaty Campaign'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하여 국내외 여성 연합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장정의 길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3.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모니터링 계획수립 등 대응 모색활동(⇒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사업보고 참조)

4. 여성의 일상적 삶과 연결된 평화의제를 발굴한다.

1) 2018 평화활동가대회 in 백령도 돌봄에겐 NLL이 없다

(1) 행사

- 일시와 장소 : 10월 17일(수)-19일(금), 백령도
- 참석 : 안지영, 윤수경, 박남희, 박윤희, 안김정애

(2) 평가회의

- 일시와 장소 : 2018년 11월 28일 10시 30분, 참여연대 5층
- 참석 : 신미지, 황수영, 한광희, 안지영

- 내용 :

- ① 성과 : 장소 선정에 대한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았음
- ② 한계 : 섬이라는 특성(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통 방식을 조율했어야 했는데, 사전에 이 점을 간과하여 소통에 다소 문제가 발생함
- ③ 과제 : 평화활동가대회의 취지를 생각해 볼 때 대회의 느낌 보다는 평화기행 중심으로 구성됨. 참가자들 간 각자의 운동과 고민에 대해 충분히 교류하는 시간을 갖지 못함. 평소 잘 알고 있던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으로 나뉘져 그룹 간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음. 참가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참가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기행 프로그램은 대체로 만족하나, 그 외 프로그램은 내용이 나, 시간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었음.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길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활동가 대회 사전에 차별적 언어 사용 금지 등에 관한 공지가 필요했음

5. 한반도 군사기지와 반대활동

1) 미션·효순 추모행사

- 일시와 장소 : 6월 13일(수),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사건 장소
- 참석 : 안김정애

2) 제주 4·3 70주년 '평화의 길을 찾아서' 심포지움 및 평화기행

- 일시 : 6월 22일(금)~25일(월)
- 장소 : 제주대학교, 4·3사건 관련 및 학살지역, 강정해군기지 등 방문
- 참석 : 안김정애

3) 여수 MBC 지국 인터뷰

- 일시와 장소 : 7월 17일(화), 11:00 사무실
- 내용 : 여순사건 73주년 10월 방송 내용 인터뷰(주한미군의 개입과 영향)

6.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촉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1) 남북여성이 만들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위한 여성평화운동 세미나

- 주관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 후원 : 서울여성가족재단

■ 1차 세미나 (10/2(화) 오후 2시~5시)

1. 남북한 경제협력과 젠더-개성공단 이야기를 중심으로
(김진향 개성공단지구 이사장)
2. 한반도 신뢰구축과 평화구축(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 2차 세미나 (10/16(수) 오후 2시)

3. CEDAW 최종 권고를 통해 본 남북 여성의 해결 과제와 상호협력 전망
(조영숙 북한이탈여성지원과 면대 이사)

■ 3차 세미나 (10/24(수) 오후 3시)

4. 대북지원과 민간 교류의 환경변화 - '상상력(imagine)'이 필요한 시대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5. 변화된 북한사회와 북한여성(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원)

■ 4차 세미나 (10/30(화) 오후 2시)

6. 평화협정 사례와 여성의 역할(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7.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형성의 과제 발굴(김성수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 평가 : 급변하는 정세에 발맞추어 여성연합과 평화여성회의 활동방향을 재구상하는 차원에서 기획되었으며, 일한 구성의 세미나로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7. 2018 평화평창 여성평화걷기

- 주최: 민주평통 여성상임분과위원회,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 여성평화걷기조직위원회
- 기간: 2018년 1월 15일(월)~19일(금)
- 참석: 100여명

1) 답사 (창작: 안김정애)

① 1차 답사 :

2017년 12월 3일(일). 강원도 평창, 강릉, 속초, 고성 통일전망대 일대

② 2차 답사 :

2017년 12월 19일(화). 강원도 평창, 강릉, 속초, 금강산OP 등

③ 3차 답사 :

2017년 12월 28~29일(1박2일). 강원도 평창, 강릉, 속초, 고성, 통일전망대

④ 4차 답사 :

1월 14일(일). 평창, 속초, 고성

2) 준비 회의 (매주 1회 회의)

3) 본 행사

참석: 안김정애 (총진행) 안지영(실무) 이덕경, 조영희 (라운드테이블 진행),
김성운, 여혜숙, 오미영

날 짜	시 간	내 용	장 소
18년 1월 15일	16:00	등록 및 접수	강릉 숙소 : 강릉녹색도시 세션센터
	18:00	전야제 '세 여자와 평화' 북콘서트	
18년 1월 16일	09:30	평창 출정식 올림픽조직위→ 평창 관내길기→강릉길	평창, 강릉
	19:00	라운드 테이블1 '분단과 페미니즘' 소주제별 모듬토론	
18년 1월 17일	09:30	강릉 해안선현기념공원→오죽헌 →양양 정암리 해변길→속초 아바이 마을 - 적벽타기-고성숙소로 이동	강릉, 속초 숙소 : 고성국화연수원
	19:00	씨네 토크	
18년 1월 18일	10:00	고성 거진 해안도로 →고성 화진포(이승만, 김일성 별장)	속초, 고성
	19:00	라운드 테이블2 참가자별 발언과 질의	
18년 1월 19일	09:30	고성제진 잠문소→ 고성통일전망대(평화퍼포먼스)	고성
	14:00	해단식	

- 11) 2018 평화평창 여성평화걷기 평가회의
- 일시와 장소: 2월 8일, 민주평통 회의실
 - 참석 : 안김정애, 안지영

- 평가 : 여성평화결기와 민주평통 여성상임위 공동 주관으로 치러졌으나,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구호 변동과 행사축소 등이 발생하였다. 향후 공동사업에 있어서 기획, 의제설정, 실행 등 체계적인 사업진행이 요청된다.

【3】 정보·홍보 사업

〈2018년 사업 계획안〉

1.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관리, SNS 평화활동 등
2. 소식지 발행 및 온라인 소식지 발송
3. 메일을 통해 본 회 소식 전달

1. 온라인 소식지 발송

1) 1월호 (1월 13일)

내용: 캐나다 여성평화회의/ 한미군사후견 그만하고 평화합상 시작하라! 기자회견/ 여성 평화공동체프로젝트 '갈등해결과 통일교육의 만남'/2015한일합의 2년 외교부 2015 한일합의 검증 TF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

홍보: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22차 총회 홍보

2) 2월호 (2월 12일)

내용: 평화광창 여성평화결기/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제 22차 총회/ 세계평화대회

홍보: 네이버 밴드 개설 홍보

3) 3월호 (3월 14일)

내용: 남북 하기 단일당 평가전/ 맨스 미국 부통령 방한 반대 시민단체 기자회견/기자촌 할소심 판결 / 광창 민족화해한마당

홍보: 정경란 공동대표 사임과 김장아 갈등해결센터 소장 취임

4) 4월호 (4월 12일)

내용: 99주년 3.1절 기념 여성독립 선언서, 3.8 여성대회,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범시민생동(가칭) 출범 기자회견, #MeToo 이어말하기, 평화찾불

홍보: 5.24 여성평화결기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선정

5) 5월호 (5월 9일)

내용: 403인 광화문 퍼포먼스, GPPAC 국제평화회의,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영결 추모식, 판문점선언지지

홍보: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부설 갈등해결센터 2018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선정

6) 6월호 (6월 11일)

내용: 2018 여성평화결기 / 강남역 여성혐오살인사건 2주기

홍보: 갈등해결센터 서울시 2030청년세대들을 위한 평화통일교육 매뉴얼 개발 공모사업 수행

7) 7월호 (7월 12일)

내용: 제 2차 #Metoo 동일범죄·동일처벌 시위, 미선 효순 추모일, 제주 4·3 70주년 '평화의 길을 찾아서'

알림: 제 5회 727 한강하구 평화의배티무기,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

8) 8월호 (8월 2일)

내용: 7.27정전협정65주년기념 '한강하구 중립수역 뱃길열기 한반도 평화의 시작 : 한강하구 뱃길을 열어라, 제 5회 727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Metoo 동일범죄 동일처벌 3차 집회 해화역, 1차 페미니즘과 군축 공부모임

알림: 제 2차 페미니즘과 군축 공부모임 홍보

9) 9월호 (9월 6일)

내용: 2018제주생명평화대행진, 통일협약추진을 위한 전문가 정책 토론회, 안희정 1심 무죄판결 항의 집회, 제6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맞이 세계연대 집회 및 1348차 정기수요시위, 2차 페미니즘과 군축 공부모임, 늦봄학교 학생 4명 본회 방문

알림: [부설] 갈등해결센터 소식: 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평화통일교육매뉴얼 시연 청년참가자 모집, 제 3차 페미니즘과 군축 공부모임, 여성평화운동세미나

10) 10월호 (10월 2일)

내용: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진영대화, 제11회 동아시아 미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유엔사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3차 페미니즘과 군축 모임

알림: 제 4차 페미니즘과 군축 모임, 여성평화운동세미나

11) 11월호 (11월 7일)

내용: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 백령도 평화활동가대회, 국가의 가정폭력대응 강력규단 기자회견, 4차 페미니즘과 군축회의

12) 12월호 (12월 17일)

내용: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여성평화네트워크 워크샵, 'NGO's Role for Mine Clearance in the DMZ'(대인지뢰관련국제회의), 고등군사법원 성소수자 해국대위 성폭력사건 방청연대, 민화협 여성위 평화통일기행, 4차 무장갈등예방글로벌파트너쉽(GPPAC)동북아회의, 동북아시아 여성평화안보회의

2. 감사문자 발송

내용: 후원회원 감사문자 발송

일시: 5/31, 7/2, 7/30, 8/30, 10/1, 12/31

3. 네이버 밴드 개설

일시: 2월 8일

이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주소: <https://band.us/n/a3a7w90434kbE>

4. 평가

홈페이지 관리, SNS계정관리, 온라인 소식지와 공지메일 발송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새로 시작한 월말 감사문자 발송은 운영비 부족으로 중단되었다가 12월에 재개되었다. 네이버 밴드는 공지위주의 공간이어서 회원들의 호응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아쉽다. 그리고 2018년 한 해 여러 가지 이유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2019년에는 다시 시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회원 사업

<2018년 계획안>

1. 회원 간의 소통과 활동의 정보교류를 통해 회원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양성과 역량을 확대 강화한다.
2. '찾아가는 여성평화교실' 등 회원 참여 구조와 사업을 개발하고 실행.

1) 페미니즘과 군축 공부 모임

- 일시 : 7월 19일(목), 8월 16일(목), 9월 20일(목) 10월 25일(목), 저녁 6시
- 장소 : 종각 온
- 내용 :
 - 1차: 연 터크너의 [여성과 국제정치] 발제와 토론(발제: 안김정애)
 - 2차: '눈물의 땅 팔레스타인과 평화를 만드는 여성들'(발제 : 서진희)
 - 3차: 중동지역의 갈등분쟁 상황(발제: 오순애)

4차: '오키나와 역사와 여성평화운동'(발제: 최형숙) 2019년 1월 오키나와 평화 기행을 위해 5차시에도 오키나와 관련 공부를 이어가기로 하였음.

5차, 6차 : 오키나와 평화기행 참가자 준비 모임

- 평가 : 5.24여성평화걷기에 참여하였던 참가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총 6차에 걸친 공부 모임이 이루어졌는데, 본회 회원과 비회원 7-8명이 꾸준히 참여하여 국제정치질서에서의 여성배제 문제와 남성위주의 군사안보를 중시하는 현실주의 이론의 문제점, 페미니즘과의 관계, 여성주의적 국제관계이론 대안으로 서의 에코 페미니즘 제시,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중동지역의 분쟁과 여성의 평화운동 내용, 오키나와 현지 방문 준비 등으로 알차게 진행되었다. 초기에 기획했던 '찾아가는 여성평화교실'을 좀 더 구체화하고 앞으로 좀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유사한 주제로 공부모임을 이어나가는 2019년이 되도록 기획이 필요하다.

【5】연대 및 협력 사업

1. 국내 상설 연대

- 1-1. 한국여성단체연합 : 총회, 이사회, 사무국장 연석회의, 여성미래센터 운영위원회,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
- 1-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대의원 총회, 수요시위 주관
- 1-3.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 1-4.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대의원회, 여성위원회
- 1-5. 시민평화포럼

2. 국내 사안별 연대

- 2-1. 사드배치 반대 전국행동

3. 국제 연대

- 3-1. GPPAC(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 3-2. WomenCrossDMZ

1. 국내 상설 연대

1-1. 한국여성단체연합

1) 34회 3.8 여성대회

- 일시 및 장소: 3월 4일(일), 광화문
- 참석: 김성은, 김정수, 안김정애, 안지영, 이나영, 여해숙

2)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 일시 및 장소: 3월 22일(목), 광화문
- 내용: 퍼포먼스와 2018분 이어말하기
- 참석: 안김정애, 안지영

3) 한국여성단체연합 후원의 밤

- 일시 및 장소: 9월 10일(월), 세종홀
- 참석: 김정은, 안김정애

4) 국가의 가정폭력대응 강력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10월 29일(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한국여성연합 외 690여개의 여성단체
- 배경: 10월 22일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 아내(전처)살인
- 내용: "2009~2017년 동안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여성 824명이 살해됐고 최소 602명이 살해될 위험에 처했다.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등 경찰이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있지만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역시 사건의 본질을 알리려는 유족의 노력이 없었다면 '부부싸움' 정도로 세상에 알려졌을 것이다.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 엄중 처벌, 가정폭력 대응시스템의 전면적 쇄신을 요구한다."
- 참석: 안지영, 안김정애

5) 성소수자 해군대위 성폭력사건 군사법원 방청 연대

- 일시 및 장소: 11월 19일(월), 고등군사법원
- 참석: 안김정애

6) 여성단체연합 평화통일 TF 모임 참석

	일시와 장소	참석	내용
1차	5월 24일 여성미래센터 청산홀	김정수, 조영주	여성평화TF의 목적 사업방향, 실무위원회 상정 등
2차	6월 21일 여성미래센터 청산홀	김정수, 조영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속에서 여성연합과 TF의 역할, 남북여성교류를 위한 여성평화네트워크 발족 등 내용 공유
3차	10월 24일 여성미래센터 청산홀	안정애, 김정수, 조영주	남북여성이 새로 만들 평화와 번영의 여성평화운동세미나 결과,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운영, 조직, 결과와 향후 여성평화운동 의제와 사업 등
4차	11월 19일 고코빈스	조영주	2018 여성평화 TF활동평가, 2019년 사업방향 등 논의

1-2. 정의기억연대 (前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참석: 안김정애 대표)

- 1)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2018 제1차 이사회

- 일시 및 장소 : 7월 11일(수), 16:00, 정대협 회의실

- 내용 : 정대협에서 재단으로 전환 후 정기 이사회

2) 제6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맞이 세계연대집회(함께 평화!).

1348차 정대협 시위

- 일시 및 장소 : 8월 15일(수) 12:00,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

- 내용 : 현재 분쟁 중인 4개 지역 성폭력 피해여성 발언, 기림일 관련 영상 상영, 자
유발언, 성명서 낭독

1-3.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1) 회의 (참석: 안김정애 대표)

① 6.15 여성본부 회의

- 일시 및 장소: 3월 5일(월), 12월 13일(목) 14:00, 여성미래센터 1층 바오밥

② 6.15 여성본부 총준위

- 일시 및 장소: 3월 23일(금), 13:00, 여성미래센터

③ 6.15 여성본부 총회

- 일시 및 장소: 3월 23일(금), 14:00, 여성미래센터

④ 후원의 밤

- 일시 : 4월 12일(목), 19:00, 프레스센터 19층

⑤ 615 남측위 조찬모임

- 일시 및 장소 : 5월 8일(화) 8:00, 정동 달개비

- 회의 내용: 5월 23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해외 위원장단 회의참석에 관한 건

- 참석 : 안김정애

- 비고 : 5월 23일 회의 취소되었음

1-4. 민화협해협력병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

1) 20차 총회

- 일시 및 장소 : 3월 7일(수), 14:00, 백범 기념관

- 참석: 안김정애

2) 여성위원회 2018 1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3월 27일(화), 14:00-16:00, 민화협 대회의실

- 참석: 안김정애

3) 민화협 회원단체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10월 5일(금), 9:00- 정동 달개비

- 내용: 김진항 “2018평안남북정상회담 평가 및 남북협력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모색”
- 참석: 안김정애
- 4) 민화협 여성위 평화통일 기행
- 일시 및 장소 : 11월 27일(화), 08:00-18:00,
강화도 일대(통일전망대, 강화박물관 등)
- 참석 : 이덕경, 안김정애

1-5. 시민평화포럼

- 1) 통일협약시민추진위원회 의제협의 T/F 1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7월 25일(수), 12:00, 여의도 코리아연구원
 - 내용 : 통일협약시민추진위원회 의제 협의회 T/F 주관으로 의제 점검, 여성의회 보충 제안
- 2) 4개 권역별 사회적 대화 의제 선정을 위한 전문가 쟁점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8월 8일(수) 10:00, 송실대 창의관 605호
 - 주최 : 통일협약시민추진위
 - 내용 : 16개 의제 타당성 검토, 대표 의제 선정 토론
- 3) 한반도평화통일비전 마련을 위한 전국시민회의 대표단 준비모임 Workshop
 - 일시 및 장소: 9월 3일(월), 14:00, 흥사단 강당
 - 주최 : 통일협약시민추진위
 - 내용 : 통일국민협약 체결의 사회적 주제와 추진력 마련 목표
- 4)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회
 - 일시 및 장소: 9월 5일(수), 16:00, 참여연대 2층 회의실
 - 내용: 하반기 활동 계획, 평화활동가대회(10월 17-19일, 2박3일, 백령도) 등 논의, 주최단체로 참가예정.
 - 참석: 안김정애
- 5)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 - 4개 권역 속의 토론회(진영대화)
 - 일시 및 장소: 9월 11일(화), 9:30-17:00, 서울시 의회 서소문청사 2동 2층 대회의실
 - 내용: 평화 통일에 대한 진영(보수, 진보) 대화 토론회, 통일협약시민추진위원회 주최, 통일부 후원 사업.
 - 참석: 이덕경, 박인혜 (퍼실리테이터), 안김정애, 안지영(참가자)
- 6)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 마련을 위한 전국시민회의 제안자 2차 모임
 - 일시 및 장소: 9월 18일(화), 14:00-16:00, 흥사단 4층 회의실

- 내용: 통일협약 관련 회의
- 참석: 안김정애

7) 평화체제 이행기에 남북민 통합, 어떻게 이를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 10월 23일(화), 14:00, 참여연대 2층 홀
- 주최 : 남북시민통합연구회, 시민평화포럼
- 참석 : 안지영, 안김정애

1-6. 평가:

여연-총회, 이사회 등 주어진 역할을 소화했고, 정대협의 경우 정의기억연대로 명칭을 변경하는 과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이사 단체로서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웠다.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 여성본부의 경우 공동대표 단체로 참여하고 있으나 6·15남측위의 위상 및 역할 관련한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 재설정 등의 문제가 있어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연초 남북관계의 해빙무드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정세를 이유로 제대로 된 남북여성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본부의 독자적인 활동은 어려웠고, 2015년 12월 23일 개성에서의 '남북여성들의 모임' 이후로 6·15여성위원회 이름으로 된 교류는 없는 상태이며 현재 여성본부는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독자적인 남북여성모임이 마련되지 않는 한 6·15남측위의 보조적인 형태의 여성상봉 모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화협 여성위원회는 7월 이후 현재 위원장이 공식인 관계로 정기적인 회의가 부재한 상태이며, 민화협 또한 신임 상임대표 취임 후 전체적으로 조직불안과 변동 등의 이유로 조직정비와 회원단체와의 신뢰구축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의 시민평화포럼에 본회는 운영위원 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통일시민협약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여성의 대표성을 대변하고 있으며, 평화통일논의와 협상 과정에 여성이 남성과 대등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의견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

2. 국내 사안별 연대

2-1. 사드배치 반대 전국행동

1) 연명활동으로 지속적으로 연대함

2-2. 평가 : 성주, 김천 등 사드배치 현장에의 현지 방문 등 활발한 연대활동을 벌이지는 못 했으나 지속적으로 정보공유와 연명활동을 함으로써 한반도 군사기지와 반대 활동을 이어갔다. 앞으로 계속 추이를 살피면서 한반도에

서의 궁극적인 사드 철회를 위해 사드배치 반대 활동을 이어나갈 필요성이 있다.

3. 국제 연대

3-1. GPPAC

1) GPPAC Gender Experts Meeting

- 일시 및 장소: 4월 16일(월)-4월 19일(목), 네덜란드 헤이그
- 참석: 안김정애
- 내용: GPPAC 여성부문 회의, 각국 여성들의 여성운동 현황과 문제점, UNSCR 1325의 각국 국가행동계획의 현황과 실행 내용 등 공유, 본회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분위기와 평화평창여성평화걷기 소개.

2) GPPAC 동북아 회의

- 일시 및 장소: 12월 2일(일)-4일(화), 중국 북경
- 참석: 안김정애
- 내용: 대해 열리는 동북아 시민사회단체 평화회의로 북측 대표단과 함께 427 판문점선언 등 평화적인 협상무드로 전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 공유, 각국 대표단으로부터 한반도 평화 지지와 협조 등을 이끌어 냄. 본회에서는 성평등한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평화와 2018 미루운동 소개를 접목시켜 발표함.

3-2. WCD(WomenCrossDMZ)

1) 2018 여성평화걷기 관련 화상회의

- 일시 및 장소 : 3월 23일(금)
- 내용 : 524평화걷기 관련 프로그램과 참가자 논의

2)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워크숍

- 일시 및 장소: 11월 14일(수), 여성미래센터 5층 나눔방
- 내용 : Peace treaty2020 사업계획 구체화
- 참석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YWCA, 전국여성연대, 코디네이터 조영미

3) 동북아 여성평화안보 회의

- 일시 및 장소 : 12월 4일(화)-6일(목). 북경 주재 캐나다 대사관 등
- 참석 : 안김정애
- 내용 : 동북아 문제 관련 국가 여성단체 대표 30명 참석. 북측여성대표단도 참석하며 평화 프로세스에 왜 여성의 참여가 필요한지와 UNSCR1325 구체화와 실행 필요성, Peace Treaty 2020 프로젝트를 위한 전략 논의 등이 이루어짐.

4) 주한 캐나다 대사관 라운드 테이블

- 일시 및 장소 : 12월 7일(금). 캐나다 대사관
- 내용 : 동북아여성평화안보회의(북경회의) 결과 공유 및 한반도 평화문제(영국, 이태리, 미국 등 주한 외교사절 참석)
- 참석 : 안김정애, 정경란, 국제여성대표단

5) 민주당 여성국회의원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12월 7일(금). 국회의원 회관 제2간담회실
- 내용 : 동북아여성평화안보회의의 결과 공유 및 2019년 계획 논의
- 참석 : 안김정애, 국제여성대표단

6) 연천 DMZ 방문

- 일시 및 장소 : 12월 8일(토). 08:30- . 연천 군청, 열쇠전망대 등
- 내용 : 비무장지대 일대를 조망, 대인지뢰 피해자 연담과 연천군수 간담회 등
- 참석 : 김성은, 안김정애, 국제대표단

7)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회의

- 일시 및 장소 : 12월 13일(목). 15:30, 여성미래센터 1층
- 내용 : 북경회의 평가 및 2019년 계획 검토
- 참석 : 안김정애

3-3. 평가 : 연례 국제회의 개최의 GPPAC과 여성평화결기 및 여성이 주도하는 2020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캠페인 프로젝트 주요 단체인 WCD와의 지속적인 연대는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4. 기타

4-1.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 “나의 일상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 참석

- 일시 및 장소 : 6월 9일(토), 7월 7일(토), 12월 22일(토) 15:00, 혜화역 및 광화문 일대
- 참석 : 안지영, 안김정애

4-2.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인권과 국가책임

- 일시 및 장소: 11월 8일(목) 19:00, 천주교예수회센터
- 주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발표: 기지촌여성인권단체 '두레방' 평택심터 김태정 소장
- 내용: 국가의 책임을 밝기, 은폐해 왔던 역사와 현재 생존하는 기지촌 여성들의 생활상, 재판 과정 소개

4-5. 효순·미선 뱀문 출판기념회

- 주최: 효순·미선평화공원조성위원회
- 일시 및 장소: 12월 10일(월) 19:30, 서울 중구 문화살롱 기쁜
- 참석: 안지영, 안김정애

4-6. 대인지뢰 관련 국제심포자움

- 일시 및 장소: 11월 16일(금), 10:00, 연세대학교 도서관 감당
- 내용: NGO's Role for Mine Clearance in the DMZ
- 참석: 김성온, 안김정애

4-7. 민주당 여성국 당직자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11월 28일(수), 12:00, 여의도 올라
- 내용: 여성국 당직자들의 공부 모임 초청, '남북 평화공존 시대와 여성'
- 참석: 안김정애(발표)

4-8. 다시 촛불,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 집회

- 일시 및 장소: 12월 15일(토), 15:00, 여의도 국회 앞
- 참석: 안김정애

4-7. 기고 및 인터뷰

1) 민주평통 기관지 [통일 시대](2018년 4월호) 기고(제목: 생명·평화·상생의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한반도 평화를 만들자)

2) US Rutgers University, [Social Justice](Special Issue: Women and Peace Making, Vision, Actions and Challenges) 기고(제목: The DMZ Eco-Femi Farm Project in Korea)

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관지 [젠더 리뷰](2018년 여름호) 인터뷰(제목: 평화여성회와 한반도 평화)

【6】부설기구

1. 갈등해결센터

1) 역할: 평화·여성·통일의 가치와 의미를 살리는 갈등해결센터의 활동을 전개한다.

2) 구성: 센터장(김정아), 전문위원(이덕경, 여혜숙, 조영희)

3) 사업

(1) 목표 : 성인지적 갈등·분쟁해결교육과 훈련, 통일·평화교육과 갈등해결훈련 등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갈등해결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회원들과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평화공동체를 수립한다.

(2) 방향

- ① 안보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평화감수성 교육으로 전환을 모색한다.
- ② 분단과 여성의 현실을 반영한 갈등해결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③ 통일교육 전문강사 훈련, 여성평화활동가 퍼실리테이션 훈련을 위한 내용과 방법론을 개발한다.
- ④ 통일교육네트워크 활동(민화협)에 참여하여 통일교육, 평화교육 단체들과 교류하고 협력한다.

(3) 세부사업(안)

일 정	기간별 목표	내 용
2018. 3.	학습	여성·평화·통일 분야와 갈등해결 이론과 방법론 등 자료 등
2018. 6.	프로그램 구성	강사양성/ 학교교육 프로그램
2018. 9.	프로젝트 제안과 실행	통일교육협의회, 통일부(통일국민협약), 여성부 등에 제안
2018. 12	평가 및 향후 계획	

1. 조직

- 1) 역할 : 평화·여성·통일의 가치와 의미를 살리는 활동으로 전개하고자 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2030 청년세대 평화·통일 교육매뉴얼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함.

2) 구성

- 소장 : 김정아
- 부소장 : 이덕경
- 전문위원 : 조영희, 여혜숙

3) 사업

- ① 목표 :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갈등해결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회원들과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평화공동체 수립하고자 함.

② 사업결과

- '2030 청년세대를 위한 평화통일 교육 매뉴얼'을 개발하여 청년세대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평화적 갈등해결 역량 강화의 단초를 제시하였으며, 이의 결과로 서울시에서 '평화, 시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 표창장'을 받음.
- 기존의 갈등해결교육을 진행하고, 공론화의 진행자로 참여함.
- 민주평통 '여성 평화포럼' 활동 등 대외연대활동을 통해 통일/평화 단체들과 교류하고 협력하였으며, 교육매뉴얼 개발 과정에서 유관단체들과 평화통일 교육에 대해 교류하고 협력함.

2. '2018 서울시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재 매뉴얼 개발 프로젝트'

1) 교재개발 회의

① 1차 교재 개발 회의

- 일시 : 2018년 4월 8일(일)
- 장소 : 평화여성회 회의실
- 내용 : 평화교육 매뉴얼 교안, 전문가초청토론회와 청년세대 간담회 준비 등
- 참석 : 김정수, 김정아, 여혜숙, 이덕경, 정지은

② 2차 교재개발회의

- 일시 : 2018년 4월 28일(토)
- 장소 :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내용 : 평화교육 매뉴얼 개발 교안회의
- 참석 : 김정수, 김정아, 여혜숙, 이덕경

③ 3차 교재개발회의

- 일시 : 2018년 5월 19일(토)
- 장소 : 평화여성회 회의실

- 내용 : 평화통일 교안 주제 브레인스토밍 회의
- 참석 : 김정수, 여해숙, 이덕경

④ 4차 교재개발회의

- 일시 : 2018년 5월 27일(일)
- 장소 : 평화여성회 회의실
- 내용 : 기존의 갈등해결교육 분석, 통독과 북아일랜드 통일 도시 사례연구
- 참석 : 김정수, 이덕경, 김정아

⑤ 5차 교재개발회의

- 일시 : 2018년 6월 13일 (수)
- 장소 :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내용 : 참여형 평화통일교육 교재 매뉴얼 검토
- 참석 : 김정수, 여해숙, 이덕경, 조영희, 김정아

⑥ 6차 교재 개발 회의

- 일시: 2018년 7월 21일(토)
- 장소: 평화여성회 회의실
- 내용 : 평화교육 매뉴얼 개발 교안회의
- 참석: 김정수, 김정아, 여해숙, 이덕경

⑦ 7차 교재 매뉴얼 회의

- 일시: 2018년 8월 10일(토)
- 장소: 평화여성회 회의실
- 내용 : 평화교육 매뉴얼 개발 교안회의
- 참석: 김정수, 김정아, 여해숙, 이덕경

⑧ 8차 교재 매뉴얼 회의

- 일시: 2018년 8월 26일(일)
- 장소: 평화여성회 회의실
- 내용 : 평화교육 매뉴얼 개발 교안회의
- 참석: 김정수, 김정아, 여해숙, 이덕경

⑨ 9차 교재 매뉴얼 회의

- 일시: 2018년 9월 12일(일)
- 장소: 평화여성회 회의실
- 내용 : 평화교육 매뉴얼 개발 교안회의

- 참석: 김정수, 김정아, 여혜숙, 이덕경

③ 10차 교재 매뉴얼 시연 및 평가 회의

- 일시: 2018년 10월 3일(일) 오후
- 장소: 평화여성회 회의실
- 내용: 평화교육 매뉴얼 개발 교안회의
- 참석: 김정아, 박인혜, 여혜숙, 이덕경

2) 전문가 자문회의

① 박주화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 일시: 2018년 4월 24일(화)
- 장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주제: 2030세대 통일의식 변화와 통일교육방안 모색
- 내용: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에 대한 2030세대와 반응을 계기로 2030의 통일의식에 대해 연구, 통일에 대한 태도는 기성 세대의 당위와 필요성에 벗어나 있고, 사건으로서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어 통일에 대한 염려가 큰 세대, '과정으로서의 통일'로 통일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통일교육이 필요함.
- 참석: 교안 집필진

②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 일시: 2018년 6월 13일(일)
- 장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주제: 서울의 공공 기억공간, 평화통일 관점의 스토리텔링
- 내용: 기존의 안보교육에서 벗어난 평화통일의 관점 상징화 방안 모색
통일공간에 스토리텔링을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함.
세대별, 시대별로 맞춤 가상마켓 필요.
- 참석: 교안 집필진

3) 2030 청년세대 대상 활동

① 2030 청년세대 통일의식 의견 수렴

- 일시: 2018년 4월 28일(일)
- 참석: 2030세대 10명
- 추진: 서클 방식으로 이야기 나누기
- 내용: 통일교육을 받은 경험 나누기, 통일과 나의 연관성, 평화통일교육에서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와 방법, 북한에 대한 나의 느낌

② 2030 청년세대 교재 시연

- 일시 : 2018년 10월 3일(수)
- 참석 : 2030세대 10명
- 진행 : 박인혜, 이덕경
- 내용 : 의사소통형 교육 프로그램 시연

③ 2030 청년세대 교재 시연

- 일시 : 2018년 10월 6일(토)
- 참석 : 2030세대 5명
- 진행 : 김정아, 여혜숙
- 내용 :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시연

④ 2030 청년세대 교재 시연

- 일시 : 2018년 10월 15일(월)
- 참석 : 2030세대 10명
- 진행 : 이덕경, 여혜숙
- 내용 : 의사소통형 교육 프로그램 시연

4) 콘텐츠전문가 자문회의

① 1차 콘텐츠 검토 자문회의

- 일시 : 2018년 11월 5일
- 장소 :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회의실, 9명
- 내용 : 갈등해결과 체험학습, 평화통일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매뉴얼 초안으로 강의함. 참가자들 의견나누기와 의견서작성

② 2차 콘텐츠 검토 자문회의

- 일시 : 2018년 11월 16일
- 장소 :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회의실, 6명
- 내용 : 갈등해결과 체험학습, 평화통일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매뉴얼 초안으로 강의함. 참가자들 의견나누기와 의견서작성

5) 평화통일 유관단체 설명간담회

- 일시 : 2018년 11월 5일
- 장소 :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회의실, 9명
- 추진 : 체험학습단체와 갈등해결전문강사가 본 매뉴얼을 보고 강의를 함.
참석자들은 의견서 작성

'2030 청년세대를 위한 평화통일 교육 매뉴얼'

목 차

왜 청년 평화통일교육 매뉴얼인가?

매뉴얼 사용 방법

서울시 2030 청년들의 목소리

제1부. 참여형 의사소통형 매뉴얼

단원1. 평화와 폭력

활동1. 평화의 다양한 개념들

활동2. 평화와 통일의 관계

활동3. 분단 폭력 이해하기

단원2. 한반도 분단 구조 이해하기

활동1. 갈등나무로 분단 알아보기

활동2. 갈등지도 그리기

활동3. 스스로 만드는 분단과 평화의 연대표

단원3. 적대감 해소와 편견 극복

활동1. 북한(사람)에 대한 인식

활동2. 적대감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활동3. 적대감·편견 극복과 사회평화 만들기

단원4. 남북의 차이와 인정

활동1. 나와 다른 생각 인정하기

활동2. 남북 청소년 문화: 같음과 다름

활동3. 탈북자가 느끼는 한국사회의 포용성

단원5. 남북 청년들의 평화적 의사소통

활동1. 침묵으로 끝까지 듣기

활동2. 확인하고 공감하며 듣기

활동3. 요약하며 듣기

단원6.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 높이기

활동1. 통일과 나

활동2. 통일의 여정

활동3. 청년들이 만드는 평화공존의 약속

활동4. 내가 생각하는 평화통일은?

제2부. 체험형 매뉴얼

단원1. 용산의 전쟁기념관 이해하기

활동1. 전쟁기념관의 역사 알아보기

활동2. 전쟁기념관의 건립목적과 전시물 이해하기

단원2. 전쟁기념관의 6.25전쟁실 비판적 읽기

활동1. 6.25전쟁실 전시물 비판적 읽기

활동2. 6.25전쟁실 영상의 진실

단원3. 육의전시장 비판적 읽기

활동1. 육의 전시물 돌아보기

활동2. 육의 전시물 구성해보기

단원4. 평화공간으로 재구성하기

활동1. 전쟁기념관에서 배제된 내용 알기

활동2. 6.25전쟁관 관련된 전시물의 재구성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소개

부설 갈등해결센터 소개

매뉴얼 연구진 소개

3. 교육활동

면 번	지역	기관	대상	회 차	시 간	주제	인 원	진행자	일시
1	경기	안산경일초	도래초	1	2	도래초정소개	28	이덕경	5.23

			정반						
2	서울	영리고	전교생	1	1	화북직생활교육	300	이덕경	6.29
3	경남	창원Wee센터	도래 상담사	1	10	도래조정교육	40	이덕경 채지명	7.25 ~26
4	서울	평화종합사회 복지관	시니어	1	2	비록력의사소통	20	이덕경	7.31
5	강원	강원통일교육 센터	부모 자녀	1	2	세대가 어울린 평화통일교육	40	이덕경 여혜숙	8.13
6	서울	여성희망동행	통아리	1	2	자녀와 이웃사이 소통하기	20	이덕경	8.28
7	경기	덕은초	6학년	3	7	관계회복 서클	25	이덕경	12.6 12.11 12.17
8	경기	발곡초	4학년	1	2	신뢰 서클	100	이덕경 염근옥	12.26 12.28

4. 갈등해결센터 활동 평가

1) <2018 서울시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재 매뉴얼 > 개발 프로젝트 완수

① 내용적인 측면

-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안보교육, 전달식 교육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평화지향적 통일교육 차원에서 참여형, 체험형, 의사소통형 평화통일교육의 새로운 콘텐츠가 개발됨으로써 청년세대를 위한 새로운 통일교육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 전쟁의 상처와 고통, 갈등과 분쟁의 기억을 경험한 서울의 역사성을 평화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자원을 발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됨으로써 향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등 다양한 세대를 위한 교육콘텐츠로 확대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프로그램 시연과 청년층 의견 수렴 등에 참여한 서울시 청년들은 일상에서 평화통일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남북감동에 대해 민주적 소통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는 청년세대의 평화적 갈등해결역량과 의지를 기르는 단초를 제공했음.
- 프로그램 설명과정에서 어린이어깨동무,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등 평화통일 유관단체들과도 평화통일교육에 대해 교류함.

② 절차적 측면

- 프로젝트 전반적인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절차적 오류가 많았으나 참여자들의 노력으로 내용에 집중하여 교육매뉴얼을 제작, 프로젝트를 완수함.

- 교육매뉴얼은 향후 평화통일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될.
- 센터활동이 프로젝트 개발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매뉴얼 개발팀이 운영위 역할을 함께 진행함.

③ 교육매뉴얼 개발을 통해 서울시에서 <평화, 시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 표창장>을 평화여성회가 수여받음.

2) 외부 교육과 공론화 관련 분야

- ① 센터활동이 프로젝트 수행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외부활동에 대한 조직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학교와 사회의 갈등해결교육을 통한 일상평화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음.
- ② 사회 전반에 공론화를 통한 갈등해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조직적 참여와 지원이 부족하여 회원 개인활동으로 꾸준히 참여함.
- ③ 향후 그동안 개인적 활동으로 역량을 키워 온 회원들을 중심으로 조직의 내부 역량강화와 적극적인 외부 사업 참여가 필요함.

2. 한국여성평화연구원

<2018년 사업계획>

1.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관한 성평등 인식 확산 연구와 활동
2. 성인지적 통일국민협약 준비를 위한 연구와 활동 (갈등해결센터와 협력)
3. 타 연구기관과 실천의 협업 모색: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 소통, 치유, 통합의 가치로 사람과 사람, 사람을 통일한다.
 - 명상물로 북에 대한 인식, 역사적 트라우마 보여주기 등
4. 유연한보리결의 1325호 제2기 국가행동계획 민간자문위원 활동(원장)
5. 기타

1. 조직

- 1) 역할 : 여성평화통일운동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글로벌 인식을 국내적으로 확산하는 노력을 경주한다.

2) 구성: 원장(김정수), 연구위원(김정아, 조영희)

2. 연구원 활동

2-1.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관한 성평등 인식 확산 연구와 활동

1) <여성·평화·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매뉴얼 개발>

■ 여성가족부 1325 교육매뉴얼 개발연구

- 기간: 2018년 7월~12월 10일
- 연구자: 김정수 원장, 조영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덕경(갈등해결센터 부소장)
- 개발비: 1,000만원
- 주요내용:
 - ① 여성·평화·안보 교육매뉴얼 개발
 - ② 여성·평화·안보 역량향상 평가 지표 마련
 - ③ 여성·평화·안보 관련 해외사례연구
- 추진일정

연구 내용	7	8	9	10	11	12/10
기존연구검토 자료 수집	○	○				
1차 전문가 자문회의 중간보고			○			
매뉴얼 및 교수안 개발				○		
2차 전문가자문회의					○	
최종보고 연구보고서 작성 완료					○	○
추진진도(%)	20	40	60	80	90	100

- 자문회의

① 국가행동계획 민간위원 자문회의

국가행동계획 민간위원	성명	소속	자문회의 일시
1기/2기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신혜수 이사장	2018.9.19
1기/2기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제언대센터장	2018.9.20
2기	김귀옥	한성대 교양학부 교수	2018.10.9
2기	장미란	대한YWCA 평화통일위원장	2018.10.23
	안김정애	평화통일안드는여성회 상임대표	2018.10.24

②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자문회의

성명	직위	자문회의일시
김은희	강사양성부장	2018.11.21
송인자	양성평등교육부장	2018.11.21

③ 자문내용

- 1325 교육매뉴얼 구성과 내용에 대한 자문
- 매뉴얼 활용방안 및 양성평등교육원 교육과정 반영 방안 마련 등

□ 연구결과 목차

여성·평화·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매뉴얼 개발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II. 왜 여성·평화·안보인가?

1. 여성·평화·안보란 무엇인가?
2. 왜 여성·평화·안보가 중요한가?
3. '여성·평화·안보'와 전통적 '평화와 안보'
4. 여성과 갈등
5. 여성주의 평화와 안보
6. 한국의 역사적 경험에서 본 '여성·평화·안보'

III. UN 안보리결의 1325호란

1. UN 안보리결의 1325호 채택 배경
2. UN 안보리결의 1325호와 의미
3.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여성의 참여
4. '여성·평화·안보' UN 안보리 후속 결의안들

IV. UN 안보리결의 1325호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

1. 국가행동계획이란
2.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의 수립 배경과 과정
3.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의 내용

V. 해외 UN 안보리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사례

1. 필리핀
2. 미국
3. 아일랜드

VI.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호 안내 매뉴얼

1. 여성·평화·안보: What & Why?
2.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UNSCR 1325)란?
3.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이란?
4. 해외의 UNSCR 1325호 이행 성과는?
5. 매뉴얼 활용 사례

VII. 매뉴얼 활용 방안 및 교육평가

1. 매뉴얼 활용 방안
2. 교육 평가

■ 참고문헌 & 부록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영문/국문)
대한민국1기/2기 국가행동계획 (전문)

2)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2기) 민간자문단 활동

-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
- 활동내용
 - ① 2018. 5. 18(금). 정부종합청사 여성가족부 회의실
 - 2기 국가행동계획 성과지표 검토 및 확정에 관한 논의
 - ② 1325 국가행동계획 성과지표 서면자문 활동 등
 - ③ 10. 19.(금) 여가부 회의실
 - 여가부 CEDAW(여성차별철폐협약) 정부보고서 검토회의

3) ‘여성과 함께 하는 평화(Action with Women and Peace) 이니셔티브’ 자문위원회 활동

- 주무부처: 외교부 인권사회과
- 회의 및 워크숍 참석
 - ① 1차 자문위원회 (6월 17일, 외교부 회의실)
 - 자문위원 위촉, 자문위원회 운영 및 역할 논의
 - ② 2차 자문위원회 (9월 6일, 외교부 회의실)
 - 분쟁 하 성폭력 대응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및 전문가 심포지엄 준비
 - ④ 전문가 워크숍 (11월 5일, 그랜드힐튼호텔)
 -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 비전 및 발전 방향, 개발협력 사업 및 국제회의 추진 방안, 향후 자문위원회 운영 방안 논의 등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
- Action with Women and Peace 출범선언문 -
외교부(2018년 6월 19일)

1. 한국정부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있는 국가로서의 역할 강화”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고, 인권 보호·증진, 분쟁 예방 및 평화구축, 군축비확산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오늘날 지역분쟁의 확대와 심화는 세계 평화와 안보의 주요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은 분쟁의 가장 큰 피해자로서 다양한 방식의 인권 침해와 생존의 위협에 노출되어 왔다. 유엔은 2000년 역사적인 안보리 결의 1325(여성·평화·안보) 채택 이후 2007년 ‘분쟁하 성폭력에 대한 유엔 행동(UN Action Against Sexual Violence in Conflict)’ 채택 및 2009년 ‘분쟁하 성폭력에 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Secretary-General on Sexual Violence in Conflict)’ 임명 등을 통해 분쟁하 성폭력 문제를 여성·평화·안보 의제화하여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하여 왔다. 그리고 최근 유엔은 분쟁의 피해자인 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넘어 평화의 지속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국제 논의와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
3.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평화·안보 의제는 국제사회의 더 큰 지원과 행동을 요정하는 이슈로 남아있다.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한 여성과 특별한 역할을 인식하고, ‘여성·평화·안보’ 관련 국제논의와 행동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를 출범키로 결정하였다.
4.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는 우리정부의 안보리 결의 1325 이행의 큰 틀 속에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5(여성성평등) 및 16(평화·정의·강한 제도) 이행을 연계함으로써, 여성인권 증진 및 평화·안보·민주주의 확산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우리 다자외교의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다.
5.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여성·평화·안보의 중요 과제인 “분쟁하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주요 피해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인도적 지원 사업은 ‘분쟁하 성폭력에 대한 유엔 행동’의 목표와 연계하고, 전문성을 갖춘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진행하며, 우리정부의 개발협력사업 경험 및 분쟁하 성폭력 대응관련 경험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행한다.
 -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진전시키고 기여할 목적으로 국제회의(가칭 : 여성과 평화 서울포럼)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 이니셔티브 전 진행과정에서 여성·평화·안보 의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시민사회, 학계 등 민간인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의 협업을 통해 이니셔티브를 이행한다.
 - 이를 통해 여성인권, 분쟁하 성폭력 철폐, 분쟁예방 및 평화구축 분야 국내전문가들이 국제적 전문가로 성장하고 기여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여성·평화·안보 관련 개별 이니셔티브를 추진중인 국가(영국, EU, 캐나다 등)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이니셔티브 추진 성과 및 국제 동향을 바탕으로 이니셔티브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끝.

4) 제9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대통령 위촉) 활동

- 기간 : 2018.8.17 ~ 2년
- 주무부처 :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활동내용: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세부목표와 지표체계 개발 등 KSDG 16번(평화, 인권, 민주주의) 분야 위원 활동
- 회의 및 워크숍 참석
 - ① 1차 회의(9월 5일, 양재동 엘타워(투비홀))
 - 지속가능위원 위촉, 위원회 운영과 역할 등 논의
 - ② 2차 회의(11월 27일 양재동 엘타워)
 -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안)' 등 논의, 심의 및 의결

5) 관련 토론회 등 참석

① '평창포럼 for 여성평화 2018' 토론회

- 주제: '평화의 새 지평, 여성이 열다.'
- 일시 & 장소: 2018년 3월 23일,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
- 내용: 여성평화 역량강화를 위한 글로벌 트렌드와 국내적 과제
기사: <http://www.womennews.co.kr/news/141574>
- 주최: 강원도, 여성가족부
- 주관: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② 2018 노벨평화상 해설 강연회

- 일시 & 장소 : 2018. 11. 28, 경북대 인문대학
- 주제: '여성, 평화, 안보 왜 중요한가?'
- 주최: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2-2. 성인지적 관점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형성 활동

1) 2018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활동

※ 김정수 원장이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으로 위촉됨

① 1차 대통령 자문오찬

- 일시 & 장소: 5월 12일(목) 12:00, 청와대
- 제안 내용: 정상회담에 대한 의견 제안
 - 1) 영부인 상봉 정례화 - 한반도 여성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한반도 아동의 인권을 향상하는 공동의 프로그램 기획, 운영하길 제안
 - 2) 안보리결의 1325호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 민간자문단으로서 여성의 참여율을 제고할 것을 제안 - 평화협상 테이블에 여성 참여 확대를 통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야 할 것
 - 3) 청와대 안보실 통일비서관과 제2부속실에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여성

계 정책제안(평화여성화와 여성연합의 대선 정책제안 중심)

② 2차 대통령 자문오찬

- 일시 & 장소: 9월 13일(목) 12:00, 청와대
- 내용: 한반도 평화 과정에 시민사회, 여성 참여와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등

③ 통일부장관 2018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초청오찬 참석

- 일시 & 장소: 2018년 5월 18일(금), 플라자호텔 22층
- 내용: 4.27 남북정상회담 성과와 후속과제 진행관련 보고 및 자문단 의견청취

④ 2018 정상회담 관련 언론 인터뷰 활동

- 여성신문: 정상회담 전 여성평화의 관점에서 전망(2018년 4월 3일)
기사: [2018 남북 정상회담] “벽을 넘고 선을 넘어 ‘새로운 시작’으로 여성들이 함께 만드는 평화체제를 기대한다.”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141477&utm_source=dable

② 중앙일보 - 남북 퍼스트 레이디 만남에 대한 전망 (2017년 4월 26일)

기사: “이설주 내려오면 남북 퍼스트레이디 회동도 정례화될까?”

<http://news.joins.com/article/22572222>

① 여성신문 -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논평 (2018년 4월 27일)

기사: [판문점 선언] 여성·평화 전문가들 “비핵·평화 향한 위대한 첫 걸음”

<http://www.womennews.co.kr/news/141574>

2)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민간위원 활동

- 2018년 9월 4일 국무총리 위촉(2018.8.8-2019.8.7)

- 활동내용: 참고자료 참조

- 참고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① 구성 : 총 18인 이내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5조

- 위원장 : 통일부 장관

- 정부위원(12명) : 기획재정부 1차관, 외교부 1차관, 통일부 차관, 법무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보건복지부차관, 국토교통부 1차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국가정보원 2차장

- 민간위원(5명) : 김병언(서울대), 김용현(동국대), 김준형(한동대), 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교), 김정수(한국여성평화연구원)

② 역할 :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 * '89.4월, 제1차 교추협 회의 개최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협의·조정 및 기본원칙 수립

-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각종 허가·승인 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 조정
- 제14조에 따른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등의 공고에 관한 사항
-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
- 남북교류 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
- 관계부처 간의 협조가 필요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사항
- 그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여성정책연구원 정책연구자문

- ① 2018년 4월 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회의실
 - “평화변명의 한반도: 성주류화 접근”
 - (평화인보 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성주류화 분야 정책연구)

4) 관련 토론회 등 참석

- 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국제포럼 토론
 - 일시 & 장소: 2018.5.23. 오전 프레스센터 회의장
 - 내용: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토론
 - 주최: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한반도평화포럼

② ‘남북정상회담 이후 시민사회의 역할 국제회의’ 토론

- 일시: 2018년 5월 23일(수) 오후
- 장소: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주최: 우리민족서로돕기, 한반도평화포럼, 에버트재단
- 내용: 시민사회의 역할 토론 - 여성시민사회의 입장과 역할 제안 등

③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국제여성평화심포지움’ 발제

- 일시 & 장소: 2018년 5월 24일(목), 국회도서관 대회의실
- 발제: 여성들이 만드는 동북아 평화 (김정수 원장)
- 주최: 2018 여성평화걷기 추진위원회
- 주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④ 한반도평화포럼 한평아카데미 강의

- 일시 & 장소: 2018.6.7., 창작과 비평사 회의실
- 주제: 여성과 평화, UNSCR 1325와 한반도 여성평화운동
- 주최: 한반도평화포럼

⑤ 여성평화심포지움 기초발제

- 주제: 평화와 변명의 한반도, 여성의 힘으로

- 일시 & 장소: 2018. 6.18., 국회도서관 대회의실
- 발제: 평화변명의 한반도를 위한 여성의 역할 (김정수 원장)
-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국회의원 정춘숙,
남북여성교류를위한여성평화네트워크
- 후원: 여성가족부, 통일부, 국회의원 윤종필, 국회의원 조배숙

⑥ 글로벌젠더정책연구모임 월례발표

- 일시 & 장소: 2018.6.27.(수)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 주제: 새로운 평화의 시대, 지속가능한 남북여성교류 협력
- 발표: 새로운 남북관계와 성평등한 한반도: 여성운동의 과제 찾기
-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

⑦ 남북여성이 만들 새로운 평화와 변명의 시대를 위한 여성평화운동 세미나

-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후원: 서울여성가족재단
- 발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여성운동의 역할”
(김정수 원장)
- 일시와 장소: 2018년 10월 30일(화),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⑧ 민주평화당 여성위원회 정책토론회 토론

- 주제: 여성이 만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 일시 & 장소: 2018.11.8(목)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내용: “여성이 만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토론(김정수 원장)
- 주관: 민주평화당 전국여성위원회

⑨ 제2차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여성-엄마민중당 국회토론회

- 주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통일과 여성주의 통일의제
- 일시 & 장소: 2018년 12월 1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
- 주최: 김중훈국회의원실
- 주관: 여성-엄마민중당
- 발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통일과 여성의 역할”(김정수 원장)

5) 관련 기고 및 논문발표

① [젠더 리뷰(Gender Review)] 기고

- 발행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발행: 2018 여름
- 제목: 새로운 남북관계와 성평등한 한반도: 여성운동의 과제 찾기

② 2018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회의 논문발표

- 일시와 장소: 2018.10.12(금) 중소기업중앙회관
- 주제: 한반도 새로운 평화, 남북여성교류의 과제
- 주최: 북한연구학회

2-3. 평화통일교육 활동

1) 2018년 공공부문 통일교육 전문과정반 교육 참여

- 기간: 2018.8.27~9.4
- 주최: 통일부 통일교육원
- 내용: 공공부문 통일교육 전문강사 교육프로그램 & 강의 시연
- 결과: 통일교육원 공공부문 통일교육 강사과정 수료
향후 3,400여 공공기관 통일교육(의무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함

2) 2018 공감 평화통일교육 교원역량강화 직무연수 강의

- 일시: ① 2018. 10. 26, ②11. 2, ③11. 16.
- 주제: ① 평화교육의 이해, ②③ 한국의 평화통일교육, 왜 필요한가?
- 장소: 동양인재개발원(일산)
- 주최: 경기도교육연구원, 한반도 평화포럼

3) 통일교육협의회의 통일교육 활성화 학술대회 발제

- 일시 & 장소: 2018.11.6(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주제: 변화하는 한반도와 통일교육 길찾기: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 발제: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통일교육 재구성하기
- 주최: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평화여성회, 서울고대 통일평화시민교육연구소
- 후원: 국회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통일교육원

4) 2018 KINU 학술회의 '평화에 대한 세 가지 질문' 토론

- 주제: 평화교육과 통일교육,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 일시 & 장소: 2018년 12월 12일(수), 더플라자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
- 내용: "평화교육의 도전과 과제" 논문에 대한 토론 (김정수 원장)

5)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통일교육분과) 활동

- ① 통일교육분과 위원으로 위촉받음(기간: 2018.11.15~2019.11.14.)
- ② 정책자문회의(2018.12.11)
 - 통일교육원 업무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안) 논의

6)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으로 추천됨 (추천인: 이현숙 통일교육 중앙협의회 의장)

3. 연구원 활동 평가

1) 성과

- 1) 여가부 연구용역으로 '여성, 평화, 안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매뉴얼'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에 대한 공무원과 대중적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2)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1차례의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정세가 분단체제를 벗어나 평화로 전환되는 시기에 통일부, 여가부, 외교부 등 통일과 외교 영역의 자문단활동, 특별히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역할을 통해 성인지적 관점, 시민참여의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과정에서 여성과 시민참여와 이를 담보하는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었다.
- 3) 한반도 평화로의 전환에서 성인지적 관점, 성평등한 한반도에 대한 담론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여성평화운동의 비전과 전망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

2) 과제

연구원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한국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성인지적, 평화주의적 담론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과정에 절실하게 필요하다.

2018년 결산보고



(별지 참조)

임원 인선안



임원 인선 안

○ 근거:

- 정관 제4장 제19조(임원의 선출) 1항 “임원은 인선위원회와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정관 제4장 제19조(임원의 선출) 2항 “인선위원회는 이사 2인, 운영위원 5인 내외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 인선위원회 구성 : 이덕경, 이나영, 한정숙, 손희정, 감지호

○ 인선위원장 : 이덕경

○ 임원 선출 (안)

- 상임대표 안감정에 개인사유로 사임 ⇨ 김정수 선임(보궐)
- 부설 갈등해결센터 소장 개인사유로 김정아 사임 ⇨ 여혜숙 선임(보궐)
-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김정수 임기만료 ⇨ 김귀옥 선임

임원 인선(안)을 토대로 임원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임원 임기

구분	명 단	임기	비 고	인선(안)
이사회	김성은(이사장)	2018~2020(3년)		
	김귀옥	2017~2019		
	김정수	2017~2019		
	김지영	2018~2020		
	김정아	2018~2020		
	박현선	2017~2019		
	안김정애	2017~2019		
	여혜숙	2017~2019		
	이나영	2017~2019		
	조영희	2017~2019		
	한정숙	2017~2019		
상임대표	안김정애	2017~2019	사임	
공동대표				
감 사	윤수경	2018~2020		
	박윤희	2018~2020		
부설기구	소장 김정아	2018~2020	사임	
	원장 김정수	2016~2018	임기만료	

2019년 사업계획안

평화여성회 2019년 사업계획(안)

여성평화역량 강화로 한반도 평화과정에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자!!

2018년은 남북정상 사이에 이뤄진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 그리고 북미정상 사이의 싱가포르 선언을 통해 한반도 분단에서 평화로 전환되는 '평화의 원년'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2019년 올해는 한반도 평화변영과 통일을 향한 실질적 성과를 거둬으로써 한반도의 모든 주민들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향유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기대한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2019년 올해로 창립 22주년을 맞이한다. 이제 새롭게 전개되는 한반도 평화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이고 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평화여성회는 한반도 평화과정에 적용가능한 '여성.평화.안보' 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재개되는 남북여성교류와 협력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며, 여성평화활동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여성청년평화리더십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하고자 한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여성평화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1. 성인지적 관점의 지속가능한 한반도평화 만들기 사업

1) 성인지적 관점에서 통일,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 발표 및 관련 법, 제도, 정책 제안 활동을 전개한다.

2019년 한 해도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되는 바, 평화여성회는 정세와 현안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논평하고, 필요시 성명서 등 입장문을 발표하여 여성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성인지적 관점의 평화과정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한다.

- 성명서, 논평 발표 (SNS, 언론 활용 등)
- 통일, 외교, 안보 법, 제도, 정책 제안
- 통일, 외교, 안보 관련 시민사회 연대활동 참여

2) 성평등한 한반도 평화변영과 통일을 위한 남북여성교류와 협력사업을 전개한다.

평화여성회의 역사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재개되는 남북여성교류에서 의제 발굴과 전략 제시,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한다. 이를 통해 남북여성이 함께 만들어갈 성평등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수립해 나간다.

- 2019 새해맞이 공동행사 및 여성상봉 모임 참가
- 3.1절, 4.27, 6.15, 8.15, 10.4 남북공동행사 참가
- 남북여성교류 정례화 및 남북여성협력사업 제안 등

3) '여성, 평화, 안보' 담론형성과 안보리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의 관련 사업을 전개한다.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제2기 국가행동계획'의 이행과정에 여가부 1325 국가행동계획 민간자문단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1325 국가행동계획의 실효성 있는 이행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2018년 여성가족부 연구용역으로 개발한 '여성, 평화, 안보 교육매뉴얼'을 활용하여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위한 교육훈련을 통해 여성평화역량을 형성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 (여성가족부)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제2기 국가행동계획 민간자문단 활동
- '여성, 평화, 안보' 역량강화 교육과 훈련프로그램 진행

4) 성인지적 여성평화 담론 형성과 확산 활동을 전개한다.

여성평화 전문가 집단의 담론형성 활동을 통해 성인지적 관점의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 남성전문가들이 독점하고 있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국제관계에 대한 여성주의적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사업 참조

2.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만들기 사업

1) Korea Peace Treaty Now! Women Mobilizing to End War - 국제여성평화캠페인 연대 및 국내활동 참여 (기간: 2019-2020년, 2년 연속사업)

한반도 분단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활동한 국제여성평화운동 단체들의 Women Cross DMZ(2015), 여성평화결기(2016-8) 사업의 성과를 이어받아 미국정부를 향해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국제여성평화운동에 연대하고 참여함으로써 여성평화운동의 국제연대와 국내연대를 연결하는 촉진자 역할을 한다.

- Women-led Peace Treaty 국제연대활동
- Korea group 사업 진행 : 워크숍, 토론회, 심포지움
 - 주제: 평화과정과 여성의 참여, 군사주의와 여성, 평화협정과 여성의 삶
 - 한반도 평화협정 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모델 개발, 1325 교육 등
 - 대상: 시민단체, 여성단체 활동가, 젊은 여성 등

2)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행사

- 여성, 평화, 안보 의제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행사 진행

3) 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 동북아시아협의체 활동

- 제5차 회의 : 2019년 8월 울란바타르(몽골) 예정

3. 여성평화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한다.

갈등해결센터에서 2018년 개발한 '2030 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평화통일교육매뉴얼'을 활용하여 청년, 여성들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여 여성평화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프로그램
-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4. 조직역량 강화사업

1) 회원확대와 재정자립 기반 조성사업

본회의 활동에 지지하고 참여하는 회원들을 확대함으로써 재정자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회원네트워크 사업
- 회원 확대 사업 등

2) 회원참여사업

분단에서 평화로의 전환 시기에 회원들이 쉽게 참여하고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평화문화 확산사업을 전개한다.

- 평화기행
- 평화캠프 등

3) 평화여성회 홍보 강화 사업

평화여성회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 SNS 등 기반을 재정비하여 이를 활성화한다.

- 평화여성회 홈페이지 개편 등

4) 평화여성회 본회와 부설기구 제 규정 정비

5. 국내외 연대활동

1) 국내 상설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총회, 이사회, 사무국장연석회의, 여성미래센터 운영위원회,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 통일평화 T/F 모임 등
-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구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대의원총회, 수요시위 주관 등
-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대의원회, 여성위원회 등
- 시민평화포럼

2) 국내 사안별 연대

- 사드배치반대 전국행동
- 4.27 평화인간띠잇기 운동

3) 국제 연대

- GPPAC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 WomenCrossDMZ

□ 부설기관 사업 계획(안)

1. 갈등해결센터

○ 구성: 센터장 (여혜숙), 전문위원 (김정아, 이덕경, 조영희)

○ 사업방향과 목표

- 센터의 조직정비를 해 나가고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을 구성해 나간다.
-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의 평화·갈등해결 방법론을 공부하고 내용을 축적해 나간다.

○ 세부사업 (안)

- '서울시 2030 청년들을 위한 평화통일 교육 매뉴얼'을 바탕으로 대상별 평화통일 세부교안 작업을 해 나간다.
- 평화·통일·갈등해결 교육과 활동 확대를 위한 강사진을 구성한다.
- 평화통일 교육 홍보 사업 (교육청, 지역단체, 학교 등)
- 타 평화·교육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활동의 폭을 넓혀 나간다.

□ 부설기관 사업 계획(안)

2. 한국여성평화연구원

○ 구성 : 원장 김귀옥

○ 사업 목표

첫째, 2019년 한국여성평화연구원(여평연 줄임)의 재도약을 위한 준비와 활동

둘째, 2020년 여평연의 본격적 활동과 청년 평화 사업

셋째, 여성주의 관점에서 한반도, 아시아, 세계 평화와 통일 전망과 방법론 수립

넷째, 여성 세대별·계층별·직종별, 평화 감수성 형성과 평화적 방법론 연구 및 개발

○ 2019년 주요 사업

- 상반기 주력 사업--조직 정비와 여평연 자체 후원 체계 모색
- 여성평화 관련 저서 출간
- 학술행사...국내 1회 이상
- 다른 NGOs와의 연대 활동
- 여성 청소년 및 청년의 평화 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그런 목표의 활동 증진 방안 모색(지속 사업)
- 여성평화 프로젝트 수행
 - : 통일부 사업에서 여성주의 평화,통일 아젠다 설정 노력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의 연구 사업 모색
- 대학들의 평화 관련 연구기관들과 네트워크, 여성주의 평화 사업 개발 및 연대 활동

○ 예산

- 프로젝트 수행 및 자체 후원체계 수립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조직사업

1. 회의

1-1. 총회

1) 역할: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의 기본 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기타 주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2) 구성: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의 사업에 같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3) 내용: 2019년 사업계획 수립, 임원 선출 등

1-2. 이사회

1) 역할: 본회의 사업집행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위원회와 부설 기구의 설치, 정관의 변경 발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재산관리, 총회 부의 안건의 작성, 회원의 제명, 총회 위임 사항,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구성: 공동대표 및 이사로 구성한다.

- 이사장: 김성은

- 이사: 김귀옥, 김정수, 김정아, 김지영, 박현선, 만김정애, 여혜숙, 이나영, 조영희, 한정숙

1-3. 운영위원회

1) 역할: 본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한 주요사업과 기타 정관에 명시한 본회 목적사업과 관련한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2) 구성: 공동대표, 각 위원회와 부설기구의 장, 서기, 회계,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한다.

1-4. 사무국회의

1) 역할: 본회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안을 논의, 진행사업 점검 및 공유 등을 진행한다.

2) 구성: 공동대표, 실무집행 책임자, 실무활동가 등으로 구성한다.

3) 내용: 매주 월요일 오전 혹은 오후

2. 위원회

2-1. 정책위원회

- 1) 역할: 여성과 평화의 관점에서 평화·통일운동의 정책과제를 모색하고 조정한다.
- 2) 구성

2-2. 국제협력위원회

- 1) 역할: 여성과 평화의 관점에서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무장갈등예방글로벌파트너십(GPPAC)과 유연 안보리 결의 1325호 관련 국제연대를 진행한다.
- 2) 구성

2019년 예산(안)



(별지 참조)

부 록

- ☐ 평화여성회 정관
- ☐ 평화여성회 조직 현황
- ☐ 2019년 성명서 목록
- ☐ 회원가입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관

※ 2010년 1월 20일, 제14차 정기(제15차)총회 의결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① 본 단체는 사단법인 평화로만드는여성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평화여성회”라는 약칭을 사용한다.
- ② 본회의 영문표기는 Women Making Peace로 하고 약칭은 WMP로 한다.

제2조(위치)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여성의 힘을 모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주의 관점과 평화주의 관점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해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한다.

1. 평화통일사업
2. 평화교육
3. 통일교육
4. 평화통일연구
5. 국내외 연대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 ①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모두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의 사업에 같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사람으로 한다.
 2.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후원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 ①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 ③ 회원의 가입절차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

1. 본회 활동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총회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후원회원

1. 본회 활동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 ② 본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③ 회비를 납부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환급되지 않는다.

제10조(회원의 제명, 징계)

-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 의결권 제한, 제명 등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 ② 회원을 제명 등 징계할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회원의 제명 등 징계의 종류와 절차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총회

제11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12조(소집)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1.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하는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4.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
- ③ 임시총회의 소집 요구를 받으면 상임대표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상임대표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동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공동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상임대표의 총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다.

제13조(총회 개최 및 통지) 공동대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 ①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 ②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 ③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⑤ 사업의 기본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 ⑥ 기타 주요한 사항

제15조(총회의 의결)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의 변경, 본회(법인)의 합병 및 분할, 임원의 해임,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상임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③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6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7조(총회 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결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서기가 이에 기명날인한다.
- ② 총회 개최 후 총회 의사록 요지를 참석하지 않은 총회구성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공동대표 3인 내외 (상임대표포함)
- ② 이사 15인 이내 (공동대표 포함)
- ③ 감사 2인

제19조(임원의 선출)

- ① 임원은 인선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인선위원회는 이사 2인, 운영위원 5인 내외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 ③ 본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④ 그밖에 임원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 ⑤ 선임된 임원은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의 제한)

- ① 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이가 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위 ①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이로 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 ①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업무를 관장, 관할한다. 그 중 1인은 상임대표가 되고, 총회 의장이 된다. 상임대표 유고 또는 결위시 이사회에서 공동대표 중 직무대행의 순서를 정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을 의결하고,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 사업에 관한 사항을 통리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의 대표가 된다.
- ④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22조(임원의 임기)

- ① 공동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구성)

- ① 이사회는 본회의 사업집행에 관한 심의기구로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가 있다.
- ② 이사회는 공동대표와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한다.
- ③ 필요한 경우 후원이사를 둘 수 있고, 이사회 운영에 관한 별도규정을 둘 수 있다.

제24조(소집)

- ①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③ 임시이사회 소집 요구를 받으면 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중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이사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25조(개회 및 통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회 7일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메일을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전원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6조(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동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범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때

제28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위원회와 부설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 말의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0. 기타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감사)

- ① 본회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를 두고,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동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부설기구

제30조(부설기구)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제31조(부설기구의 장)

- ① 부설기구의 장은 본회의 당면직 이사로서 본회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부설기구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부설기구의 장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2조(부설기구의 구성 및 운영) 부설기구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재산의 관리)

- ①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재정수입)

- ①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 ②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 ③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37조(예산의 수립)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처) 본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40조(구성 등)

- ① 사무처에는 처장 1인과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둘 수 있고 사무처장은 공동대표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 ②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③ 실무자는 사무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④ 실무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9장 보칙

제41조(정관개정 및 개정)

1. 정관의 제정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2.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회의 결의에 따른 요구에 의하여 발의한다.
3. 발의된 정관 개정안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법인해산)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본회 해산시 잔여 재산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3조(결산) 공동대표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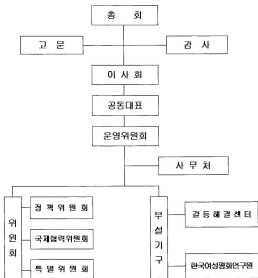
제44조(기타)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1997. 3. 28 제정
 1998. 2. 10 1차 개정
 1999. 3. 4 2차 개정
 2000. 1. 25 3차 개정
 2002. 1. 25 4차 개정
 2003. 1. 28 5차 개정
 2004. 1. 9 6차 개정
 2010. 1. 20 7차 개정

【 부 록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조직 현황



【 부록 】 2018년 성명서 목록

날 짜	제 목
1/11	[기자회견문] 평창-평화올림픽 실현, 남북 화해협력의 새로운 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1/30	[성명] 검찰은 젠더관점으로 진상조사하고 가해자 처벌하라 검찰 내 성폭력피해 진수조사 하고, 성차별적 조직문화 개혁하라
2/8	[기자회견문]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대화, 북미대화 재개로 이어져야 한다.
2/8	[성명] 더 이상 '성평등'에 대한 왜곡과 혐오를 용납해선 안 된다
2/8	<기자회견문>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높아지고 있는 민족의 화해 분위기에 미국이 찬물을 끼얹고 있다.
2/9	[성명] 검찰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복조치와 인권침해를 중단하라!
2/9	[성명] 군대 '청노예' 미군 위안부 제도의 국가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선고를 환영하며 국가는 진상규명과 제도적인 지원 정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2/9	[성명] 펜스 미 부통령은 평창올림픽을 반북전장으로 변질시키려는 반올림작 행태를 단장 멈추라.
2/21	[성명] 성범죄자 미운덕을 처벌하라! 문제는 성차별적 권력구조다
2/23	[성명] 문화체육관광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2/28	[성명] 정부는 필요성있는 대책마련을 통해 #MeToo 운동에 응답하라!

날 짜	제 목
3/5	[성명] 너희들의 시대는 끝났다
3/6	[성명서] 안희정 도지사는 법적 책임을 정확히 지라! 정치권은 성폭력을 용인하는 성차별적 구조 개혁하라!
3/13	[논평]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적극 지지한다.
3/14	[성명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안 관련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입장
3/20	[성명] 쟁점이 실종된 대통령 개헌안을 규탄한다
3/27	[성명서] 우리는 보호가 아닌 권리를 원한다
4/5	[성명서] 정당들은 6.13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미투의 외침에 응답하라
4/16	[최종견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8차 한국심의 최종견해
4/25	[성명서] 성평등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묵살한 국회를 규탄한다
4/26	[성명서]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처음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한다.
5/2	[논평]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환영한다
5/2	[성명서] 판문점 선언, 방위력 증강 계획 전면 재검토로 이어져야
5/3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중 여성 0명 여성 후보 공천 없이는 성차별·성폭력 사회 구조를 변혁할 수 없다

날 짜	제 목
5/16	[기자회견문] 판문점 선언 이행하는 한미연합 공군훈련 맥스원더 중단하라!
5/10	[논평] '페미니스트 대통령' 공약 지키는 남은 4년이 되어야 한다
5/14	[성명] 5.18 국가가 지행한 성폭력과 성고문. 철저하게 진상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라
5/24	[성명서] 낙태죄는 위헌이다
5/25	[논평]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북미회담이 신속히 개최되어야 한다.
6/8	[성명]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피해자 구제 및 재판 독립과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6/12	[성명] 여성할당제를 악용한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의회 비례대표 후보 부부 동반 공수 등록을 규탄한다
6/17	[논평]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 외면한 한국 유엔 총회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를 위한 결의안'에 기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책임 방지
6/15	[논평] 성평등한 지역 정치 실현이 시대적 과제이다
6/14	[의견서]은행권 채용성차별 근절대책에 대한 여성·노동계 및 청년 여성 당사자 의견: <은행권 채용성차 모범기준> 결정을 앞두고
7/5	[논평]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선출 시 여성할당제 폐기는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이다

날 짜	제 목
7/13	[논평] 정부는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변혁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 탁현민 행정관의 여성신문사 소송 1심 판결에 부처
7/17	[성명] 최초로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최영애 인권위원장 후보 내정을 환영하며 -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권과제와 인권위 혁신을 수행하기 바란다
7/17	[성명] 강정마을 총회 결정 무시한 채 강행,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만드는 해군의 국제 관함식 반대한다
7/19	[논평] 정부는 성평등 인사정책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 공직 내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고 다른 영역 균형인사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7/27	7·27 한반도 통전을 위한 여성평화선언문
8/6	[기자회견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으로부터 시작하라!
8/10	[기자회견문] 경악 경찰 편파수사
8/14	[성명] 사법정의를 족었다 -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선고를 규탄하며
9/6	[논평] '저출산' 문제의 해법은 성차별 해소다
9/20	[논평] 한반도를 핵위협 없는 항구적인 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평양공동선언을 환영한다
10/11	[성명]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라
11/21	[논평]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환영한다
11/21	[성명] 이것은 지위를 악용한 명백한 성폭력이자, 성소수자 혐오범죄다 - 해군간부 2명에 의한 성폭력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규탄하며

날 짜	제 목
11/29	[생명] 미루밧안 발의안만 쏟아내고, 처리는 나 몰라라? 임기 내내 직무유기, 국회를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평창-평화올림픽 실현, 남북 화해협력의 새로운 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풍광 얼어붙은 한반도에 마침내 대화와 교류, 협력의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9일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평창올림픽에 북측의 고위급 대표단 및 선수단, 그리고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등 대규모 사절단이 방문하는 것은 물론, 군사적 긴장완화 및 군사회담 개최, 각계각층의 교류, 다양한 당국회담의 추진도 합의하였습니다.

남과 북은 수년간의 단절 끝에 만난 첫 회담에서 남북화해와 협력, 한반도 평화를 열망하는 온 겨레, 전 세계 앞에 큰 성과를 내보였습니다. 어렵게 맺은 이 합의를 충실히 실천해 가면서, 남북 화해협력의 큰 모모를 뜨고 새로운 전환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세계인의 대 제전인 평창올림픽이 명실상부한 평화올림픽으로, 또 통일올림픽으로 성대히 실현될 수 있도록 6.15남측위원회도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6.15남측위원회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2017년 강릉 아이스하키선수권대회, 무주 세계태권도대회 등 북측의 선수단, 시범단들이 남녘을 방문할 때 마다 각계와 공동응원단을 구성하여 환영과 응원의 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에 대표단,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과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등 대규모 방문단이 함께 찾아오는 만큼, 모든 지역, 각계각층의 참가 아래 그 어느 때 보다 규모 있는 남북공동응원단을 구성하고, 각종 환영과 응원사업을 통해 올림픽 전 기간 동안 북측 방문단을 뜨거운 동포애로 맞이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 곳곳, 특히 올림픽이 열리는 강릉, 평창 지역에 환영현수막과 단말기(한반도기)를 대규모로 게시하여 한반도 전역이 화해와 평화의 물결로 뒤덮이도록 할 것입니다.

평창평화올림픽의 실현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일이지만, 거기에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평화올림픽이 남북 화해협력, 한반도 평화의 자양분이 되어 그 이후에도 화해와 평화의 노력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 각계각층의 교류 활성화를 합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 군사분계선 일대에 다시 설치한 선전수단 철거는 물론, 올림픽 이후로도 한반도 일대에서 대규모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계의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는 것이야말로 상호 신뢰와 평화를 향한 다짐들이라는 점에서, 6.15남측위원회는 남북고위급회담의 합의에 기초하여 6.15인족공동위원회 남북해악위원장회의를 비롯하여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 학술, 언론 등 각계각층의 교류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 최근 10여년간 함께 하지 못했던 6.15, 8.15민족공동행사들을 비롯한 각계의 상봉을 반드시 성사해 나갈 것입니다. 다양한 만남과 교류를 성사하여 화해와 평화의 기운을 전파시키려는 민간의 노력이 성과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남북 양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철도 및 도로 연결, 각계층 만남 등 남북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전면화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외부의 개입과 간섭이 있더라도, 한반도 당사자로서, 그리고 통일문제의 주인으로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여러 어려움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새로이 시작된 남북관계 개선의 여세를 이어 나가 2018년 새로운 전환을 함께 만들어 냅시다.

2018년 1월 11일
6.15공동성언실천 남북위원회

[성명]

검찰은 쟁더관점으로 진상조사하고 가해자 처벌하라 검찰 내 성폭력피해 진수조사 하고, 성차별적 조직문화 개혁하라

2018년 1월 29일 경남 통영지청의 서 모 검사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8년 전 법무부 장관을 수행한 법무부 간부로부터 당한 성추행 피해를 폭로해 충격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 모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추행 사건 이후 본인이 당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를 올리는 등 자신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성폭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야 할 검찰 내부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도 모자라 그것을 문제제기한 피해자에게 인사불이익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방송에 출연했다는 서 모 검사는 본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성폭력, 성희롱 사건들이 발생했으며, 그것이 은폐되었고, 피해자를 ‘꽃병’으로 모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목격했다고도 폭로했다. 서 모 검사는 8년 전 피해 현장에 수많은 목격자가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으며, 당시 조직 내부에서 이 사건이 논의된 바 있으나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변에서도 사건 공개를 말렸으며, 검찰 조직 보위를 위해 침묵했던 피해자에게 돌아온 것은 정황상 의심되는 ‘인사상 불이익’ 뿐이었다. 성차별적이고 권위적인 검찰 조직 문화 속에서 8년 만에 어렵게 용기내어 사건을 공개한 서 모 검사에게 격려와 지지를 보낸다.

성폭력, 성추행 행위를 공정하게 조사하고 처벌하는 곳이 검찰 아닌가. 검찰에서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고 은폐했다면 그동안 수많은 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조사와 판단을 국민들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그간 여성들의 피눈물로 이뤄낸 제도적 성과인 성희롱예방교육이나 성평등교육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검찰은 즉각 쟁더관점을 가진 사람들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철저히 사건을 조사하여 가해자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서 모 검사의 진술 뿐 아니라 검찰 내·외부 정언에 의하면 검찰 내부에서 문제제기되었거나 알려진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사건이 상당한 바, 알 못하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해 이들에 대한 진수조사를 실시해 검찰 내부의 성폭력 가해자, 책임자에 대한 일벌백제가 이뤄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성차별적인 조직문화와 불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지하철공사, 경찰청 등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인 재발 방지와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정부와 기관들의 대책 마련을 주시할 것이며, 성폭력 근절을 위해 행동할 것이다.

2018년 1월 30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울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켄터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현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래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대화, 북미대화 재개로 이어져야 한다.

평창 올림픽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에 그 어느 때보다 '평화'의 가치를 확인시켜 줄 평창 올림픽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한미 군사훈련의 일시적 중단으로 당장의 군사적 위기는 완화되었다. 하지만 평창 이후 한반도 위기를 다시 우려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매우 절박한 일이다. 올림픽 휴전이 가져다준 남북 대화의 틀을 더 확대하고, 반드시 북미 대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다.

평창을 방문하는 북한과 미국의 대표단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북한에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미국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평창을 찾는다. 그러나 호전적인 인사를 주고받으며 군사적 대결과 위협 수준을 높여 왔던 북미가 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펜스 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대화를 믿는다고 말했다"고 언급하더라도,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언론로 대화 분위기를 경색시키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미국 일각에서 제한적인 대북 선택타격을 의미하는 '코피작전(Bloody Nose Strike)'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사실상 북한에 대한 무력공격 가능성을 비치고, 대화 재개 자체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고 평창올림픽을 평화의 재전으로 만들려는 한국민들과 한국 정부의 노력을 존중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우리는 북미 양측 모두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기대한다. 한국 정부 역시 북미 대화를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이번 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의 첫걸음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에 평창 올림픽으로 조성된 해빙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빙하기로 돌아설지 여부가 판가름되는 중대한 기로에서 한국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끌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에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더이상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를 만고 살아갈 수 없다. 다시 한번 북한과 미국이 조건 없는 대화에 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2월 8일

고암통일나무, 남북경제협력포럼, 녹색연합, 대전평화여성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통일ایت, 평화3000, 평화네트워크, 평화플랜드는여성회, 평화통일대구 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여성단체연합, 휴스단민족통일운동본부

[성평]

더 이상 '성평등'에 대한 왜곡과 혐오를 용납해선 안 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 정한백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은 한국기독교연합(이하 한기연)을 방문해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영어 'gender equality'를 단순 번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한기연도 정 장관의 설명을 듣고 여가부 입장을 이해했으며, 한국교회는 통성에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최근 극우기독교세력은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라고 외치며, 한국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 가치이자 이를 표현하는 '성평등' 용어를 가로막고 있다. 여성가족부에게 묻는다. 성평등은 동성애를 의미하는 용어인가? 성평등은 해명되어야 할 용어인가? 성별이분법과 이로 인한 위계 질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여성억압과 여성차별의 핵심원인이다. 성평등을 주장하지 못한다면 성차별을 해결할 수 없다.

성평등을 반대하며 외치는 양성평등은 어떠한가. 경상남도는 2015년 기존 여성주관을 양성평등주간으로 바꾼 뒤 '여성'을 언급하는 것이 양성평등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양성평등이 이퀄리즘(Equalism)으로, 이퀄리즘이 여성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활용되는 사례는 이렇듯 도처에 도사린다. 이는 남성들의 '역차별' 주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동하면서 여성정책에 대한 반격(backlash)을 증폭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도 가속화하고 있다. 일부 혐오세력의 조직적 행동은 촛불혁명 이후 약해진 보수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부단한 정치적 의도일 뿐이며, 이는 성차별 종식과 성평등 실현을 후퇴시킬 뿐이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더 큰 문제는 극우기독교세력의 성평등 반대운동이 아니라 정치인, 정당, 국회 등이 이들 집단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는 극우기독교세력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 어떠한 반대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일부 혐오세력의 성평등 왜곡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가족부의 이번 방문은 사실상 극우기독교세력의 공개적인 혐오와 차별에 선을 긋기보다 그 차별과 혐오를 공인한 바와 다름없다. 여성가족부가 '해명'하는 자의 위치를 자처한 것은 성평등 실현을 염원하는 수많은 시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주었다.

여성가족부는 더 이상 혐오세력에 대한 눈치보기를 멈추고 흔들림 없이 성평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 부처의 수장으로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한낱 위배적인 어떤 행동도 용인해서는 안 된다.

성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성평등이라 부를 수는 없다.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없이는 성평등도 없다.

2018년 2월 8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인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피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성명]

경찰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복조치와 인권침해를 중단하라

지난 1월 29일, 서지현 검사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자신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세상에 알렸지만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2월 7일 MBC 보도에 따르면, 통영지청은 당사자와의 상의 없이 병가중인 서검사의 사무실을 세웠다. 통영지청은 서검사와 소통을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했지만, 서검사 측은 질을 뺐다는 통보를 받았을 뿐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는 피해자를 위축시키기 위한 명백한 보복이자 물이막초치다.

뿐만 아니라 서검사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검찰 내부는 물론 언론 및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검찰 내 일부에서는 “인사에 불만을 품고 뒤늦게 나선 것”, “왜 이제 와서 그라냐”, “문제제기 방식이 잘못 되었다” 등 오히려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 한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검사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피해자의 성격을 문제 삼거나 외모를 조롱하는 글도 올리고 있다. 더구나 가해자인 안태근 검사를 두둔하는 세력도 있다고 한다. 서검사 측도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토로하는 상황이다.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 확산과 외모조롱 및 비난은 2차 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다. 언론의 과도한 피해자 드러내기와 일부의 피해자 조롱은 어렵게 용기 낸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고 묵인하고 방조한 세력은 누구였는가. 아들을 살상이 찾아내고 계속되는 2차 피해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더 이상 이런 행태를 두고 봐선 안 된다.

검찰 내 성폭력 사건과 2차 피해에 대한 대검찰청의 책임 역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기관장의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성추행 가해자와 이를 방조한 사람들은 물론 인사불이익 및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검찰총장은 더 이상 검찰 내에서 성폭력·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사건 해결에 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여성당회는 검찰 내 성폭력, 성차별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를 주시할 것이다.

2018년 2월 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외친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성명서

**군대 '성노예' 미군 위안부 제도의 국가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선고를 환영하며
국가는 진상규명과 제도적인 지원 정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2014년 6월 25일 오랫동안 기지촌에서 국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였던 원고들이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년 1월 20일 1심 선고 판결 결과 "정부는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제정·시행된 1977년 8. 19.까지는 성병 환자를 격리수용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므로 기지촌 위안부들을 낙감자 수용소 등에 격리수용하여 치료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라고 판시하고 원고 120명 중 57명에게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고 2017년 3월 16일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2018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 선고 판결이 있었습니다.

선고 판결에서 재판부는 "1961. 11. 9.자로 제정·시행하였던 구 윤락행위방지법 제4조 '누구라도 윤락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윤락행위를 전면적으로 불법화하였고 1962. 5. 14.자로 우리나라에서 발효되었던 인신매매금지협약이 체결국에게 성매매 장소 등의 제공자 처벌 및 성매매 종사자에 관한 특별등록 등의 법령을 폐지할 의무를 부과하였음에도, 피고가 기지촌을 비롯한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 내에서는 이러한 성매매를 사실상 허용한 뒤 특수지역으로 분류·관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기지촌 운영·관리에 있어 적극적으로 외국군 상대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함으로써 원고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 나아가 성으로 표상되는 원고들의 인격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어느 누구도, 특히 국가는 한 인간의 인격이나 인간적 존엄성에 관한 본질을 침해하고 이를 수단으로 삼아 국가적 목적의 달성을 꾀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위자료 산정 시, 주둔 외국군의 사기를 진작·향상하고 의화를 획득한다는 의도 아래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함으로써 기지촌 위안부였던 원고들이 그들의 인격인 인격권, 넓게는 인간적 존엄성 침해와 별다른 법령의 근거나 의료전문가의 진단도 없이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 수용되어 무차별적 처방에 따른 부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실이 원고 모두에 공통된 손해에 해당되어 117명 원고 전원에게 손해 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1977년 8월 19일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정·시행 전과 성병에 걸린 미군이 자신과 성매매를 한 여성을 치료하는 간택 및 성병검진 단속인 도발에 의해 낙감자 수용소에서 격리 수용치료 받았던 원고 74명의 경우 격리 수용할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700만원의 손해액을 산정하였고 그 외 34명의 원고는 300만원으로 손해액을 달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1977년 8월 19일 이후에도 정부가 미군 위안부들에게 자행하였던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시기를 떠나 원고 모두 동일한 국가 성폭력 피해를 경

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재판부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지에 대해서는 원고들 진술만으로 공무원들이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사유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들은 사회적 지위 상, 국가공무원을 특정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므로 공무원이 포주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하고 심지어 포주와 유착되어 미군 위안부들의 착취 구조에 가담하기도 했던 사실을 폭격했음에도 위법 공무원을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항소심 선고 판결에 대해 원재도 기지촌이 존재하고 기지촌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들의 피해시기인 1957년부터 1990년대까지 국가 군 위안부 피해자로 인정된 사실을 매우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항소심 판결 결과로 증명된 미군 위안부 국가 성폭력에 대해 정부는 하루빨리 인정하고 미군 위안부들에게 공식적 사과와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에 앞장서주길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지역에 주한미군이 평화 유지군으로 주둔해 있고 특히 평택지역의 경우, 미군 기지가 학대집에 따라 여전히 기지촌이 존재되는 상황에서 여성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고 성매매 피해가 근절되도록 재발방지를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원고들은 대부분 고령으로서 장기간의 미군 위안부 피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원고들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많은 미군 위안부들이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선고 판결의 엄중함을 느끼고 사회적 진상규명, 배상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력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의 성폭력, 특히 강간과 다른 형태의 성 착취 및 무력분쟁 상황에서 벌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에서 여성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호의 국가행동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4년 동안 국가를 상대로 잃어버린 인권을 찾기 위해 당당하게 맞서 승리한 원고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8년 2월 9일

기지촌 여성인권연대, 새움터, 한국여성단체연합

<기자회견문>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높아지고 있는 민족의 화해 분위기에 미국이 찬물을 끼얹고 있다.

우리 정부의 초청을 받아 올림픽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하는 미 부통령 펜스는 최근, "올림픽에 와서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알리겠다"느니, "올림픽이 북한의 선전장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느니 하며, 서울에서 탈북자들과의 면담을 잡는 등 올림픽의 근본적 취지를 훼손하고, 올림픽을 계기로 높아지고 있는 민족 화해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우리 국민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일본 총리 아베는 오지 않겠다던 입장을 바꿔 참석을 결정하며, 우리 정부에 위안부 야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과 함께 올림픽이 가져온 평화의 흐름을 끊고, 다시금 대결과 압박으로 돌아가기 위해 평창에 오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이들은, 올림픽에 초청된 손님에 갖춰야 할 예의와 상식에서 벗어나, "잔치상에 재뿌리려 온다"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연동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식이라면, 두 사람은 오지 않는 게 나을 것이다.

올림픽에 초청을 받았으면,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축하하려 와야 하며, 여러 참여 한 사안들에 대한 언급은 삼가야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는가!

이들은 또 방한 뒤 한미, 한일, 또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올림픽 뒤 재개하고,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기 위한 합의를 하려 시도하고 있다. 모처럼 찾아온 평화와 대화 흐름을 깨고, 대결과 전쟁의 흐름으로 돌아가 우리 민족을 항시적 긴장 상태로 다시 몰아넣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 패권국이자 최대 핵보유국, 대량살상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군국주의의 길로 매진해 나가는 일본이 벌이고 있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이중기준에 근거한 대북 압박과 한반도 긴장 조성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펜스와 아베는 올림픽과 이를 계기로 한 우리 민족의 화해 흐름을 방해하지 말며, 핵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8일

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면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인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학살현가촉운동

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화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 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공장 인종당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 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 충북진보연대(준) 전북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울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준) 새물약사회 민족문제연구소 사월혁명회 통일의 길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아머니회 615학술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빈민해방실천연대 주권자전국회의 통일문제연구소 노동자연대 평화협정행동연대(준)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 새로하나 민중민주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빈민해방실천연대 주권자전국회의 통일문제연구소 노동자연대 평화협정행동연대(준)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 새로하나 민중민주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성명서>

**켄스 미 부통령은 평창올림픽을 반복선전장으로
변질시키려는 반올림픽적 행태를 당장 멈추라.**

마이크 켄스 미국 부통령이 평창올림픽 미국대표단 단장으로 오는 개회식 테이프를 끊게 된다. 평창올림픽은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들의 평화제전이다. 아울러 우리에게는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열고 통일을 기약하는 민족의 제전이기도 하다.

그러나 백악관은 5일, 켄스 부통령 평창올림픽 참석에 대해 북한이 올림픽 메시지를 납치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과거 조작의 대가였으며 현재는 살인정권"이며 "단순히 개회식 테이프를 끊을 하러 가는 것이라면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평창올림픽이라는 세계인의 평화축전을 반복선전장으로 변질시키겠다는 선포에 다름 아니며 켄스 부통령의 여러 행보에서 또렷이 확인된다.

북한에서 체제위협 죄목으로 옥고를 치르다가 석방되어 미국에 도착한 뒤 사망하게 된 미 대학생 오토 웬비어의 부친을 올림픽 개막식에 앞세우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켄스 부통령이 한국에서 발족자와 간담회를 하고 친한함 기념관을 찾는 것 역시 남쪽의 보수층을 자극하고 압축적으로 지만하여 남남갈등을 유발시키며 남북 관계개선의 기운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다.

켄스 부통령은 또한 7일 방일 중 야메 총리와의 회동에서는 '비핵화 없이 대화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남북대화를 100% 지지한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빈말이었음을 확인해준 발언이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진행되고 있는 남북대화를 방해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이렇듯 평창 평화올림픽을 반복선전장으로 변질시키는 것도 부족해 '남북대화 방해장'으로까지 만들려는 켄스 부통령의 행보는 무엇보다도 올림픽정신을 훼손하는 행태이며 남과 북의 '우리민족끼리'에 어긋장을 놓는 행위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의 흐름을 민족공조에 기초하여 본래도에 탄탄히 올려세우기 위해 우리민족이 내딛는 역사적 발걸음을 가로막아 보겠다는 것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의 이름으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고 조국통일을 이루어야 할 우리 민족의 이름으로 켄스 부통령과 트럼프 정부에게 경고한다.

펜스 미 부통령은 평창 평화축전장을 반북선전장으로 만들고 남북대화 방해장으로 변질시키려는 반올림적이고 반평화적인 행태를 당장 멈추라. 멈추지 않겠다면 당장 미국으로 돌아가라.

평창 평화올림픽을 왜곡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린하며 우리민족끼리의 발전에 훼방을 놓는 트럼프 정부를 규탄한다.

2018년 2월 9일

평창 평화올림픽 개막식 날, 평화협정행동연대(준)

[성명]

성범죄자 이윤택을 처벌하라! 문제는 성차별적 권력구조다.

전사회적으로 성폭력 피해 경험 말하기, #Me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의 말하기가 있었지만, 최근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시작으로 사회 각 영역에서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고 있다. 그중에도 최근 알려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감독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현재까지 4명의 피해자들이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피해경험을 알렸고, 주변인들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윤택 감독은 연기지도를 핑계로 여성 배우들을 불러 '안마'를 병자한 성추행을 저질렀고, 강간 피해를 증언한 사람도 있다. 이윤택 감독의 요구를 거절한 피해자들은 극단 내에서 마녀사냥을 당하거나 캐스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겪었다고 알려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윤택 감독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추행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성폭행에 대해서는 "성관계는 있었으나 강제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또한 성폭력이 "극단 내에서 18년 가까이 진행된, 관습적으로 일어난 아주 나쁜 행태"라고 표현했다. 또한 오늘 오전 연희단거리패에서 활동해온 배우 겸 연출가인 오동식씨는 "나는 나의 스승을 고발한다"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통해 이윤택 감독이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에도 극단 내 동조자들과 함께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을 고발했다.

이윤택 감독은 성폭력을 '성관계'라고 표현하면서 피해자들이 힘겹게 목격한 범죄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스승'을 지키기 위해 범죄를 은폐하려 한 내부의 동조자들은 오씨의 표현대로 '지옥의 아수라'를 만들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권력형 성폭력이다.

우리는 성폭력이 '성관계'로 둔갑하는 상황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성폭력이 어떻게 '관습'이 되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사람들이 속한 공간에서 성폭력이 '관습'이 되고, 은폐되고, 조장될 수 있었던 것은 차별적인 사회문화, 권위적인 조직문화, 여성혐오적인 남성문화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조직 내 권력자들이 주변관계는 물론 캐스팅이라는 생존권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더욱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조직은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를 외면한 것이다.

현재 사회 곳곳에서 #MeToo 말하기가 터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 피해자들을 응원하고 함께 성폭력 근절을 위해 #WithYou 를 외치는 연대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연대가 가능한 것은 성폭력이 여성이라면 대부분 공감하는 사회문제이기 때문이다. #MeToo, #WithYou를 비롯한 말하기 운동은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바꾸는 변화의 신호탄이다. 지금이야 말로 성폭력을 가능케 했고 이를 은폐하고 조장하고 침묵했던 수많은 요소들을 견여내고 구조적 변화를 이룰 때이다. 가해자 처벌과 더불어 성차별적인 문화를 바꾸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조적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MeToo 말하기를 통해 사회를 바꾸고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응원과 지지를 표한다. 또한 가해자들의 처벌 과정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이며,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할 것이다.

2018.2.21.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록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전더정지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함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성명】

문화체육관광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 '성폭력 반대 연극인 행동'을 지지하며

각계각층에서 성폭력 피해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연극계에선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자성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21일 150여 명의 연극인들이 모여 '성폭력 반대 연극인 행동'을 만들었다. 이들은 출범 성명을 통해 폭력의 실체가 "권위에 순응한 우리 자신이었고, 위계 구조였으며, 침묵의 카르텔이었다"고 말했다.

용기 있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지켜보며 연극인들 스스로 그동안 연극계 내 성폭력 및 위계적인 문화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함께하며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힘을 모은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에 지지를 표한다. 자성적 성찰을 통해 변화를 이루려는 연극인들이 모인만큼 이번을 계기로 "관행"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뿌리 뽑을 수 있길 바란다.

연극인들 스스로 연극계를 변화시키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국가기관의 책임 역시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역할이 크다. 문체부는 문화예술 분야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기에 문화예술계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연극계를 비롯한 문화예술계는 일반 사업장과는 다른 노동의 특수성을 갖고 있다. 여성문화예술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계는 "학연, 지연, 유명세 등이 얽힌 복잡한 권력관계가 존재"하고, "교육과정의 스승이나 선배가 활동영역에서 동료, 심사위원, 비평가로 이어지는 평생을 걸친 위계관계"가 존재한다고 한다.

문체부는 이러한 문화예술계의 특수성을 인지하고 문화예술인 전체 실태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조속히 문체부가 부처 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성적으로 연극계를 개혁하고자 하는 연극인을 지원하길 바란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용기있게 나선 고발인들과 '성폭력 반대 연극인 행동'을 비롯한 연대자들에게 응원과 지지를 표한다. 연극계에 이어 사회 각종 영역에서도 #With You가 이어지길 바란다. 우리는 앞으로도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가해자 처벌과 성폭력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With You!

2018.02.23.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

체인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
 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이.세.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올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외전화 한국여성장래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
 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성명]

정부는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통해 #MeToo 운동에 응답하라!

지난 1월 29일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이 알려진 이후, 사회 곳곳에선 #Me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MeToo'가 출아지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경험이 아니고 대다수의 여성이라면 공감할 사회구조적인 폭력이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 #MeToo 운동은 #WithYou 운동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미투운동들) 적극 지지한다"며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27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컨트론타워가 되는 범정부차원의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은 ▲3월부터 100일간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운영, ▲성범죄로 범행형 이상 선고 공무원 당연퇴직, ▲대학 및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교육부) 운영, ▲무로범률구조사업,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체계 가동,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성희롱 고충처리 옴부즈만' 배치 운영 권고 등 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성폭력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해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바이다.

우선 정부가 공공부문에 한정하여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는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명 사건'을 비롯해 민간부문에서도 끊임없이 성폭력 문제가 제기되어왔음에도 현재까지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포괄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새로운 '특별신고센터'를 만들기 전에 기존 신고체계의 미비한 점을 점검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성희롱 고충처리 옴부즈만' 배치 운영은 권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운영을 의무화하여 성희롱·성폭력 신고 이후 2차 피해 등 처리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역고초나 2차 피해를 두려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이제는 말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제약했던 무고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법·제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이 알려지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진정성까지 의심하는 사회에서 그럼에도 피해자

들이 용기 내 신고를 하는 것은 가해자가 처벌받고 성폭력 문제가 사라지길 바라는 때문이다. 정부는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해자 처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길 촉구한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은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부문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대책 외에도 각 부처별 대응체계 역시 구축해야 할 것이다.

지난 촛불광장에 선 수많은 여성들은 정권교체와 더불어 성차별적인 사회문화와 성폭력 근절 등을 함께 요구했다. 사회는 더 이상 여성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응답할 때이다. #○○계_내_성폭력, #MeToo 운동 등이 사회개혁 운동의 한 축으로써 한국사회의 성차별·성폭력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우리는 정부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감시하고 비판해나갈 것이다.

2018. 02. 28.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남여성회 기독교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전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민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만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외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너희들의 시대는 끝났다

지난해 12월 최영미 시인은 '괴물(황해문화 겨울호)'이라는 시를 통해 고은 시인의 성추행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최영미 시인의 말하기는 한국 #MeToo 운동의 중요한 마중물이 되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고은은 국내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다가 지난 3월 2일이 되어서야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영국의 한 출판사를 통해 "부끄러운 짓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성추행을 부인했다. 또한 그는 "시인으로서 지닌 명예가 실추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글쓰기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미 시인은 폭로 이후 온갖 구설과 2차 피해에 시달렸다. 문학계 인사들은 피해자의 평소 행동, 성격 등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를 음해하고, 가해자를 비호했다. 한 시인은 "그녀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남발했다. 미투 두사들에 의해 다수의 선량한 문인들이 한꺼번에 도대급으로 태도되는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비난 받아 마땅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물었다. 자극적인 이야기를 선호하는 일부 언론들은 이를 부각해 보도했다.

한국사회에서는 #MeToo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 말하기가 지속되고 있다. 오랜 시간 침묵해왔던 사실들이 어떻게 수면 위로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에선 '미투운동이 이렇게 가선 안된다', '미투운동은 진보진영에 대한 정치적 공작이다', '00계 전체를 태도해선 안된다', '미투운동으로 문화 행사에 차질이 생기지 시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등 각종 우려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자는 성욕을 못참고 '찌뿌리는 본능'을 가졌다' 등 성폭력을 어쩔 수 없는 남성문화로 정당화하기도 한다.

이는 피해자들이 본격적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입막음을 하려는 시도나 다름없다.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MeToo 운동에 대한 우려 보다는 주변의 성차별적 문화와 성폭력을 가능케 했던 구조에 대해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가해자들은 전혀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고백 이후 이어지는 가해자들과 주변인들의 반응을 보면 이 사회가 얼마나 성폭력에 대해 왜곡된 시선을 갖고 있었는지, 성폭력을 가능케 한 구조가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런 현실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가해자 고은의 바람처럼 한국에서 논란이 잠재워지고 그의 글이 세상의 빛을 보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남성연대의 온갖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용기 있는 말하기는 지속될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인 연대로 '남성'들의 강간문화를 끝장낼 것이다.

하루 전인 3월 4일, 제 34회 한국어성대회에서는 3,0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 "성폭력 근절", "#MeToo, #Withyou"등을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다. 성폭력이 만연한 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열기는 대단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3월 4일 12시 30분 #MeToo 운동 이후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며 변화

를 만들기 위한 <3.8 사우팅>을 진행했다. <3.8 사우팅>은 #MeToo 운동의 흐름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말하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성차별에 대한 말하기의 공간이 아니라, 함께 모인 사람들의 지지와 용원을 확인하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말하고, 소리치고, 바꾸자'라는 제목으로 진행했다. <3.8 사우팅>은 3월 4일 한국여성대회를 시작으로 전북, 대구경북, 경남, 경기 등 전국에서 릴레이로 진행될 계획이다.

연대의 힘은 강하다. 혼자서 어렵다면 여럿이 힘을 모아 세상을 바꿀 것이다. 너희들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달라졌다. 달라진 우리는 너희들의 세계를 부술 것이다. 우리의 구호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다.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 변화를 만들 것이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달라진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2018. 03. 05.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외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성명서]

안희정 도지사는 법적 책임을 정확히 지라!
정치권은 성폭력을 용인하는 성차별적 구조 개혁하라!

3월 5일 저녁 JTBC 뉴스를 통해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정부비서가 지난 8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이뤄진 안 지사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증언했다. 한직 도지사의 상습적인 성폭행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안 지사가 미투 운동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동안에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며, 심지어 미투 운동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현했다는 것이다.

안희정 지사의 범죄는 명백한 위계와 성별관계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이다. 비서 신분의 피해자가 한직 도지사이자 차기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손꼽히는 안 지사의 성폭력을 폭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방송에서 “오늘로서 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힐 정도로 두렵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피해자의 용기있는 폭로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언론은 가해행위 자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피해자 개인 신상을 파헤치는 식의 선정적이고 말초적인 보도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오늘 새벽 안 지사는 본인의 SNS를 통해 도지사직을 내려놓고 모든 정치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안희정 지사는 성폭력 범죄자로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정치활동 중단 등의 도의적 책임 수준으로 면피해서는 안된다.

피해자의 폭로가 보도된 2시간 후 더불어민주당은 안희정 지사를 출당, 제명한다고 밝혔다. 정치인에 의한 성폭력은 한 개인의 축출로 마무리해서는 안된다. 정치인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정치인에 의한 수많은 성범죄가 있어왔지만, 제대로 된 대처가 없었기에 오늘이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지금도 SNS에서는 정치인들의 성폭력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다.

정치권은 성차별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성차별적인 문화를 바꾸기 위한 대대적인 자성의 움직임이 없이는 제2, 제3의 안희정 사태는 계속될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피해를 고발하는 이들과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18년 3월 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록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래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논평]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적극 지지한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한반도 평화의 훈풍은 최근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개최라는 놀라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촛불시민혁명의 힘으로 선출된 한 정부의 평화 정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지지하며 이러한 노력이 평화체제 수립의 확고한 진전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여성들은 한반도 분단 극복과 평화통일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여성들은 폭력적 방법이 아닌 평화를 전제로 한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하면서, 가부장제와 군사주의 극복, 여성에 대한 폭력배제 등을 주장해 왔다. 대화와 협력, 상생의 가치를 전제로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분단체제가 종식되어야 한다. 이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장도에 나선 문재인 정부가 곳곳이 대화국면을 지속시켜 나갈 것을 요구한다. “한반도 문제를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풀어 나가는 것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지도자의 역사적인 사명”이라는 한 정부의 평화정책노력에 동의하며 이제는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그리고 10·4선언 등 남북한 간에 이루어진 합의와 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 없이는 평화도 없다(No Women No Peace).” UN1325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분쟁예방·관리·해결과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 참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의 여성의 적극 참여는 기존의 현실주의의 담론, 즉 무차별적 살상무기체제 등 무력에 의존하는 군사주의적인 문제해결을 지양하고, 대화와 협력, 평화와 상생 그리고 공존의 가치를 중시하는 여성주의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미 세계의 많은 분쟁지역에서 여성의 참여가 평화의 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통계상으로도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도 여성들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통일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사회가 여성과 남성이 모두 평화롭고 민주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성평등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은 사라져야하며 궁극적으로는 무기 없는 세상, 핵없는 세상, 전쟁 없는 세상에서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희망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정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2018. 03. 13.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

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전대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민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참여하는주부모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안 관련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입장

- 성차별 등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의무 등 실질적 평등권 강화를 명시한 것은 긍정적
- 임신·출산·양육 등 재생산권이나 공직 외 모든 영역에서의 여성대표성 확대 및 성평등 사회 실현을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목표로 명시하지 못한 점 등은 시대정신과 보편적 국제인권규범에 맞지 않아

지난 3월 13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개헌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청와대는 자문안을 바탕으로 3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국회 개헌안이 나오면 이를 철회할 입장도 같이 천명하였다. 지난 1년간 국회는 여성들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국회 개헌안을 만들어야 함에도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적 계산으로 일관하고 말았다. 그 결과 국회에 대한 시민들의 민심 이반은 물론이고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발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보고한 자문안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하여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는 새 정부의 개헌안이라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면이 있다.

자문안은 △국민주권 실질화 △기본권 확대 △자치분권 강화 △전제와 균형 내실화 △민생 안정 등 5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실질적 평등 실현이라는 기본권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잡고, "사회통합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 차별 해소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물리는 바로는 모든 영역에서의 성차별 시정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의무 내용과 공직에서의 여성대표성 확대 조항이 자문안에 들어갔다고는 한다.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의 대표성 확대, 임신·출산·양육 등 재생산권의 보장, 가족구성권의 신설 및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등 그간 여성들이 요구해 온 개헌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성평등'이란 용어를 회피하고 있으며, 여성들을 다른 사회적 약자와 같이 범주화하고 있는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문제적이다. 나아가, 'We too' 운동의 근본적인 총착지인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인 구조, 문화, 인식의 개선을 위하여 국제인권규범이 요구하는 '성평등'을 적극적으로 포괄해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 우리나라의 제8차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보고 심의과정에서도 성차별 시정을 위하여 국가의 근본 규범인 헌법을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을 위하여 개정하고, 성평등 추진체계를 재정비하도록 지적된 바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와 이를 분석하는 자료에 의하면 정치적 견해에서 20대의 전대 겹(성별 분리 현상)은 지역 겹 이상으로 크다고 한다. 그만큼 젊은 세대 여성들은 자신들의 삶에 변화를

가치를 성평등 개헌과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개선에 대한 욕구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개헌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또한 미래세대 여성들을 포함한 훗날 여성들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간 여성연합의 지속적인 요구였던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실현이 헌법의 전문에 명시되어야 하며,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하는 가족구성권 조항, 임신·출산·양육을 포괄하는 태생산권 조항, 선출직과 임명직을 비롯해 공직에서의 여성대표성 확대 및 정치·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남녀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조항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MeToo'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를 해체하고 성평등추진체계를 제대로 만들어 2등 시민이었던 여성들이 대등한 시민으로서 자신의 몸과 공동체에서 자기통치권을 가지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성평등 개헌은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마주하고 있는 현 시점에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 정책의 목표와 가치로 헌법에 그 전문과 내용으로 충분히 세부적으로 담겨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는 훗날민심에서 드러난 이러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바란다.

2018년 3월 14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남여성회 기독교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성회 제주여성민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물민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외전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최종견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8차 한국심의 최종견해

CEDAW/C/KOR/CO/8

Distr.: General

9 March 2018

Original: English

ADVANCE UNEDITED VERSIO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eigh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1. The Committee considered the eigh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EDAW/C/KOR/8) at its 1576th and 1577th meetings (see CEDAW/C/SR.1576 and 1577), held on 22 February 2018. The Committee's list of issues and questions is contained in CEDAW/C/KOR/Q/8 and the responses of country are contained in CEDAW/C/KOR/Q/8/Add.1.

A. Introduction

2. The Committee appreciates the submission by the State party of its eighth periodic report. It also appreciates the State party's follow-up report (CEDAW/C/KOR/CO/7/Add.1) and its written replies to the list of issues and questions raised by the pre-sessional working group, as well as the oral presentation by the delegation and the further clarifications provided in response to the questions posed orally by the Committee during the dialogue.

3. The Committee commends the State party's high level delegation which was headed by Ms. Chung Hyun-back, Minister for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delegation also included representatives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ur, the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Office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Geneva, and interpreters.

B. Positive Aspects

4. The Committee welcomes the progress achieved since the consideration in 2011 of the State party's seventh periodic report (CEDAW/C/KOR/7) in undertaking legislative reforms, in particular the adoption of:

- (a)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revised in 2017, designed to aid migrant women in creating social support networks;
- (b)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in 2014;
- (c)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Assault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Thereof, revised in 2012 and 2014;
- (d) The Labour Standards Act, revised in 2012 and 2014, extending maternity leave to women experiencing miscarriage or stillbirth prior to the sixteenth week of pregnancy;
- (e)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revised in 2012 and 2014, raising the age limit for childcare leave from a child, including an adopted child, to under the age of nine; encouraging parents to take childcare leave; and requiring employers to receive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along with their employees with sanctions for non-compliance;
- (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Trafficking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Thereof, revised in 2012 and 2014;
- (g)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revised in 2012, 2013, and 2014;
- (h)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revised in 2011, 2012, 2013 and 2014.

5. The Committee welcomes the State party's efforts to improve its institutional and policy framework aimed at accelerating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promoting gender equality, such as:

- (a) The Mid-term Sectoral Strategy (2016-2020) of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b) The Second Basic Plan for Gender Equality Policies (2018-2022).

6. The Committee welcomes the fact that, in the period since the consideration of the previous report, the State party has acceded, in 2015, to the Palermo Protocol.

C. Parliament

7. The Committee stresses the crucial role of the legislative power in ensuring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see the statement by the Committee on its relationship with parliamentarians, adopted at the forty-fifth session, in 2010). It invites the National Assembly, in line with its mandate, to take the necessary step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between now and the submission of the next periodic report under the Convention.

D. Principal areas of concern and recommendations

Reservations

8. The Committee takes note that continuing negotiations among relevant Ministries of the State party regarding the withdrawal of its reservation to article 16, paragraph 1 (g), of the Convention will conclude in 2018.

9. The Committee recalls its previous recommendation (CEDAW/C/KOR/CO/7, para. 11) and its statement on reservations, adopted at its nineteenth session, in 1998,

considers that the reservation to article 16 paragraph 1 (g), of the Convention is incompatibl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Convention and that it is therefore impermissible and should be withdrawn.

Visibility of the Convention, Optional Protocol and the Committee's concluding observations and general recommendations

10. The Committee takes notes of the efforts of the State party to disseminate the Committee's previous concluding observations (CEDAW/C/KOR/CO/7), including tabling them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other awareness-raising efforts regarding the Convention and its Optional Protocol. It is, however, concerned that such efforts have not targeted law enforcement officials, prosecutors and the judiciary, and that women themselves are not aware of their rights under the Convention or of the complaints procedure under the Optional Protocol and thus lack the capacity to claim their rights.

11.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previous recommendation (CEDAW/C/KOR/CO/7, para. 13) and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a) Ensure the dissemination of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the Convention, its Optional Protocol and the Committee's general recommendations among all stakeholders, including Government and law enforcement officials, prosecutors and the judiciary;

(b) Raise awareness among all women, targeting in particular women belonging to disadvantaged groups about their rights under the Convention, and the procedures under the Optional Protocol for them to claim violations of their rights;

(c) Promote capacity-building programmes for all stakeholders as stated above on the rights under the Convention.

Defin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discriminatory laws

12.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the State party has yet to adop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as recommend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 2006 and 2016. The Committee notes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tate party during the dialogue that ac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cluding on the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was going to be taken and that the adoption of a general anti-discrimination law would be covered by the third national action plan for 2017–2021. It also notes with concern that a separate law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has not been enacted since the repeal of the Gender Discrimination Prevention and Relief Act in 2005. The Committee further notes that, in 2015,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requested the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to remove provisions related to lesbian,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persons from its Basic Ordinance on Gender Equality.

13. Reiterating its previous concluding observations (CEDAW/C/KOR/CO/7, para. 1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dop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that prohibits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cluding direct,

indirect, and intersecting forms of discrimination affecting disadvantaged groups of women, such as women living in poverty, women belonging to ethnic, racial, religious and sexual minorities, women with disabilities, women refugees and asylum seekers, stateless and migrant women, rural women, single women, adolescents and older women, as defined in article 1 of the Convention and in line with general recommendation No. 28 (2010) on the core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2.

Extraterritorial State obligations

14. The Committee commends the State party for its efforts to mainstream gender into its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mes. It takes note of its environmental policies, particularly those aiming to reduce fine dust by 30% by 2022. It is, however, concerned that its energy policies relating to fossil fuel and coal fired power plants, which result in greenhouse gas and other emissions, negatively affect women, especially pregnant women, as they increase woman and child mortality.

1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review its energy and climate change policies to ensure that these do not impact adversely on women's and girls' life and health.

National machinery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16. The Committee welcomes the establishment of the Gender Equality Committee, in 2015, operating under the Prime Minister, its reinvigoration in 2017, and the State party's plans to convert it into an overarching coordination body under the President. It also welcomes the designation, in 2015, of Gender Equality Policy Officers in 47 cen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17 municipal and provincial government entities. The Committee is, however, concerned that merging gender equality and family affairs in one Ministry for Gender Equality and Family may directly or indirectly entrench discriminatory stereotypes about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women and men in the family and in society. Furthermore,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Permanent Cooperative Body on Gender-responsive Budgeting involving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lacks a legal framework and is equipped with only ten officials.

17. Recalling its general recommendation No. 6 (1988),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Establish the Gender Equality Committee at the Office of the President and equip it with the necessary human, financial and technical resources and a clear mandate to coordinate the State party's national machinery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b) Strengthen its mechanism on gender impact and analysis, at all levels of local government, by equipping it with adequate human, financial and technical resources;

(c) Enact a legal framework for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Permanent Cooperative Body on Gender-responsive Budgeting involving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provide it with the necessary human, financial and technical resources.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18.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newly created Gender Equality Division in 2018 is not equipped to deal with the sharply increasing number of petitions concerning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reinforce the gender and women's rights mandat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allocate sufficient human, financial and technical resources to strengthen its functions regarding gender-based discrimination.

Temporary special measures

20.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State party has been among the lowest ranks in the glass ceiling index of the 29 countries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nd that the five-year plans to enhance women's representations in the public sector implemented since 2002 have yielded limited results regarding women's high-level participation in the public sector. The Committee notes the modest targets in the Plan for 2022 of 10 per cent of women employment ratio for level 2 and above and 21 per cent for level 4 (division head level) and above. It is further concerned that, in 2015, there were merely 28.7 per cent women principals at elementary schools, 23.2 per cent at middle schools, and 9.5 per cent at high schools, and that, in 2015, 14.2 per cent of women professors at public and national universities.

2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make use of temporary special measures, with a clear time frame, in line with article 4 (1) of the Convention and the Committee's general recommendation No. 25 (2004) to ensure the equal representation of women in high-level public posts, including public schools and academia at all levels and public and national universities.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22. The Committee notes the efforts of the State Party to combat gender-based violence, including by establishing emergency hotline centres providing interim shelter to victims, increasing social awareness of domestic violence as a crime, and the measures taken to strengthen prevention and protection. It welcomes the amendment to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 Crimes, which removed the requirement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to file a complaint in order to have their cases investigated and prosecuted. However,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a) That the current definition of rape in article 297 of the Criminal Code requires proof of "means of violence or intimidation", and that the Committee's previous recommendations to specifically criminalize marital rape in legislation, rather than only in case law (CEDAW/C/KOR/CO/7, para. 21(e)), were not implemented;

(b) The increase from 160,272 of reported domestic violence cases in 2013 to 264,528 in 2016; the increase from 494 in 2012 to 19,834 in 2016 of home protection cases of domestic violence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the fact that 43.4 per cent of a total of 16,868

home protection cases in 2015 did not entail any criminal punishment, as the primary purpose of the Act is to maintain and restore the family; and that violators of restraining orders are only subject to administrative fines:

(c) The social stigma attached to, and the institutional prejudice against, sexual violence victims, which deters women and girls from filing reports with the police, including the widespread misconception, generated also by men's organizations, that sexual violence reports are false; the bringing of defamation charges against victims who report to authorities or notify confidants of sexual violence offences, and the consideration of the victims' sexual background as evidence in judicial proceedings, which leads to secondary victimization and silencing of victims;

(d) The significant increase over the past ten years in online sexual violence crimes, the low ratio of prosecutions and the lenient sanctions imposed on perpetrators, that the plans to have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delete and block criminal content upon request by law enforcement agencies will only serve as a post-facto and not preventive measure, and the fact that they have not been implemented yet so that victims of such crimes have to resort to costly "digital undertakers" to have such content removed online;

(e) The more than 2,100 complaints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receiv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ur from 2012 to 2016, resulting in a disproportionately low number of prosecutions (83 between 2012 and 2015 out of 1,674 cases), including prosecutions for adverse measures taken by employers against sexual harassment victims prohibited by article 14, paragraph 2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due to the fact that harm to the victim has to be proven for prosecutions failing which the case is settled with payment of a fine for negligence; and insufficient monitoring of the State party's policies to prevent and protect against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f) The high prevalence of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in public institutions such as schools, including by teachers themselves, universities and the military;

(g) The reportedly insufficient services of counseling and psychological therapy centers and shelters for women "defector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3. The Committee refers to its previous recommendations (CEDAW/C/KOR/CO/7, para. 21), and, taking account its general recommendation No. 35 (2017), updating general recommendation No. 19, and recall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5.2,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strengthen its efforts to combat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and:

(a) Amend article 297 of the Criminal Code so as to place the lack of free consent of the victim at the centre of the definition, and specifically criminalize marital rape;

(b) Ame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to ensure that the safety of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becomes

its primary purpose, by, *inter alia*, extending its applicability to single sex couples or families, and all women regardless of their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abolishing the system of suspending charges in home protection cases on condition of counselling or training for domestic violence and prohibiting the use of reconciliation and mediation in such cases; ensuring that perpetrators are criminally punished under statutory sanctions; and adopting a policy of mandatory arrest for crimes of domestic violence in case of breach of restraining orders;

(c)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the abuse of criminal proceedings by bringing false charges against victims of sexual abuse, including by ensuring free legal representation for their defense, and prohibit the victim's sexual background to be used as evidence in judicial proceedings;

(d) Strengthen preventive measures against online sexual violence, including by enacting legislation that explicitly criminalizes such new forms of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considering penalizing with considerable financial sanctions online platforms and online distributors that fail to delete or block criminal content from their platforms, and swiftly implement the State party's plans to have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delete and block such criminal content, including upon request by victims;

(e) Establish an effective system of management and oversight for cases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in particular b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ith a focus on prevention, and ensure that the 2017 amendment to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Law providing for mandatory disciplinary measures against perpetrators is strictly complied with;

(f) Ensure stricter punishment of perpetrators of sexual violence in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schools, universities, and the military; take steps against the re-instatement of perpetrators in their professional functions; and provide for stricter confidentiality to facilitate reporting and counselling;

(g) Provide adequate financial resources to centres for women "defector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provide for effective psychotherapy and counselling, including in cases where they experienced sexual violence.

Trafficking and exploitation of prostitution

24. The Committee welcomes the ratification of the Palermo Protocol and the adoption of a new article 296.2 of the Criminal Code, establishing limited universal jurisdiction for crimes of trafficking in persons. The Committee acknowledges the efforts made in providing support services to foreign women who are victims of trafficking. Nevertheless,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at:

(a) The absence of a comprehensive law on trafficking in human beings and that aspects of trafficking in human beings remain scattered across sectoral legislation;

(b) The situation of migrant women who enter the country on E-6-2 visa granted to work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who often become victims to trafficking and exploitation of prostitution, are vulnerable to sexual harassment, sexual violence

and other crimes, and are being deported, unless they actively engage in legal proceedings against their perpetrators, as well as the situation of women "defector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rced into prostitution to provide for their families;

(c) The low prosecution and conviction rates in cases of trafficking in women and girls, lenient sentences for perpetrators, and the lack of disaggregated data on victims;

(d) The lack of a victim-centred approach to trafficking and exploitation of prostitution, given that women engaging in prostitution without coercion are subjected to criminal punishment, including following sting operations by police officers who stage as sex purchasers, and that children, including girls, exploited for prostitution are not classified as victims and are subject to treatment and correctional education as "protective juveniles";

(e) The lack of information on exit programmes for women who wish to leave prostitution.

25.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previous concluding observations (CEDAW/C/KOR/CO/7, para. 23), and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Enact a comprehensive law on trafficking in human beings which complies with the standards under the Palermo Protocol of support for and protection of victims of trafficking, including for foreign women and girls victims of trafficking who require special protection and assistance on issues such as residence, stay and returning to their home countries;

(b) Revise the current E-6-2 visa regime and strengthen the monitoring of entertainment companies who recruit foreign women, including in-situ visits to establishments where the women under the E-6-2 visa scheme work;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the G-1 visa regime is applied to all women victims of trafficking, regardless of their willingness or ability to cooperate with the prosecution authorities; and design and implement policies based on research of their living conditions which address the structural causes of women "defector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eing forced into prostitution;

(c) Take adequate measures to increase the number of convictions of perpetrators of trafficking and abduction of women and girls, and take legislative measures to reduce the rate of suspended criminal sentences;

(d) Adopt a victim- and human rights-centred approach in its efforts to combat trafficking and exploitation of prostitution of women and girls;

(e) Design and implement exit programmes for women who wish to leave prostitution.

"Comfort women"

26. The Committee recalls its concluding observations concerning Japan (CEDAW/C/JPN/CO/6, paras. 37 and 38, and CEDAW/C/JPN/CO/7-8, paras. 28 and 29) and welcomes the additional steps taken by the State party since the publication, on 27 December 2017, of the results of the review of the bilateral agreement between

the State party and Japan of 28 December 2015. It further notes the State party's intention to implement follow-up measures based on a victim-centred approach, and the opposition of victims/survivors and their families to the Reconciliation and Healing Foundation established under the bilateral agreement to distribute 1 billion yen received from Japan.

27.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Ensure tha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bilateral agreement announced jointly with Japan in December 2015, the State party takes due account of the views of the victims/survivors and their families;

(b) Ensure that the rights to truth, justice and redress of the victims/survivors and their families are fully upheld, including rehabilitation and fair and adequate compensation to be afforded without delay.

Participation in political and public life

28.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only 17 per cent of the Members of the 2016 National Assembly are women (compared to 15.7 per cent in the 2012 National Assembly), whereby the ratio is 53.2 per cent for the 47 members elected on the basis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2012: 51.9 per cent), compared to only 10.3 per cent of the 253 local constituency-based Parliamentarians (2012: 7.7 per cent). It is particularly concerned that the provision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require political parties to nominate at least 30 per cent women candidates for elections to the National Assembly, are not accompanied by enforcement mechanisms, so that only 10.5 per cent of candidates were women in the 2016 general elections.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that despite the requirement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for political parties to nominate at least one woman candidate for elections to the provincial or local government councils in every local constituency (excluding countryside districts), only 8.2 per cent and 14.41 per cent of women were elected to the provincial and local councils, respectively, in the latest 2014 elections.

29.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sider increasing the ratio of the number of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subject to proportional representation vis-à-vis the local constituency-based seats to increase the number of women Members of Parliament, and to introduce mandatory and enforceable gender quotas, subject to fines, for political parties for the nomination of candidates for the National Assembly and 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 council elections.

30.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in 2017, women accounted for only 10.9 per cent of the total police force in the State party (2015: 9.9 per cent), due to "sex-segregated recruitment practices", and that only 5.7 per cent of them are in managerial positions, due to reported gender discriminatory placement and promotion policies, and that the National Police Agency reportedly revoked its decision taken upon recommenda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the Police Reform Commission to give priority to the recruitment of women regular police officers.

3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the necessary steps to abolish "sex-segregated recruitment" of police officers and take measures to increase the number of women police officers, including at the inspectors level and above,

Women, peace and security

32. The Committee welcomes the adoption of the first National Action Plan on Women, Peace and Security in 2014,

33.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maintain its dedication to ensuring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2000) on women and peace and security and subsequent resolutions in addressing human rights abuses against women in conflict and post conflict situations and women's significant participation in peace building, in line with the Committee's general recommendation No. 30 (2013),

Nationality

34.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a) The absence of a universal, compulsory birth registration system in the State party, which puts children of undocumented migrant women, in particular unmarried migrant women, at risk of statelessness, due to the persisting gender-discriminatory social stigma attached to single mothers, and the failure by the National Assembly to adopt a draft law on the registration of children born to foreign parents, for lack of social consensus;

(b) The difficulties faced by migrant women married to Korean men and the length of the naturalization process;

(c) Immigration officers at times still requesting migrant women applicants to furnish a Korean citizen's sponsor letter for the extension of legal residency, despite a legal amendment in 2012 removing such a requirement.

3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Adopt and implement the necessary laws and procedures for the registration of children born to foreign parents, including compulsory birth registration by hospitals and health care professionals;

(b) Expedite the implementation of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the naturalization process for migrant women married to Korean men is significantly shortened, and in any event concluded within the maximum length of legal residency in the State party;

(c) Strictly enforce the abolishment of the legal requirement of a sponsor letter of a Korean citizen when applying for extension of residency, including through capacity building and training of immigration officers.

Education

36. The Committee welcomes the steps taken by the State party to increase the number of women students enrolling in non-traditional fields of study such as science and technology.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that the new national School Sex Education Guideline of February 2015, implemented in every school as at March 2017,

focuses on fertility and sanitation, reportedly entrenches gender discriminatory stereotypes in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and depicts a negative image of certain types of families such as single-mother families.

37.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consider implementing more effective measures, including temporary special measures, such as quota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targeted grants or loans for women and girls aspiring to enrol in non-traditional fields of study.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revises its national School Sex Education Guideline by eliminating discriminatory stereotypes and providing information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in an age-appropriate, evidence-based and scientifically accurate manner.

Employment

38.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persistence of the gender pay gap (35,4 per cent in 2016), which remains the widest among all OECD countries. Furthermore,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70,2 per cent of short-time workers are women and that there is no, or limited, protection under labour laws, such as the Labour Standards Act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xed-Term and Part-Time Workers, while these women workers are only optionally able to enroll i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s an individually insured person and in employment insurance only after three months of continuous employment.

39.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previous concluding observations (CEDAW/C/KOR/CO/7, paras. 31 and 33), and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Strictly enforce the Equal Employment Act to implement the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principle, in particular by drastically increasing the capacity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ur to investigate cases of gender pay gaps; strictly impose sanctions for violations of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and introduce a wage notification system for public and private companies;
- (b) Enhance protection of women short-time workers under the Labour Standards Act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xed-Term and Part-Time Workers;
- (c) Continue to conduct awareness-raising campaigns and expand benefits, such as raising the benefit level for both maternity and paternity leave so as to enhance the incentives to share child rearing responsibilities between parents.

Health

40. The Committee welcomes the efforts to improve health care services for women, including expanding social and health care services for older women with low income. It is however concerned that the State party's polici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narrowly focus on the health of married and pregnant women and family health.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that transgender persons' access to medical services is reportedly restricted and that intersex persons are reportedly subjected to irreversible sex assignment, sterilization or "genital normalizing surgery" without their informed consent.

4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review its health legislation

and policies,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of women, and take corrective action, if required, in order to advance substantive gender equality in the health sector to all women subject to intersecting forms of discrimination.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sure transgender persons' right to access medical services, includ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and that intersex persons are not subjected to involuntary medical interventions.

42. The Committee expresses its concern that, even though abortion is legal under certain circumstances, including in cases of rape and incest, under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it remains a punishable offence under the Criminal Code. In addition,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in September 2016,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ortedly defined abortion in violation of the Mother and Child Act as an unethical medical practice, subjecting health care professionals to criminal punishment and medical license suspension. It, however, welcomes that this policy measure was later withdrawn. In that regard, the Committee takes note of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tate party that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riminalization of abortion is currently before the State party's Constitutional Court.

43.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previous recommendation (CEDAW/C/KOR/CO/7, para. 35) and, in view of the fact that unsafe abortion is a leading cause of maternal mortality and morbidity, calls on the State party to legalize abortion in cases of rape, incest, threats to the life and/or health of the pregnant woman, or severe foetal impairment, and to decriminalize it in all other cases, remove punitive measures for women who undergo abortion, and provide women with access to quality post-abortion care, especially in cases of complications resulting from unsafe abortions.

Rural women

44. The Committee notes the efforts of the State party to incorporate gender equality policies in the Fourth Five-Year Framework Plan to Cultivate Female Farmers (2016-2020), to recognize women as co-owners of their farms on equal terms with their husbands, expand women farmers'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nd improve their vocational capabilities. It is concerned, however, at the very low rate of women directors in regional fisheries (5.7 per cent at the end of 2017) and agricultural cooperatives, despite legal requirements to appoint at least one woman director if their membership reaches a 30 per cent threshold, which is an indication of the small membership of women in such cooperatives.

45. In line with the Convention and general recommendation No. 34 (2016) on the rights of rural wome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tinue to improve the situation of rural women through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by implementing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project sponsored by the Korea Maritime Institute aimed at improving women's 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in the fisheries industry.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strong measures for the appointment of more women as directors in the fisheries and

agricultural cooperatives, to ensure women's voices are heard and gender concerns fully considered.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

46.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article 781, paragraph 1, of the Civil Code maintains the patrilineal principle as it stipulates that a child may assume his or her mother's surname only when the father agrees at time of marriage.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that, upon divorce, marital property is divided according to each of the spouses' relative contribution, unless they agree otherwise in a contract.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that a reconciliation procedure is mandatory even in cases of divorce based on domestic violence, and that the ideology of preservation of the intact family leads to awarding visitation rights and child custody to abusive fathers. It is further concerned at the lack of social and economic protection to women in *de facto* unions.

47. The Committee calls on the State party to amend article 781, paragraph 1, of the Civil Code to abolish the patrilineal principle in order to bring its laws in line with article 16, paragraph 1 (g), of the Convention. Recalling its previous recommendation (CEDAW/C/KOR/CO/7, para. 39),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legislative measures to incorporate a rule of equal distribution of marital property upon dissolution of a marriage or *de facto* union, in line with the Committee's general recommendation No. 29 (2013) on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marriage, family relations and their dissolution. The Committee further calls on the State party to ensure that victims of domestic abuse seeking divorce are not forced to undergo reconciliation attempt or mediation with their aggressors prior to granting divorce; that members of the judiciary receive adequate mandatory training on the requirement to take gender-based violence in the domestic sphere into account in child custody cases and to give priority to the prosecution of crimes over family reconciliation, in order to adequately punish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and prevent its recurrence.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siders extending social and economic protection to women in *de facto* unions.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48. The Committee calls upon the State party to use the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in its efforts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49. The Committee calls for the realization of substantive gender equalit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throughout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issemination

50.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ensure the timely dissemination of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in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State party, to the relevant State institutions at all levels (national, regional, local), in particular to the Government, the ministries,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judiciary, to enable their

full implementation.

Ratification of other treaties

51.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adherence of the State party to the nine maj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would enhance the enjoyment by women of thei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all aspects of life. The Committee therefor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ratif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to which it is not yet a party.

Follow-up to concluding observations

52.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provide, within two years, written information on the steps taken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paragraphs 13, 23 (b) and (d), and 25 (b) above.

Preparation of the next report

53.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submit its ninth periodic report, which is due in March 2022. The report should be submitted on time and should cover the entire period up to the time of its submission.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follow the harmonized guidelines on reporting under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cluding guidelines on a common core document and treaty-specific documents (see HRI/GEN/2/Rev.6, chap. I).

[성명]

젠더가 실종된 대통령 개헌안을 규탄한다.

3월 20일 오전 청와대는 헌법 전문, 총강 및 기본권 관련하여 대통령 개헌안 요지를 발표하였다. 초문 전체를 공개한 것이 아니기에 전모를 다 파악할 수는 없으나, “국제사회가 한국에 기대하는 인권수준에 맞게 헌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을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하였다”는 것이 주된 골자이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동물보호에 대한 헌법적 근거조항까지도 마련하였다.

그런데, 막상 여성과 관련된 조항은 단 하나,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 노력 의무 신설’ 뿐이었다. 우선 순위로 치환할 수는 없으나 생애 정의 차원의 동물보호를 헌법적 가치로까지 끌어올리고, 국제사회의 인권수준을 언급하는 2018년 상황에서 젠더를 의도적으로 실종시킨 대통령 개헌안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젠더 실종의 상황을 연출하면서 어떻게 “국민개헌”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그동안 여성제는 헌법 헌법이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차별 사유를 늘려 열거하도록 요구해 왔다. 또한 모든 영역에서의 심각한 성차별과 폭력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포함한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책무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주장해 왔다. 특히, 세계적으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산출직과 임명직 등의 공직진출 및 직업적, 사회적 모든 영역에서의 남녀의 동등한 참여 보장에 대해 거듭 강조해 왔다. 여성대표성 확대가 이번 개헌에 꼭 들어가야 할 최소한의 내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성제를 비롯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회 여야 모두 공감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 요지에는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 노력 의무 신설’이라는 단 하나의 여성관련 조항이 있을 뿐이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여성대표성 확대 조항조차 없었다. 그간 논의에 비춰봤을 때 명백한 퇴행이며, 자칭 ‘페미니스트 대통령’으로서 부끄러운 개헌안 요지가 아닐 수 없다.

현재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미투 운동은 뿌리깊은 성차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인 처방은 성별권력관계 해소 뿐이다. 성별에 따른 위계와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성중심적인 법체계부터 바뀌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가치가 반드시 국가 목표조항이자 방향으로 담겨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제사회 즉, 유엔 위민(Women)과 여성차별철폐협약, UN 지속가능발전 2030 등에서 달성하려고 하는 젠더전환적 접근법(gender-transformative approach)의 헌법적 실현인 것이다.

대통령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성평등 사회 실현’은 국가와 우리 사회의 근본 가치이자 목표.

방향성이 되어야 달성될 수 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몇 가지 특화 정책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헌법에서부터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를 변혁하고, 동등한 의사결정 및 자원 접근 등을 보장하고, 여성의 역량강화를 고취하기 위한 의지를 명확히 밝히며, 이를 위한 확고한 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 조치를 할 때에만 달성될 수 있다. 이미 하위법에서 실천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신이 개헌에서도 담보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개헌안 요지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거듭 강조한 ‘국민 중심 개헌’ ‘국민의 뜻’에 결국 ‘여성’은 없었다. 대통령이 언급한 ‘내 삶이 바뀌는 개헌’은 여성의 삶과는 상반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진정한 여성의 삶을 바꾸는 헌법이 되기 위해서는 ‘성평등’ 가치와 젠더 관점의 조향이 반드시 헌법에 담겨야 한다. 아직 개헌안 요지만 발표하였을 뿐, 조문 전체가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실낱같은 희망을 가져본다. 이런 희망이 확실히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국회에도 요구한다.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의 뜻인 개헌에 성실히 임하며 올해 6월 개헌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나아가 성차별 해소, 성평등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위해 여성들을 배제하지 않는 개헌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다시 한 번 요구한다.

- 헌법 전문에 헌법 원칙과 국가 방향으로서의 성평등 실현 포함
- 선출직과 공직 진출 및 모든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
- 적극적 조치를 포함한 실질적 성평등 실현·보장 의무 명시
-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가족 구성권 명시
- 성적 주체로서 존엄의 원칙과 재산권 신설
- 국가 재정 운용 기준으로 ‘성평등 효과성’ 적용

2018년 3월 20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한국의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올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정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해하는주부모임

[성명서]

우리는 보호가 아닌 권리를 원한다.

국회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이 헌법 원리로서 국가의 목표로 명기되고,
여성대표성 확대 등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목록들을 담아
'여성의 삶이 바뀌는 개헌안'을 만들기 바란다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었다. 앞서 발표한 개헌안 요지에서 예상하였던 바, 대통령 개헌안은 '성평등'과 관련해 낙제점을 면치 못하였다.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헌법적 근거는 마련하였으나,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여성 대표성 확대조항은 실종되고, 여성들은 수동적인 보호대상으로 타자화시키고 사회적인 약자로 범주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여성제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진전된 논의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개헌안이다.

첫째, 대통령의 국경과제이기도 한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은 단면적인 정책 입안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편면화적인 방법의 통합적 성주류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국가의 근본규범인 헌법에서부터 '실질적 성평등 사회실현'을 헌법 원리와 국가 목표로 설정하여 하위 법령과 제도, 정책에 스며들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 총강, 개별 기본권 조항 어디에도 이러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둘째, 그동안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계는 모든 영역에서의 심각한 성차별과 폭력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포함한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무 규정을 헌법에 신설할 것을 주장해 왔다. 특히, 세계적으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출직과 임명직 등의 공직진출 및 직업적, 사회적 모든 영역에서의 남녀의 동등한 참여 보장을 강조해 왔다. 여성 대표성 확대는 여성계 뿐만 아니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국회 여야까지도 모두 공감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개헌안에서 이 내용은 누락되었다.

셋째, 대통령 개헌안은 제33조 제5항 후문에서 여성의 노동을 헌법 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특별한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 문제이다. 여성을 그 자체로 약자로 타자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노동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닌 당당한 시민권을 가진 주체의 권리로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개헌안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차별금지와 보호를 한 세트로 묶어 임신, 출산, 육아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대신 보호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인다. 노동영역에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을 재생산하는 과정인 임신, 출산, 육아를 여성의 역할로 한정하고 보호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돌봄 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 책임져야 한다. 무엇보다 여성들은 특별한 보호를 원하지 않는다. 최근 한성이나 국민은행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직에서부터 여성노동권을 가로막고 있는 성차별에 대한 엄중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넷째, 대통령 개헌안 제39조에서 혼인과 가족생활 관련 규정을 그대로 존치해, 1인 가구 증가와 비혼을 증가 등의 지난 30여 년 간 급격하게 변화로 요청되는 다양한 가족구성원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의 헌법을 고수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국가 정책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외면하였고 소위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벗겨지는 국민을 소외시켰다. 또한 제11조 제1항 차별사유에서도 '성별·종교·장애·연령·인종·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만을 열거하여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을 누락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회피하고 이를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한 설득 의무를 방기하였다.

요컨대, 대통령 개헌안은 젠더와 실질적 성평등에 대한 깊은 성찰없이 막연한 보호주의를 그대로 온존시킨 채, 모든 부분에서의 대표성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에는 눈감아 여성에게는 일상에 서부터 정치에 이르기까지 권역은 줄 수 없다는 점을 내비치고 있다. 현 정부의 여성들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 여성 정책과 성평등 정책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이 헌법원리로서 국가의 목표로 명기되고, 여성대표성 확대, 성과 재산권 보장, 가족 다양성 반영 등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목록들을 담아 '여성의 삶이 바뀌는 개헌안'을 만들기 바란다. 그리하여 6월 촛불개헌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완수하기 바란다. 그것만이 땅에 떨어진 국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2018년 3월 27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자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외전화 한국여성강제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합제하는주부모임

[성명서]

정당들은 6.13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미투의 외침에 응답하라

지역구 여성 후보 30% 추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성평등 의식을 중요 후보 검증 기준으로 삼아라

제7회 6.1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 왔다. 각 정당들은 지난 달부터 중앙당 및 각 시도 당에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공천 및 선거 전략 기획에 한창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2017년 촛불 혁명으로 탄생된 새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의 선거로, 최근 #미투 운동을 통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극심한 성차별적 사회 구조와 성 폭력 문화의 근본적인 변혁을 위한 정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시점대이다.

최근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미투 운동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뿌리 깊은 남성 중심 가부장적 사회 구조와 문화가 대한민국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경험해 왔던 수많은 형태의 성폭력과 성차별, 그리고 장간 문화를 떠받치는 단단한 토대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여성들은 남성이 중심이 되는 보편 시민의 위치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정치 영역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동등한 대표성 문제는 늘 후순위로 밀려왔다. 남성 기득권 중심의 정치 구조는 또 다시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 문화에 대한 변혁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짓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한국의 여성 정치 참여 현황 통계는 이러한 냉혹한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 퍼센트로 세계의원연맹의 통계 기준 193개국 중 116위이며 (2018년 1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여성 광역·기초의원 당선자는 각각 14.3, 25.2 퍼센트에 불과하였다.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래 역대 광역자치단체장 중 여성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다. 이미 정치관계법의 여성할당제 법 조항 및 각 정당 당헌·당규에 명시된 여성 후보 공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여성 후보 공천에 관하여 한결같이 요식적이거나 위법적 태도만을 보여 왔다. 정당들은 지역구 여성 공천 할당 30 퍼센트 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때면 불투명하고 불합리적 절차로 진행되는 정당 공천 과정으로 여성 후보들은 남성 기득권 세력들의 정치 담합에 희생되어 왔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일상의 성차별과 성폭력 문화를 변혁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뿌리 깊은 남성 중심 기득권 사회 구조가 해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김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들은 #미투 운동을 통한 여성들의 절규에 응답하기 위해서라도 성평등 가치를 담은 정치를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여성들의 동등한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는 남성 중심적 기득권 정치는 반쪽짜리 민주주의에 불과하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성평등한 정치를 위해서는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실행하고 성평등의 가치를 후보 검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각 정당들은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 30 퍼센트 이상 할당 등 정치관계법 및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명시된 여성 후보 추천 할당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라.

하나, 각 정당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 대표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라.

하나, 각 정당들은 공천 과정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행위의 권력을 포함한 성평등 의식을 후보 검증의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심사하라.

2018년 4월 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명서]

성평등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목실한 국회를 규탄한다
국회는 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한 개헌 로드맵 마련으로 미루운동에 조속히 응답하라

국회가 결국 여성 시민들의 성평등 개헌 요구를 포함한 시민들의 개헌 요구를 목살했다. 개헌의 전제인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넘김으로써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사실상 무산되고 말았다.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의 공약사항이었고 정치권이 그 실현을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정략적 계산에만 몰두한 정치권이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에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무산의 가장 큰 책임이 있을 것이다. 국회에서의 합의안 마련에 실패한 집권 여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나머지 야3당 또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목전에 두고 최근 개헌을 촉구하고 나선 바 있으나, 이전까지 개헌 성사 노력에 최선을 다해 왔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미루 운동은 현재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의 모습을 하고 있는 남성중심적 성별권력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근본 규범인 헌법에서 성평등 가치와 성평등 사회 실현이 국가 목표이자 헌법 원리로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대표성 확대와 지난 30년 동안 변화된 여성들의 삶을 제대로 헌법에 담아내야 한다. 그럼으로써 하위 법제도와 국가정책에 이들 헌법원리와 성평등 헌법 내용이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수많은 여성들이 지난해 초부터 성평등 개헌 운동을 해 온 것이다.

성평등 개헌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비록 이번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무산되었지만 국회는 이제부터라도 개헌안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난 3월 말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 보다 진전된 성평등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 권여가 실종된 대통령 개헌안은 발의 이후 여성들의 자선 비판과 지랑에 직면한 바 있다. 진영을 넘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선출직과 공직 및 모든 영역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조항마저 포함시키지 못한 대통령 개헌안은 남성 중심적 성별권력관계 해소라는 시대적 요구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국회는 여성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여성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성평등 개헌'을 위해 국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움직여야 한다. 서둘러 성평등을 포함한 개헌안을 만들고, 국민투표 시기를 정하는 등의 로드맵을 제시하여 개헌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회는 성평등 개헌으로 미루에 응답하라.
성평등 개헌은 정쟁의 도구가 아닌 주권자의 명령이다.

2018년 4월 2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
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
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을
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켄대정치연구소 여.세.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
여성노동자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
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성명서]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처음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한다.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 선언으로
여성민간교류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

11년 만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과 동아시아평화정착을 위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남북 중전선언, 더 나아가 평화선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평화와 안보는 여성의 삶에 맞닿아 있는 중요 의제다. 여성과 평화, 안보에 관한 최초의 결의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의 배경은 1990년대 르완다와 보스니아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참혹한 전시 성폭력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어났던 일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평화와 안보 문제의 핵심당사자이자 주체로서 여성들은 전쟁 반대와 비핵화, 한반도 평화를 앞장서서 외쳐왔다.

그러나 평화를 외치는 여성의 목소리는 아직까지도 외면당하고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준비 과정에는 여성 대표성이 턱없이 부족했다.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와 태석자 15명 중 여성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단 한 사람뿐이었다. 원로자문단에는 세 명의 여성이, 전문가 자문단에는 네 명의 여성이 포함되어 전체 자문단의 15.2%만이 여성이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화와 안보 문제를 다루기에는 부족한 숫자다.

이는 평화·통일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평동계획 수립·이행을 명시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1조에도 어긋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는 분쟁해결 및 평화협상, 분쟁 후 평화구축 및 통치 등 전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의 도입과 여성들의 전면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평동계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여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1991년부터 시작한 남북 여성들의 교류는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을 때도 중단되지 않고 이어져 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1991년 10월 도쿄에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심포지움을 연 이래로 남북의 여성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북성여성대회, 학술교류, 문화축제, 인도적지원, 남북여성통일대회와 같은 다방면의 교류를 서울과 도쿄, 베이징에서 이어왔다. 5.24조치로 모든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중단되고 남북관계가 불신과 전쟁 위협을 반복할 때 여성들은 비무장지대를 걸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움직임을 지속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여성들의 연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

남북여성간교류는 남북 정상회담이후 민간 차원의 상시협의 기구를 마련하여 다양한 민간

교류 협력을 보장해야 한다. 군사 분야, 경제 분야, 민간 교류 분야의 남북 협력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기초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단체의 역할은 정부 못지않게 중요하다. 민간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한반도 평화에 관한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여성이 당사자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24 조치를 해제하고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다차원적 교류 협력 사업도 재개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남북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이 땅에서 전쟁과 핵 위기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 여성들은 함께할 것이다.

2018년 4월 2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
 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
 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대대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
 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결미정치연구소 여.새.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
 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
 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논평]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환영한다.

오늘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선언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비단 남북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열원이기도 했다. 오늘 판문점 선언으로 냉전 시대의 마지막 아픔이었던 한반도가 이제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리라 기대한다. 이후 이어질 북미, 한미 정상회담과 남·북·미·중 4자회담 등에서도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오늘 남북한이 합의한 평화선언이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로 구축되기 위하여 구체적 실행계획들이 신속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민간교류 협력 활성화로 남북의 평화적 관계가 공고화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 구축을 누구보다 바라왔던 여성들은 역사적인 오늘의 선언을 적극 환영하며, 이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길에 앞장 설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경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남여성회 기독교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울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결미정치연구소 여.세.연 광고교육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판문점 선언, 방위력 증강 계획 전면 재검토로 이어져야
SIPRI 2017년 세계 군사비 발표 즈음한 세계군축행동의 날 입장**

무력 사용 배제와 군사적 신뢰 구축 통한 군축에 합의한 판문점 선언, 이제 대규모 군비를
복지와 평화정착 비용으로 전환해야

오늘(5/2)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017년 세계 군사비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에도 한국은 세계 10위 군사비 지출국에 올랐다. 2018년의 경우 한국의 국방예산은 2017년보다 7% 증가한 43조 1,581억 원으로 책정된 상태이다. 8번째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우리는 판문점 선언이 보여주듯 평화는 더 많은 군사비 지출이 아니라 대화와 신뢰 구축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이제는 대규모 군비를 복지와 평화정착을 위한 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한국은 그동안 북한의 총 GDP 규모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해왔다. 그 비용은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무기도입과 개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군비 증가는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준 것이 아니었다. 도리어 서로를 겨냥한 끝없는 군비경쟁은 군사적 대립과 갈등을 낳았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군사적 갈등과 무력충돌이 벌어지는 세계 곳곳에서 확인되는 바이다. 결국, 지난해 한반도에는 전쟁위기까지 감돌았다. 이러한 가운데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은 갈등과 대결을 해결하는 방식은 대화와 신뢰 구축이지 군사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하며,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더 이상의 무력 사용을 배제하고, 군사적 신뢰 구축을 통해 군축으로 나가겠다는 방향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매우 환영할 일이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격대와 대결을 뒤로하고,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갈 것을 천명한 지금이야말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축을 위한 전향적이고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관련하여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방위력 증강 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다고 밝혔고, 남북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 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초기에 한국형 3축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3축 체계 초기구축을 위해 2018년 방위력개선비로 전년 대비 10.8% 증가한 13조 5,203억 원을 책정한 바 있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용이라 주장했던 사드 역시 철거해야 한다.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 MD의 일부인 사드를 철거하지 않는 것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은 물론 동북아 평화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나아가 한국 정부는 군사비 축소를 위한 로드맵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우리는 더 많은 군사비는 평화와 안전이 아니라 주변국의 더 많은 군사비, 그리고 무기회사의 수익으로 귀결될 뿐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진정한 평화의 시대는 서로를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군사력 증강의 논리와 집착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한다.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와 신뢰를 통해 평화를 만들어가고, 군사비 지출 대신 복지와 평화정착을 위한 비용으로 쓰이는 것이 공동의 번영에 부합한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그러한 전쟁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

2018년 5월 2일

고양통일나무, 대전평화여성회, 시민평화포럼, 우리저레하나되기운동본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다, 피스모모,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

더불어민주당 공역자치단체장 후보 중 여성 0명

여성 후보 공천 없이는

성차별·성폭력 사회 구조를 변화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 대한 17개 전국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 리스트를 지난 4월 30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모두 남성이다.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시각적인 홍보 효과를 위해 제작한 후보 리스트 웹포스터에는 대한민국 지도를 중심으로 온통 50대 이상 남성 얼굴들만이 가득한 모습이라, 가히 충격적이다 못해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전국 광역 단위 지방정부 수장의 자리인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에 여성을 공천하지 않는 일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일 아니다. 민선 지방자치 이후 제6회 선거가 진행될 때까지, 광역자치단체장 여성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314명 중 단 10명(3.18%)이었으며, 그 중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한 광역자치단체장 여성 후보는 단 2명에 불과했다. 현재까지 총 96명의 역대 광역자치단체장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다. 또한 역대 기초자치단체장 총 1378명 중 여성은 단 21명으로 1.52%에 불과하다. 전국 각지의 광역 시장·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대한민국 전역의 지방자치단체 행정을 총괄하는 더더군다나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자리를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까지 남성들만이 독점해왔다는 사실을 위의 숫자들이 명백하게 드러낸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초부터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여성들의 폭발적인 목소리, #미투 운동의 본질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사회 각 영역에서 수많은 형태의 성폭력·성차별을 가능케 했던 남성 중심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해서는 남성 독점 정치 구조 해체와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가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고도, '사회 진보'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향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또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비롯하여, 정당이 여성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행위는 선거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일이다. 중년 이상의 남성 기득권이 독점하고 있는 정치가 과연 대한민국의 다양한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가?

여성 후보를 적극적으로 공천하라는 여성·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마땅한 여성 후보가 없다'는 구차하고 위선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는 정당들에게 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정당들은 과연 여성 정치인들을 키울 의지는 있는가? 여성 정치인의 풀이 형성되려면, 능력과 경험, 자원을 갖춘 여성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정당 내에 만들어져야 하고, 이미 지역에 깊숙이 뿌리박힌 남성 기득권 중심의 정치 네트워크에서 대체될 수밖에 없는 여성 정치인들이 정당 안에서 경력과 자원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당들의 의지와 역할이 필수적이다. 정당들은 이를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6.13 지방선거 공천 일정이 이제 곧 마무리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당들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이후의 공천 일정에서 여성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공천하여, 미투를 비롯한 여성 유권자들의 응답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여성 대표성 확대와 성평등 정치의 실현이 민주주의와 사회 진보의 기본 요소이자, 대한민국에 만연한 성폭력·성차별을 단단히 떠받치는 남성 중심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정당들은 깊이 자각하길 바란다.

2018년 5월 3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
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
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울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
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어.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
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
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판문점 선언 이행하는 한미연합 공군훈련 맥스언더 중단하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굳게 약속했고 미국 또한 동의했다.

하지만 한미당국은 판문점 선언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지난 5월 11일부터 최신예 스텔스 공격 전투기 F-22를 사상 최대 규모로 동원하는 한미연합공군훈련 맥스언더를 강행하고 있다. 북은 이번 훈련이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며 남북고위급 회담 무기한 연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브록스 한미연합사령관과 송영무 국방장관은 방어적이고 연계적인 훈련이라며 예정된 25일까지 지속할 뜻을 밝혔다.

판문점 선언의 약속에 따라 북은 핵시험장을 폐기하고 있는 이 마당에 한미당국이 최신예 공격형 스텔스 전투기를 사상 최대로 동원하여 북한을 폭격하는 훈련을 두고 방어적이고 연대적이라고 하는 변명을 우리 국민이 믿어야 하나? 북한이 받아들일기를 바래야 하나?

남과 북이 굳게 손을 잡고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지금까지도 대결 시대의 적대행위를 지속하면서 북한이 양태했다는 핑계를 대는 것은 판문점 선언의 당사자로서 위할 일장과 태도가 아니다.

한미당국은 판문점 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한미군사훈련 맥스언더를 즉각 중단하라.

2018년 5월 16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학술포럼, 가톨릭농민회, 국민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주진보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교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농민약국,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국문제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반전평화연대(준),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주권회의, 울산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민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 전태일노동대학, 전대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충북진보연대(준), 통일광장, 통일여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어머니회, 평화의 품을 여는 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행동, 평화협정운동본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유족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페미니스트 대통령’ 공약 지키는 남은 4년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었다. 현직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기간도 없이 본주례 국정 공약을 수습해 왔다.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정권안락권 원 정부의 지난 1년은 우선적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무너진 민주주의 시스템을 복원하는 시간이었다. 최근에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큰 진전을 이루었다. 대통령에 대한 유대감이 높은 지지율은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갈망해왔는지를 방증한다. 민주주의의 회복, 한반도 평화 정착은 여성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들이므로 우리 여성들 또한 지난 촛불혁명의 주체로서 이에 대한 활동을 멈추지 않아왔다면 바, 문재인 정부가 이룬 진전에 대해 환영을 표한 바 있다.

촛불광장에서 여성들은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적폐인 ‘성차별’을 청산하기 위하여, 새로운 민주주의는 ‘성평등 민주주의’라고 외쳤다. 정치권력의 교체만으로는 여성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성평등’이 빠진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구인지는 올해 초부터 전 분야에 확산된 미투 운동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미투 운동이 요구하는 것처럼 성별권력관계를 변혁적으로 해소하고,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해소해야만 여성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에 여성들은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외쳤고, 문재인 대통령은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국정 과제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서 ‘성평등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과제는 가시화되지 않았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중심’에서 ‘여성’은 소외되었고, ‘성평등’이라는 가치와 철학은 보이지 않았다. 집권 초기 인선과정에서 젠더 관점이 부재한 인사에 대해 여성계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선을 취소하지 않는 등, 인사검증 과정에서 부족한 젠더 관점을 드러낸 바 있다.

여성 대표성 분야에서는 최초로 여성 장관직 임명 30%를 달성하였고, 외교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여성 불모지였던 부처에 최초의 여성 수장을 임명해 유리천장을 깨뜨린 점은 어느 정도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최근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문위원회 구성이나 대통령 거헌안 마련을 위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집권 초기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 국정 주요 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 독립된 행정기관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서 여성의 참여 비율은 매우 낮았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여성계의 합력사할 있었던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임명직, 선출직 공무원에서의 남녀의 동등 참여 부문도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서 빠졌다.

미투 운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계 속에서도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1월 말 여성가족부는 검찰 내 성폭력 사건 고발을 계기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렸고, 이

후 미투 운동이 더욱 본격화되자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협의회 구성·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범부처를 아울러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가기에 여성가족부의 권한과 예산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문 정부가 미투 운동이 요구하고 있는 성차별·성폭력의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서는 전 사회적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미투 운동에 생색내기에만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성별권력 구조를 변혁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근본 규범인 헌법에서부터 성평등국가원리가 명기되고 성평등 추진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나, 개헌과정에서 성평등은 실종되었고, 성평등 추진체계 분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에 아예 국정과제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 여성들의 고용·노동 상황도 여전히 열악하다. 성별임금격차 등 십 수년째 세계 최악의 지표는 차치하더라도, 최근 밝혀지고 있는 금융계와 공기업들의 조직적 고용차별은 입법에서부터 여성을 배제하는 뿌리깊은 성차별을 드러내 여성들을 절망하게 했다.

낙태죄 폐지 및 재생산권 보장에 대해서는 청와대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낙태죄가 여성인권권을 침해하는 현실을 인지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유엔 인권이사회와 사회권 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의 낙태죄 폐지 권고 이행 요구에 대해서는 여권의 낙태죄 폐지를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대립 구도로 상정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시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마련도 법무부가 공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 '성적 소수자'란 이름을 아예 목록에서 삭제해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앞으로 가야할 길이 더 멀다. 문재인 정부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성평등'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특화 정책이 아니다. 성평등은 성별권력관계를 드러내고 깨뜨려,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국정 운영의 철학이자 기본적인 가치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은 이러한 성평등 가치가 일상의 규범이 되어야 가능하다. 앞으로 남은 4년이 문재인 정부가 '페미니스트 대통령'으로서 공약을 지켜가는 시간이 되길 촉구한다.

우리 여성들은 성평등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응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5월 10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남여성회 기독교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을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을

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겐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
 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
 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협재하는주부모임

[성명]

**5.18 국가가 자행한 성폭력과 성고문,
철저하게 진상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라**

최근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제영군과 수사관들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성고문에 대한 피해 여성들의 미투운동이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조사와 연구 등이 진행되어왔지만, 여성들의 성폭력, 성고문 피해는 지난 38년 동안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가려져 왔다.

윤창찬 5월민주여성회 부회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말해왔지만, “전체 두경이 중요하다고 하나까 우리 예기한 내세우질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폭력 문제는 민주화 운동 안에서도 늘 ‘대의’를 위해 후순위로 밀려야 하는 부차적 문제로 취급되어 왔다. 여성들의 피해 경험은 가부장적 가족과 사회, 국가에 의해 중첩적이고 체계적으로 은폐되어 온 것이다.

40여년 가까이 침묵을 강요당한 채 홀로 피해를 안고 살아온 여성들은 그 긴 세월동안 누구에게도 사과를 받지 못했다. 5.18민주유공자 김선옥씨는 미투 운동으로 용기를 내었다고 말했다. 이제 여성들이 세상을 향해 피해를 증언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의 미투 운동은 강간의 역사이자 가부장제 사회에서 국가폭력과 남성의 성폭력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보여준다. 전시, 분쟁 상황에서 여성들은 다른 피해와 더불어 성폭력 피해를 중첩적으로 겪게 된다. 가부장적인 성별위계 사회가 이러한 여성들의 피해 경험을 어떻게 은폐하고 사소화 시키는지 우리 여성들은 수 십 년 간 보아왔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은 성별권력관계에 의한 뿌리깊은 성차별적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확인하지 않고는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이제 국가가 여성들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여성들은 앞으로의 진상규명을 주시할 것이다. 올해 9월 시행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가해자인 제영군과 경찰 수사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여성들의 경험과 성폭력 피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밝혀 과거에 대한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

5.18민주화운동에 참가한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증언은 현재 진행 중인 미투 운동의 열장선에서 이루어진 만큼 사회 곳곳에서 누적되어 온 피해를 드러내는 미투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우리 사회의 성별위계에 의한 성차별,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미투 운동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2018년 5월 14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
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
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울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
산여성회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함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
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강제인연합 한국여신
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낙태죄는 위헌이다

2018년 5월 24일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이 열린다. 2012년 현재 재판관들의 평행한 의견 대립 속에 함연 결정이 난 후 6년 만에 낙태죄 위헌 문제가 다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게 됐다.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상황은 6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낙태죄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가 매우 거세며,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사회적 여론 또한 매우 높다. 수많은 여성들이 거리에서 낙태죄 폐지를 외치며 '검은 시위'를 이어왔고,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에 관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한 달 만에 23만여 명이 서명했다. 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만16세~44세 여성들을 대상)에서는 77.3%가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과 임부의 건강이라는 본래의 법익을 실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을 임신중단과 지속이라는 과정 속에 고립시킨다. 이는 결국 안전하지 못한 임신 중산으로 이어져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

5월 2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현행 형법이 임신중단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신중단 시술이 불법적·음성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로써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 재생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한다. 여성들이 낙태죄 존치로 고통받는 현실에 주목한 여성가족부의 입장을 환영한다.

반면, 법무부는 "통상 임신은 남녀 성교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강간 등의 사유를 제외한 자의에 의한 성교는 용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는 임신중단을 마치 여성의 '자유로운 성교 후 책임지지 않는 행위'인 양 전제하는 것으로, 임신 중단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현실적 맥락과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시대착오적이며 반인권적 견해이다. 이미 임신중단 비범죄화는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주요한 흐름이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지난 3월, 2011년 권고에 이어 한 국정부에 '낙태 비범죄화 및 수술 이후 질 높은 지원 체계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보장 의무를 오래도록 방기하고 있다.

낙태죄는 모두를 위해 폐지되어야 한다. 현행 낙태죄는 임신중단을 줄일 수 없고, 위협한 시술을 양산할 뿐이다. 임신을 지속할 수 없는 수많은 사회적·경제적 조건들 속에서 여성만을 처벌하는 낙태죄는 여성들의 삶을 뿌리부터 위협하고 있다. 임신의 지속과 중단·출산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성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낡은 관점의 낙태죄는 폐기되어야 한다.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들의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이다. 낙태죄 폐지는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존치가 실제 여성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증언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1953년의 낡은 틀로는 2018년의 평등과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촛불혁명 시대의 시대정신에 맞게 모든 이들의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들은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낙태죄 폐지를 위한 서명을 이어가는 등 낙태죄가 폐지될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5월 24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남여성회 기독교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권태경치연구소 여.새.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논평]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북미회담이 신속히 개최되어야 한다.

5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남북 정상 회담 개최 이후 한반도 평화 정착을 고대하고 있던 여성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은 미국의 이같은 일방적인 통보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한반도 평화는 세계 평화의 시작점으로, 북미회담을 고대하고 있던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여성들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열망한다. 이러한 여성들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미국과 북한은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한국 정부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역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북미회담이 신속히 개최되어야 한다.

2018년 5월 2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남여성회 기독교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절대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성명]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피해자 구제 및
재판 독립과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와 추가 문건 공개로 법원행정처 및 그 일부 구성원들의 사법농단의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특별조사단은 '법관 사찰 문건은 발견되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블랙리스트 문건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청와대와 비밀리에 광범위한 교감을 시도하며, 개별 사안들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물 밑에서 예측불허의 물줄기 전환이 시도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을 해왔음이 관련 문건에서 언급되었음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자의적으로 조사대상 문건 410개 중 174개만을 공개하고, 법원행정처의 권한 범위를 넘여선 세월호 사건의 재판 관찰과 해당 개입 의혹, 특정 단체 대응 전략이나 대통령 보고서 등 특정 사건에 대한 개입이나 탄압, 청와대와의 부적절한 교감의 의심되는 문건의 다수에 대해서는 이를 비공개 처리했다.

이러한 특별조사단의 조사내용, 이후 대법원장의 조치 발표 및 자의적인 문건 공개 등의 조치는 개별 관련 사안 피해자들이나 사법부 내부의 사찰 대상 법관 및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은 물론 큰 사회적 지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헌법상 보장된 사법부 독립은 국민들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위한 것으로, 독립된 재판을 가능토록 하기 위해 법관들을 내부 사법행정과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사법부의 이번 결과 조치는 사법부 독립을 어긴 사법농단 관련자들을 오히려 사법부 독립이라는 미명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가당혹적이다.

이번 사법농단은 법원행정처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 자신들의 방침과 어긋나는 판결을 하거나 발언을 한 법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찰로 그 법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재판의 독립성, 사법부의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망가뜨렸다는 점에서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공간을 무너뜨렸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차별적 구조로 인한 피해자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법률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였으며,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였다. 그러므로 이번 사법농단은 명백한 위헌적 행태이다.

사법농단의 직접적인 피해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 피해자, 과거사 피해자 등 인권침해로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더 크게 입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원심에서 승소하였으나 2015년 대법원의 원심 파기로 인하여 크나큰 고통을 받았다. 이미 승

소금으로 받았던 임금 반환 때문에 1억원 가까운 채무에 내몰렸고, 결국 소송 당사자 중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KTX 태고 승무원들의 복직 투쟁은 12년이 흐른 지금 까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아직 한 명도 복직되지 못했다. 이들 승무원들은 특별조사단의 발표 이후 대법원의 대법정을 거쳐해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나도 모르는 일”이라며 반쯤을 했다. 또한 지난 5일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판사회회에서 “수사의뢰는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고 의결했다. 자정없는 이러한 태도는 절망스럽다. 사법부 독립은 재판의 독립과 이를 지키려는 법관의 독립을 지키려는 것이지 스스로 사법부가 견제해야 할 행정부와 대통령 등 권력기관과의 야합이라는 헌법과 법률위반 행위를 감싸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지금 사법부는 스스로 어진 재판 독립과 법관 독립 및 사법부 독립을 바로 세우고 땅에 떨어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들의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부는 셀프조사로 관련자들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나 특별검사 등에 의한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선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 철저한 반성과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만이 훼손된 사법부 독립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사법부는 먼저 사법농단 관련 410개 문건을 완전한 형태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사법농단의 관련자들을 스스로 고발해 관련자들의 직무를 배제하고 철저히 징계해야 한다. 나아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KTX 태고 승무원들을 비롯한 사법농단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반 조치들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KTX 태고 승무원들을 비롯한 사법농단의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와 재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그들과 연대하며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사법부와 정부의 빠른 조치를 촉구한다.

2018년 6월 8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남여성회 기독교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울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권더경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역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성전화 한국여성정재언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정명서]

여성할당제를 악용한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의회 비례대표 후보 부부 동반 공수 등록을 규탄한다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부부가 수원시의회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에 각각 3, 4순위로 나란히 등록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당선이 최대 3명까지 가능할 것을 예상하여 비례대표 3순위인 아내가 당선되면 바로 의원직을 사퇴한 후, 4순위인 남편이 이를 승계하는 시나리오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비례대표 후보 남녀교호순번제 규정을 어길 경우, 동법 제49조 제8항에 따라 선관위에 후보 명단 등록이 불가능한 점을 피하기 위한 교묘한 술책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 정치 참여 확대와 성평등한 정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여성할당제를 악용하는 이러한 정당의 공수 행위를 소리 높여 비판한다.

여성할당제는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라는 전통적인 인식과 남성 중심 기득권 정치 구조로 인하여 여성들의 정치 진입 및 정치 경력 지속이 어려운 현실을 토대로,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와 정치 영역에서의 성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1990년대 성 주류화 전략의 확산과 함께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되어 현재는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실시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에 감정치 우대조치를 규정하고 2000년 「정당법」에 여성후보공천할당을 명시한 이래 단계적으로 할당제가 발전해왔으며, 그 이면에는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여성단체들의 피말린 노력이 있었다.

한편, 비례대표 위반에 대한 특별한 벌칙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여성 후보 공천에 관하여 요식적이거나 위법적인 태도로 정치관계법에 명시된 할당제 규정을 피해가는 것은 공수를 부려왔다. 특히, 여성 후보와의 이면 계약으로 여성 후보가 선출된 후 사퇴하게 하는 관행이 암암리에 만연어져 왔다. 그 결과, 현재 정치관계법의 틀 안에서 여성 의원이 없는 의회가 있어서는 안 되나, 2010년 선거에서 정당 추천을 받은 여성후보 중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17건에 달했고, 전라남도 함평군의 경우 반복적으로 하반기 의회에 여성 의원이 부재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이번 수원시의회 부부동반 비례대표 공천의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에 명시된 비례대표 후보 남녀교호순번제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또 다른 사례이다.

더구나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3순위까지 민주당 후보가 차지해 무인 이씨가 당선될 경우 이씨가 비례직을 사퇴하면 남편 김씨가 승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며 "우회적이기는 하지만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는 민주당 관계자의 발언은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할당제에 대한 전복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성평등 민주주의에 대한 집권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방증한다.

여성할당제는 역사적으로 남성이 중심이 되는 보편 시민의 위치에서 배제되어 온 여성들이 정치 영역에서 동등하게 대표되고, 나아가 성평등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이다. 정당들은 사회 각 영역에서 수많은 성폭력·성차별을 가능케 했던 남성 중심 사회 구조의 변혁을 위해서는 남성 독점 정치 구조 해체와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가 첫걸음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자각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여성할당제를 엄격히 지켜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한 최소한의 임무를 수행하길 바란다.

2018년 6월 12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울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어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희전화 한국여성강제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논평]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 외면한 한국 유엔 총회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를 위한 결의안'에 기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책임 방기

지난 6월 13일 열린 유엔 총회 제10차 긴급 특별 세션에서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를 위한 결의안(A/ES-10/L.23)에 기권했다. 어떤 말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무책임한 선택이다. 최근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무력 사용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보호 조치 촉구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는 이번 결의안은 찬성 120, 반대 8, 기권 45로 최종 채택됐다. 이는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이 유사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총회에서 다시 제안된 것이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외면하고,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과 이사국을 역임한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역할을 포기한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평화는 한반도의 국경에 멈춰 있다는 말인가.

비무장한 팔레스타인 시민들을 향한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학살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3월 30일 가자지구에서 시작된 '귀환 대행진(Great March of Return)'은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권을 요구하는 비폭력 시위였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행진 첫날부터 저격병과 탱크를 배치해 비무장 시위대를 무차별 진압했다. 팔레스타인 언론에 따르면, 시위가 시작된 3월 말부터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인 135명이 사망하고, 약 8,500여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중에는 미성년자, 기자, 심지어 부상자를 치료하던 의료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5월 14일 미국 대사관 예무살범 이전 개관식이 열렸던 날에는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팔레스타인 시위대 최소 5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10년 동안 가자지구를 3차례 대규모로 침공해 민간인 수천 명을 학살해왔고, 이번 비무장 시위대 학살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 현실을 앞에 두고, 도대체 결의안에 기권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동안 한국은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던 이스라엘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거나 중단시키려는 노력에 최소한의 동참도 하지 않아 왔다. 지난 2006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민간인 살상, 집속탄과 백인탄 사용 등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의 조사위원회의 구성 표결에서 이사국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기권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건설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고자 했던 유엔의 표결, 2014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조사 결의안,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 의 이스라엘 무기금수조치 결의안에도 기권했다.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 행위가 반복된 데는 한국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과, 미국의 눈치를 보며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비판에 소극적인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비판하고 더이상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을 막으려는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이스라엘군의 비무장 시위대를

함한 무자별적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나아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가자지구 봉쇄와 팔레스타인 군사 점령도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한다.

2018. 06. 17.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난민인권센터, 녹색연합, 다른 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발전대안 피다, 4.9통일평화재단, 생애지평 연구소, 서울인권영화제, 시민평화포럼, 옥바라지선교센터 현장파견장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불안정보동철재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피스모모,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어성당연합,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D), 홍사단 민중통일운동본부 (총 43단체)

■ 표절현황

완성 (120개국) : Afghanistan, Algeria, Andorra, Angola, Armenia, Azerbaijan, Bahamas, Bahrain, Bangladesh, Barbados, Belarus, Belgium, Belize, Benin, Bhutan, Bolivia, Bosnia and Herzegovina, Botswana, Brazil, Brunei Darussalam, Burkina Faso, Burundi, Cabo Verde, Cambodia, Chad, Chile, China, Colombia, Comoros, Costa Rica, Cote D'Ivoire, Cub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jibouti, Ecuador, Egypt, El Salvador, Equatorial Guinea, Eritrea, Estonia, Finland, France, Gambia, Georgia, Greece, Grenada, Guinea, Guinea-Bissau, Guyana, Iceland, India, Indonesia, Iran, Iraq, Ireland, Jamaica, Japan, Jordan, Kazakhstan, Kenya, Kuwait, Kyrgyzstan,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ebanon, Lesotho, Lichtenstein, Luxembourg, Malaysia, Maldives, Mali, Malta, Mauritania, Mauritius, Montenegro, Morocco, Mozambique, Namibia, Nepal, New Zealand, Nicaragua, Niger, Nigeria, Norway, Oman, Pakistan, Peru, Portugal, Qatar, Russian Federation,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udi Arabia, Senegal, Serbia, Sierra Leone, Slovenia, Somalia, South Africa, Spain, Sri Lanka, Sudan, Suriname, Sweden, Switzerland, Syrian Arab Republic, Tajikistan, Thailand, Timor-Leste, Trinidad and Tobago, Tunisia, Turkey, Uganda, United Arab Emirates, United Republic of Tanzania, Uruguay, Uzbekistan, Venezuela, Vietnam, Yemen, Zambia, Zimbabwe

반대 (8개국) : Australia, Israel, Marshall Islands, Micronesia(Federated States of), Nauru, Solomon Islands, Togo, United States

기관 (45개국) : Albania, Antigua and Barbuda, Argentina, Austria, Bulgaria, Cameroon, Canad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Dominican Republic, Ethiopia, Fiji, Germany, Ghana, Guatemala, Honduras, Hungary, Italy, Latvia, Liberia, Lithuania, Malawi, Mexico, Monaco, Netherlands, Panama, Papua New Guinea, Paraguay, Philippines, Poland, Republic of Korea, Romania, Rwanda, Saint Lucia, Samoa, San Marino, Singapore, Slovakia, South Sudan,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uvalu, United Kingdom, Vanuatu

성평등한 지역 정치 실현이 시대적 과제이다.

2018년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개최되었다. 이번 선거는 2017년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새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의 선거이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남성이 중심이 되는 보면 시민의 위치에서 늘 배제되어 온 여성들은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고 외치며 성평등한 정치의 실현을 요구해 왔다. 특히, 2018년 상반기 정국을 휩쓴 #미투 운동에서 드러난 한국 사회의 극심한 성차별·성폭력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을 위해서는 남성 중심 정치 구조의 해체가 우선 과제이며, 이번 선거는 이를 위한 첫 시험대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선거 결과를 평가해 볼 때, 정당들은 성평등한 정치 실현을 위한 여성들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이번 제7대 지방선거 결과 광역의회, 기초의회의 여성 당선인 비율은 각각 19.4%, 30.7%로 2014년 14.3%, 25.2%에 비하여 다소 진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총괄 지휘하는 자치단체장 급의 선거에서 여성은 이번에도 역시나 보이지 않았다.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총 71명 중 여성 후보는 6명(8.45%)에 불과하였으며, 당선인은 17개 시도 모두 전원 남성이다.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중 749명 중 여성 후보는 35명(4.67%)이며 여성 당선인은 총 226명 중 8명으로 3.54%인데, 이는 2014년의 3.98%보다 오히려 감소한 결과이다. 12개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후보 46명 가운데 여성 후보는 고작 3명(6.52%)이었으며, 당선자 12인 모두 전원 남성이다.

이러한 실망스러운 선거 결과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목격되었던 많은 문제점들과 맥을 같이 한다. 우선, 정치관계법 및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명시된 여성 후보 추천 할당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 정당들은 여성 후보 공천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공직선거법의 지역구 여성후보 공천 30% 이상 할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 및 기초의원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 비율은 각각 14.53%, 18.65%에 불과하다. 심지어, 수원시의회 부부동반 공수 등록 등 요식적이고 위법적인 태도로 할당계 규정을 피해가기 위한 정당의 술책도 역시 이번 선거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이미 지역에 깊숙이 뿌리박힌 남성 가독권 중심의 정치 네트워크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여성 정치인들이 정당 안에서 권력과 자원을 쌓아갈 수 있도록 정당의 의지와 역할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은 '미망한 여성 후보가 없다'는 구차하고 위선적인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민들을 대표하고자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공적 발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아무런 자각 없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 여성, 청소년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비하하고 차별하는 발언을 아무런 제재 없이 일삼거나, 표를 위해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들에 기꺼이 편승하는 장면이 비일비재하게 목격되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성평등 및 여성 인권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한 20대 여성 페미니스트 후보에 대한 SNS 상의 인신공격, 항의전화, 폭언, 잇달은 벽보 및 현수막 훼손 등의 사건도 있었다.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기대어 표를 얻고자 하는 후보들의 존재와 함께, 젊은 페미니스트 여성 정치인에 대한

이러한 무차별적인 공격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여성 및 소수자 혐오의 민낯을 보여준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만한 점도 있다. 페미니즘과 성평등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소수정당의 20대 여성 페미니스트 후보들이 여성 혐오에 기반한 물리적 위협과 공격에 굴하지 않고 선거를 완주하고 의미 있는 득표를 거두었다. 이는 앞으로 한국 사회의 선거와 정치가 나아가야 할 미래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중장년 남성 일색 후보들로 대표되는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여성 대표성과 성평등 정책에 대한 상상력이 무척이나 미진한 기존의 정당들은 이들의 존재와 메시지를 본보기 삼아, 앞으로의 정치에서 성평등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깊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의 혐오 선동 행위에 맞서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개인 및 단체들이 '지방선거혐오대응네트워크'를 결성해 '혐오와 민주주의는 함께 갈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평등과 인권의 목소리를 키워갔다. 이는 혐오와 차별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민주주의는 더 이상 선연적 구조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일상에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존엄성과 인권이 실현되는 성평등한 민주주의, 성평등한 정치가 시대적 과제이다. 정당들은 사회 각 영역에서 수많은 성폭력·성차별을 가능케 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과 배제를 유지시켜 왔던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을 위해서는 남성 중심 정치 구조의 해체와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가 첫걸음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젠더, 계층, 지역, 연령, 학력 등에 관계없이 다양한 시민들이 정치에 대표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의석 수 확대 등 정치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성평등한 정치를 위한 정당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역할이 필수적이다. 특히, 능력과 경험, 자원을 갖춘 여성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정당 내에 만들어야 하며,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여성할당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새롭게 구성될 지방의회는 성평등한 민주주의를 향한 유권자들의 열망을 기억하면서, 성평등한 지역 정치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루어야 한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2018년 6월 1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으로부터 시작하라!**

정부가 지난 1월 9일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 마련계획을 발표하고 7개월 동안 아무런 움직임 없이 지내온 동안 벌써 5명의 피해자가 우리 곁을 떠났다. 생존하고 계신 28명의 피해자들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조치 등 원상회복 조치를 통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에 결집되어 있고 있는 2015한일합의가 무효화되고, 정의로운 해결이 이루어져 '죽기 전에 일본정부로부터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병마와 하루하루 싸우고 있다.

그러나 화해치유재단은 설립 존재부터 피해자의 의사와 상간일이 박근혜 정권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설립되었고, 작년 6월 이후 1년 이상 목적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가 충분히 설립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 2018년 7월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화해치유재단은 아무런 사업도 진행하지 않은 채로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로 매월 2750만원을 사용하며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원을 아급아급 축내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가족부는 7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10억 원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여 여성가족부가 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에 편입하겠다'는 결정을 했다. 이 10억 원 예산 편성은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절대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언급되지 않았기에 피해자를 애제모호한 상태로 여전히 기다리지만 하는 결정이었다.

한국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문제가 사급하여 지금 참고 있지만 언제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김복동 할머니의 말씀을 들어라! 언제까지 시간을 지체할 것인가! 이 기다림은 이미 폭력이다.

한국정부는 지체 없이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조치를 이행하고 스스로가 약속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아물 수 있도록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한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

화해치유재단은 이미 그 존립의 근거가 정당성을 잃었으며, 목적과 활동의 기반도 상실되었다. 무엇을 더 기다리고 있는가? 하루 속히 해산의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들의 가슴에 결집함을 제거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는 지난 1월 9일 정부가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 마련계획을 발표할 때 피해자에게 했던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결집들로 작용하고 있는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하라!

우리는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되는 그 날까지 이 외침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8월 6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신교회전국연합회, 기독교민회, 마리몬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아이돌생활협동조합, 여성교회, 이화민주동우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전주 평화의소녀상건설시민추진위원회,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비 작가 김서경, 윤성,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대회 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밀모임, 감리교 전국여교역자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당진청소년평화나비, 대한불교청년회, 민주사회를위한전국고수협의회, 서울강서양현여성회, 수원평화나비, 안양 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정의당 여성위원회, 천주교 전국행동, 평화나비 네트워크, 평화나비대전행동, 평화비경기연대, 한배평화재단, 흥사단,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향린교회

은행권 채용성차별 근절대책에 대한 여성·노동계 및 청년 여성 당사자 의견
: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결정을 앞두고

최근 언론에는 은행연합회가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2018년 6월) 중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확정하여 은행연합회 회원사 19개 은행이 모두 도입'하도록 할 예정임이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4월, KEB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에서 채용단계에서부터 성차별적 점수조작과 최종 합격자 성비결정 후 남성을 뽑기 위해 우수한 여성지원자를 탈락시켜왔다는 것에 분노한 여성·노동단체 및 당사자 청년 여성들은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을 조직하여 해당 은행에 항의 방문 및 정부의 근본적인 성차별 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제 관련한 대책이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으로 가시화되는 시점에 이르렀으나 채용성차별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인지 우려되어 여성·노동계 및 청년여성 당사자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전달하고자 합니다.

현시점에 채용성차별 대책의 핵심은 '채용분야 또는 직무별로 채용절차의 대 단계를마다 성비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책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제까지처럼 최종 합격자 성비를 내정하여 점수를 조작하거나 성별 커트라인을 달리하는 등의 성차별적 관행이 지속되어도 여전히 알 수 없는, 여성에게는 잡음이 채용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이미 은행권 지원자 중 여성 지원자는 꽤 큰 폭으로 점수를 낮게 조작하여야할 정도의 실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의 확정을 통해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려 하는 것이라면 모든 과정에서 성비를 공개하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성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기업, 모범기업으로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순기능과 이점에도 불구하고 '성비 공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채용성차별을 자행하려는 음모가 숨어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성차별을 근절하는 시작이 될 수 있는 '성비 공개' 내용을 포함한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 규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8년 6월 14일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

녹색당,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여성염민중당,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대전충청지부, 전북지부, 광주전남지부, 대국경북지

부, 경남지부, 울산지부, 부산지부),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여성위원회, 청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남여성회 기록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울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전더광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선출 시 여성할당제 폐기는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최고위원회는 차기 산출직 최고위원 5명 중 여성 1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의 안을 폐기하기로 의결하였다. 앞선 6월 29일 전준위가 차기 당 지도부 선출 시 기존의 여성·청년 등 부문별 최고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여성 후보자 1명을 산출직 최고위원으로 보장하는 안을 발표하였으나, 이 안마저도 폐기하기로 당 최고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더민주 최고위원회의의 이러한 결정이 '성평등·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며 성평등 실현에 관한 당헌 제8조에 전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으로 보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당의 핵심의결기구이자 지도부인 최고위원회에서 여성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치 영역에서 다양한 시민들이 대표되어야 하는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나,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은 기존의 정치 제도 하에서 과소 대표되어 왔고 이들의 의제 또한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되어 왔던 긴 역사를 우리는 지금까지 목도해 왔다. 더욱이, 우리는 올해 상반기 '미투 운동'을 통한 여성들의 절규를 기억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수많은 성폭력과 성차별, 그리고 이를 유지시켜 왔던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기 위해서는 남성 중심 정치 구조의 해체 및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가 우선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아직까지도 기독교 남성 세력이 중심을 이루는 정당 내 주요 의사결정기구에서 여성 정치인들은 소외·배제될 수밖에 없기에, 여성 참여를 정당 내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더민주의 여성·청년 등 부문별 최고위원 제도는 50대 남성 기독교 중심 정치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 의제들을 정치의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정치의 정상화'를 목표로 한 당 혁신안의 일환으로 2015년 도입된 조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민주의 정당 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에 관한 목표는 커녕, 그 필요성조차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무엇보다도, 성평등한 민주주의 실현에 대하여 집권 여당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이 있는 더민주가 최고위원 선출 시 여성할당제 폐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그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더구나 이러한 결정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가 지정한 '양성평등 주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우리는 더욱 분노한다.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이 있기 하루 전,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양성평등 주관을 기념하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국민의 기본적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당 지도부 구성 방식을 바꾼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제시한 '성평등한 민주사회 실현'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더민주의 최고위원 여성할당 폐기 결정을 어떻게 납득할 수가 있단 말인가? 더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더민주의 현 최고위원 선출 방식이 정당 내 다양한 구성원을 더욱 민주적으로 대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당의 개혁안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고위원회의의 이 같은 결정은 더욱 이

해하기 힘들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고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이 당헌에 전면적으로 위배된다는 점이다. 더민주의 당헌 제8조는 주요 당직 및 각급 위원회의, 지역구 선거 후보자 추천에 여성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스스로 당헌을 어겨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당에 대한 신뢰를 배반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더민주는 집권여당으로서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직시해야 하며, 차기 당 지도부 구성에서 최고위원의 여성 비율이 30퍼센트 이상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기독교권 남성 중심 정치 구조 속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정당 내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시민들이 대표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정당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2018년 7월 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생명대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권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정부는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변혁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 박원민 행정관의 여성신문사 소송 1심 판결에 부쳐

지난 7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원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여성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여성신문사에게 박원민 행정관에 일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내가 바로 박원민의 그 ‘여동생’이다(7월 25일자)’ 기고문을 게재한 여성신문 홈페이지 기사와 트위터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원민 행정관이 여성신문사를 상대로 삼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법원의 판단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번 판결이 공직자의 성평등 인식과 견미 감수성 변화가 더욱 요구되는 현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지 못한 것으로, 우리 사회의 성폭력·성차별적 사회구조에 대한 변혁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지난해 여성단체들은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강권문화를 정당화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내용의 여러 저서를 출간한 이력이 있는 박원민 행정관이 공직을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그의 퇴출과 성평등 인사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여성들의 이러한 외침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오히려 그를 변호하기에 급급했다. 더구나 최근 박원민 행정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찾는 오면 놀아주겠다”며 반대한 청와대의 행태는 청와대가 여전히 여성들의 이러한 요구에 귀를 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신문의 기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청구한 박원민 행정관의 행위는 기고문이 실리게 된 맥락과 여성들의 문제제기에 주목해 성찰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 법리적 문제로 그 프레임을 바꿈으로써 여성들의 목소리를 삭제해버렸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소송을 취하지 않고 유지해 온 박원민 행정관의 태도와 여성들이 그 동안 문제제기에 온 맥락을 읽어내지 못한 사법부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이 판결이 가져올 반동적 효과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럽다.

이제부턴이라도 정부는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변혁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야 한다.

2018년 7월 13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최초로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최영애 인권위원장 후보 내정을 환영하며
-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권과제와 인권위 혁신을 수행하기 바란다**

정확대는 오늘(7/17)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을 차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 후보로 내정했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인권위원장 인선과 시민사회 참여를 위한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인선 대응 연석회의)'는 최영애 인권위원장 후보의 내정을 투명성과 독립성, 다양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인권위원장 후보의 내정은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공개적인 자격기준과 공모에 따른 심의과정을 거쳐 추천한 사람 중 한 명이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에 인권위원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가 없이 지명·선출권자만 명시돼 지명권자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인권위원 인선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현명질, 유명하 같은 무자격 반인권 인물이 필선헌선으로 인권위원장이나 인권위원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이전 IOC)은 수차례 한국 인권위 등급심사를 보류하였고, 2016년에는 단일한 독립 선출 위원회가 일관성 있는 선출 절차를 적용하여 인선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번 최영애 인권위원장 후보의 내정은 국내외 인권시민사회의 권고를 이행한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인권위원 임명과정에서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성을 높인 후보추천기구를 구성해 인권위원을 인선하는 제도가 되길 바란다.

둘째 최영애 후보는 최초의 비법조인 여성 인권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역대 인권위원장은 남성 법조인이었다. 특히 인권위의 구성이 법조인이 많아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국내외 인권시민사회의 우려가 많았는데 이를 변화시킬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

우리는 최영애 인권위원장 후보가 시민사회의 바람을 반영해 인권위 혁신위원회가 권고한 과제를 이행해나가길 바란다. 최 후보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인권위원으로 재임한 적이 있다. 인권위에 대한 신뢰와 역할, 기대가 과거와 다르다는 점에서 무게로운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원장 인선 대응 연석회의가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인권활동가들이 바라는 인권위원장은 '시민사회와 잘 소통하고 소수자인권과 젠더감수성을 바탕으로 여론이나 정치권 눈치를 보지 않고 인권원칙과 독립성을 지키는 사람'이다. 특히 인권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과 혐오대응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인권위가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는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가는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2018. 7. 17.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인권위원장 인선과 시민사회 참여를 위한 연석회의

(약칭 인권위원장 인선 대응 연석회의)

참여단체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장애인,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 벚꽃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실모암사람들, 우통민열사추모사업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사)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인권연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킹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한국제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32개 인권단체)

**강정마을 총회 결정 무시한 채 강행,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만드는 해군의 국제 관함식 반대한다**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제 관함식을 강행하려는 모습은 11년 전 해군기지 유치 과정과 다르지 않다

해군은 지난 3월 23일 강정마을회에 국제 관함식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며 '갈등 해소'를 위한 차원에서 관함식을 개최할 것이며, 마을에서 반대한다면 기존에 해왔던 대로 부산에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마을회에서는 지난 3월 30일 임시마을총회를 개최했다. 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로 인해 마을 갈등이 심각한데, 관함식 유치를 묻는 것 자체가 또다시 찬반 갈등을 불러올 것'을 염려하며, 국제 관함식의 '대규모 군함의 정박으로 인한 어장 오염'과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로 제주도가 군사기지의 섬으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해 관함식 유치 반대 결정을 했다.

막상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해군은 마을의 의견을 물어본 것일 뿐이라며 마을 주민을 개별 접촉하여 관함식 유치를 회유하고 다녔다. 이는 11년 전 소수의 주민을 회유해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된 해군기지 유치 과정과 똑같았다. 이런 일들이 노무현 정부에 이어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복되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마을총회 결과를 몇몇 주민을 회유하여 뒤엎는 일이 과연 강정마을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생을 도모하는 일인가? 아니면 상처를 들추시고 갈등을 조장하는 일인가?

마을 주민들은 무엇보다 진상규명과 주민들 간의 갈등 회복을 염원하고 있다. 또다시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국제 관함식이 강행되는 것은 해군기지로 인해 고통을 겪는 강정 주민들의 마음에 두 번 대못을 박는 것이나 다름없다.

해군의 생색대기용 행사로 주민들의 아픔은 치유될 수 없다

해군은 이번 관함식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상생과 화합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지역 주민들은 상생과 화합을 위해 '비민주적인 해군기지 유치신청과정'의 진상규명과 중앙정부 차원의 사과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청은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지어 정부와 해군 스스로 홍보해오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약속도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15만톤 크루즈가 입항한다면 터미널은 아직 개통되지 않았고,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할 관제권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았다. 정부와 해군은 왜 군이 완공되지도 않은 항만에서 행사를 치르겠다는 것인가? 혹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만들어주었다면 약속을 공공연히 뒤집고 그곳을 제주해군기지로 전 세계에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은 아닌가?

서태평양 핵잠함모함, 핵잠수함, 순양함 등의 각종 군함이 제주해군기지에 모여 사열을 하고, 함상 오찬을 하며, 함정 공개를 통해 각종 군사 장비와 시설을 홍보하는 이 행사가 도

대체 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해군이 진심으로 지역 주민의 아픔에 함께하기보다 돈 몇 푼으로 이 마을 사람들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참을 수 없다. 갈등 해결과 상처의 치유를 진심으로 원한다면서 굳이 다른 곳에서도 열 수 있는 행사를 주민의 뜻에 반해 이곳에서 강행하면서 돈 몇 푼으로 마을총회 결과를 뒤집기 위해 마을을 분열시키는 일 따위는 시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군함 사열 행사인 국제 관함식은 평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는 전 세계적으로 평화의 시대를 다시 쓰고 있다. 전 세계의 눈과 귀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온 국민이 평화체제를 한 목소리로 염원하고 있는 이때, 국민의 귀중한 세금(약 36억 원)으로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 군함을 사열하고 함포를 쏘는 국제 관함식은 세균 낭비이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남북관계의 변화를 미처 예상하지 못한 채 사업이 기획되었다면 이제라도 평화의 시대에 걸맞게 행사를 중단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다. 제주는 '세계 평화의 섬'으로 선포되었다. 그런데 관함식을 제주에서 개최하는 것은 제주를 전 세계에 해군기지의 섬, 전 세계의 해군이 인정하는 군사요충지로 인식시킬 것이다. 강정에서 국제 관함식을 개최하는 것은 제주의 미래비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협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가꿔나가야 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주는 국가보력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딛고 4.3과 강정이라는 시대를 초월한 역사를 통해 '평화의 섬'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길 위에 있다. 아시아의 바다를 떼개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놓인 제주는 군사적 힘이 집중되는 곳이 아니라 평화의 섬이 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은 평화를 지키는 것은 오로지 평화적 수단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는 '평화는 평화로 지킨다'는 강정마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평화 시대로의 변화의 흐름 속에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가꿔 나가는 것은 현 세대의 책임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다.

수차례 강정마을 갈등태소와 공동체 회복 노력을 공언했던 원희룡 제주도정은 강정마을회의 결정을 존중해 해군의 국제 관함식 강행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또한 평화의 시대에 역행하며 구시대적 발상으로 강행되는 국제 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를 취소해야 한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확고한 반대 입장에도 국제관함식이 강행된다면 갈등은 또 다시 증폭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대한 책임은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해군과 원희룡 제주도정,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제주군사기저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법도민대책위원회 4.3도민연대, 4.3연구소, 꽃자왈사람들, 기독교 장로회, 노동당제주도당, 민중당제주도당,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육권열사추모사업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제주 녹색당, 제주 DPI, 제주인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함교육제주학부모회,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섬특별위원회, 기독교 장로회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제주 녹색당, 노동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민중당 제주도당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9인혁열사제승사업회, 4.9통일평화재단, AWC한국위원회, IVF사회부, KYC한국청년연합, 개척자들, 경제를넘어,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금속노조 양육자자동차부, 기독교사회선교연대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교청년아카데미, 나눔문화, 남북평화연구소, 남북평화재단, 통일을준비하는사람들,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지원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정선,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동북아평화교육포럼연,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분쟁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인성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세상살이배구는민중의힘, 반전평화연대(준),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폭력평화물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벽이슬,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평화결사,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파당, 생명평화연대, 생태지평,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얼굴있는저레, 예수살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모두단, 육지사는제주사람,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재단 사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독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보사람, 진실을알리는시민,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원전국연합, 통일장장, 통일문제연구소, 평화네트워크, 평화누리, 평화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다, 평화바람, 평화박물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연구소, 하나누리, 한국가톨릭농민회(사),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강요교회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강요회생명선교연대, 한국기독교청년학생연합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나법리스트센터, 한국어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사), 한빛누리, 함께하는시민행동, 현장실천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회원함께

천주교정의구원전국연합 가톨릭농민회,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협의회, 가톨릭 평화공동체, 정의

평화민주 가톨릭행동,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우리신학연구소,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 천주교인권위원회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콜트약기지회, 풀택지회, 파인택지회, 기흥전자분회, 세종호텔노동조합, 사회보장정보원분회, KTX열차승무지부,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민주노총 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고양통일나무,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녹색당, 민중당,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인물로서인사희네트워크, 경치하는엄마들, 제주다크투어, 천주교정의구원전국사제단, 통일맞이, 피스모모

[논평]

**정부는 성평등 인사정책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 공직 내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고 다른 영역 균형인사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인사 정책의 수립 및 이행에서 몇 가지 유의미한 진전을 보여 왔다.

지난 7월 13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 및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대검 수사지원과장 등 주요 보직에 여성 검사를 발탁하였다. 지난 고위급 검찰인사에서 최초 여성 고검장 검사 임명을 바라던 여성들의 기대를 저버린 점은 유감이나, 한국 사회 내 어떤 조직보다도 남성 중심적이고 위계적인 조직 문화를 가진 검찰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인사는 형평성 차원에서 의미있는 인사이다.

지난 17일에 발표된 회명에 국가인권위원장 내정 역시 매우 뜻깊은 인사이다. 시민사회가 참여한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최초의 비법조인 여성을 대통령 임명 위원장으로 지명함으로써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명실상부한 자별시정과 인권침해 구제 기구로서의 위상 회복과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같은 날 인사혁신처가 국무회의에 보고·발표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이하 “기본계획”)은 다양성·형평성·공정성 등 사회적 가치를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기존 균형인사 정책의 단기적 관점에서 선회하여 최초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균형인사 정책의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고 전반적인 균형인사 정책 과제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은 차별시정을 균형인사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고, 성별 다양성의 경우 남녀 동수 비율의 대표성 확보로서 인사의 공정성·형평성을 달성해야 한다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는 겉면 주류화의 관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특히, 그동안 50% 정도로 높은 여성 공무원의 임직 비율에도 불구하고 관리자 및 고위공직자 중 여성 비율이 턱없이 낮아 한국의 여성 대표성이 국제 기준에서 한참 뒤떨어져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는 고무적인 비전 제시라 보여진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인사 관련 정부의 움직임에 대하여 그간 여성의 대표성 확대와 성평등 인사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먼저 환영의 의사를 밝힌다.

다만, 기본계획에서 성평등 인사를 장애인, 지역인재, 사회통합형 인재 등과 동일 범주로 묶고 있는 점은 아쉽다. 여성 대표성은 남녀동권이라는 시민권과 평등권 확보 차원에서 여성의 누락된 차별을 시정해야 하는 젠더 정의와 결부된 대표적인 문제로, 장애인, 지역인재, 사회통합형 인재들의 다양성 확보 목적과는 다른 차원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센터장의 차원에서 여성 대표성은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 정신인 남녀동수 수준의 여성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기본계획의 세부 추진과제인 “공직 내 실질적 양성평등 제고”에서 정부가 2018년 내 모든 중앙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 1명 이상의 임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은 여성 관리자 임용 불균형상이 심각한 현상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 긍정적이다. 그러나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을 현 6.5%에서 10%,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을 현 14.7%에서 21%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2017년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그대로 가져온 수치로 한국의 공공부문 여성관리자 비율이 매우 낮은 현실과, 남녀동수 내각을 임기 동안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치고는 너무 낮게 설정한 수치라 아쉽다.

나아가 이행의 실효성 측면에서 볼 때, 실적 공개, 연도별 보고서 발간, 균형인사지수를 통한 진단 등 이행력 확보 방안은 점진 수준에 불과해 보인다. 각 부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공직 내 실질적인 성평등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 대표성 확대가 우선적인 과제이다. 최초로 행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균형인사 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만큼 이를 꼭 이행해야 하며, 이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더불어 정부는 공직사회 내 성차별 및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를 변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뿌리 깊은 남성 중심적 관행과 위계적인 조직문화, 공직 사회 내 성차별을 변화하기 위해 성평등한 균형 인사를 위한 의지와 상성력을 적극적으로 보이기를 기대한다.

성평등 균형인사 정책은 균형인사의 핵심요소이며, 차별시정과 겹쳐정의 회복 차원의 문제이다. 따라서 다양성 확보 목적의 다른 분야 대표성과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성평등 균형인사 정책의 효과적이고 조속한 이행으로 공직 내 실질적인 성평등을 앞당길은 물론, 다른 영역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균형인사 정책의 시범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1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27 한반도 종전을 위한 여성평화선언문

1. 우리 여성들은 정전협정 65년이 되는 오늘, 여성의 이름으로 한반도 종전을 국내외에 공식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의 문명을 쫓고 낳고 먹여 살린 삼강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정전협정이 발효된 지 65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4조 60항에 명시된 “정치회담을 소집하여 한반도로부터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한반도는 지금까지 세계 유일의 ‘냉전의 섬’으로 남아 세계인들에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로, 그리고 70년 이상을 동족 간 화해는커녕 극도의 상호불신과 무기최대 밀집지역인 DMZ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과 분단은 이 땅의 여성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은 민간인집단학살사건 피해자, 소위 ‘전쟁 미망인’과 이산가족의 여성가장, 전쟁고아, 임양아, 코리아 디아스포라, 미군 기지촌 여성, 특수 위안대 등 지난 70여 년간 빈곤, 편견, 억압, 폭력으로 점철된 힘겨운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현재도 여성에게 빈번하게 가해지고 있는 여성혐오에 기반을 둔 폭력과 여성의 불안은 전쟁과 분단에서 비롯된 군사주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에게 한반도 종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남북 정당한 합의된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427판문점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더 이상 외세에 휘둘리지 않고 이 선언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입니다.

2.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땅의 여성들은 적극적인 의미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주체로 나설 것입니다. 모든 여성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남성과 평등하고 자유로운 존재로서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 획득을 위해 일어설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여성들은 오랜 세월 한반도 분단 극복과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한국의 여성들은 무력통일, 흡수통일 등 폭력적 방법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평화통일운동을 꾸준히 주장해 왔으며, 이는 생명·평화·상생의 여성주의적인 가치를 실천한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가부장제와 군사주의를 극복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없는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 평화협상 과정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3. 우리 여성들은 성평등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미래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 성평등한 사회와 국가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성별임금격차가 없는 세상”, “여성의 임상이 남성의 포 르노가 되지 않는 세상”, “여성의 발길이 안전한 세상”,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 “여성

에 대한 폭력이 없는 세상", "과도한 무기구입비가 복지예산으로 전환되는 세상"이 되도록
성평등한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여성들의 힘을 모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정전협정체결 65주년을 맞아 우리 평화여성들은 남북 간에 합의된 '4·27 판문점 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남과 북,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한반도 종전을 하루빨리 선언하고, 평화협정 당장 체결하라.

하나. 한반도를 포함한 전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라.

하나. DMZ를 평화지대화하고, NLL을 평화수역화하라.

하나. 군비를 축소하여 인권적 관점의 사회 서비스와 환경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전환하라.

하나. 남북 민간인 교류를 전면 보장하라.

하나. 여성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 1325에 의거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
상단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여성 없이 평화 없다(No Women, No Peace)"

218년 7월 27일(광천 65년, 분단 73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문화세상이프토피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여성본부, 한국여성
단체연합(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록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울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
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
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
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희화협의회 한국여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7개 지부 28
개 회원단체), 전국여성연대, 어린이어깨동무, 너미서, 평화통일연대, 평화어머니회, 경기여
성네트워크(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새로운100년을여는통일의병, NCKK 여성위원회, 세계교회협의회(WCC), 일본군성노예제문
제해결을위한장의기억연대, 녹색당인성교육협동조합, 우리누리평화운동, 고양파주여성민우
회, 천주교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민족화해센터, 한국여성사건가협회, 여화민주동우회

[경악 경찰 편파수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

십수년의 불법촬영 유포방조, 웹하드는 왜 처벌하지 않는가? 진파 방조자는 경찰이다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보도가 지난 8일에 있었다. 운영자의 거주지가 외국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경찰은 해당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하고, 범죄인 인도 청구나 인타를 적적 수배 요청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의 이러한 움직임을 보며 우리는 지난 5월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흥대 남성 누드모델 사진 유통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여성피의자를 재빠르게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 '가해자에 대한 구속을 요구해도 범죄 은닉의 우려가 많다'라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던 경찰이 24일 만에 피의자를 구속하여 흥대범죄로 다른 것이다. 불법촬영물 수사, 처벌은 경찰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임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 사법 권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소화하고 여성의 목소리를 무시한 것이다. 편파적이고 성차별적인 수사기관의 태도에 분노한 20만 명에 달하는 여성들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매일 거리에서 외쳤다. 지난 8월 4일에는 7만 명의 여성들이 '나의 삶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 '불법촬영물 엄정대처', '편파 수사 규탄'을 외쳤다. 더 이상 숨죽여 울지 않기 위해 여성들은 목이 터져라 외쳤다.

지금은 폐쇄됐지만 불법촬영물 유포사이트 소라넷은 17년 동안 버텼이 운영되었다. 각종 남초 커뮤니티와 P2P사이트에서는 오늘날 무수한 불법촬영물이 업로드 되고, 끊임없이 재생·유포되고 있다. 촬영물 속의 여성들은 소비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은 지속되고 있다. 여성들은 십수 년 동안 경찰에 찾아가 불법촬영물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였다. 그럴 때 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그거 못 잡아요," "피의자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별것도 아니에요," "처벌 못해요," "삭제 못해요," "포기해요," "서버가 외국에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할 수 없는데 그냥 잊어요,"라는 말들이었다.

촬영물 속의 여성이 동영상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에 좌절해 생을 마감하여도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벌하였다는 보도를 우리는 본 적이 없다. 십수 년 동안 경찰은, 사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소라넷 폐쇄는 여성들이 스스로 청원을 하고 서버가 있는 국가에 국제적인 요청을 해서 얻어낸 여성들의 성과였을 뿐이다. 경찰은 그동안의 역할 방기에 반성하고 불법촬영물에 대한 제대로 된 접근을 하지는 못할망정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의 체포영장 발부로 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인가?

일간베스트, 디씨인사이드 등 다수의 남성 중심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웹하드 및 파일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 십수 년 동안 넘쳐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 웹하드 사업자들은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면서 돈을 벌고, 웹하드 콘텐츠의 필터링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조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유통시킨 불법촬영물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식재해주는 디지털강제시업을 통해 몇 백억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축적하고 있다. 수익창출을 위한 웹하드 기반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하나의 산업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십수 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다가 여성피의자가 등장하자 즉각적으로 체포·수사하고 국제공조를 펼치는 편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구조를 일면시도 개인의 문제로만 취급해 온 경찰의 행보가 불법촬영물이 매일 밤 도배·유포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 질서로 유지될 수 있게 한 배후였다. 경찰이야말로 따로 이 끔찍한 현실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한 진짜 방조자이지 않은가?

그래서 경찰의 “일베든 누구든 강력 처벌하겠다. 워마드 편파수사 아니다.”는 항변은 변명일 수밖에 없다.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해 9만 여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특별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십수 년 동안 불법 촬영물 유통을 통해 불법산업을 양산한 웹하드에 대한 철저의 수사하고 분명한 처벌을 함으로써 진짜 방조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라! 그것이 지금 경찰이 할 일이다.

1. 경찰은 불법촬영물 편파수사 당장 사과하라
2. 경찰은 불법촬영물 편파수사 중단하고 동일범죄에 대한 동일 수사 즉각 진행하라!
3. 경찰은 불법촬영물 유포자, 유통플랫폼, 소지자 모두 처벌하라!
4.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 수사단을 구성하라!

2018년 8월 10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성명]

사법정의는 족었다 -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선고를 규탄하며

8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진 충남도지사 안희정에 의한 성폭력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위력의 존재'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함,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이 부족함 등을 이유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은 한국사회에 사법정의라는 것이 존재하진 하는지 의심케 한다. 유력 대권후보이자 도지사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그의 수행비서에게 행사한 것이 '위력'이 아니면 무엇이든 말인가. 이렇게 피해 사실을 증언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이 재판부가 말하는 '실인지 감수성적 고려'인가. 재판부가 #미투 운동 이후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혁하라는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재판부는 'No Means No'와 'Yes means Yes'가 임범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 법제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며 임범부와 사회인식에 그 책임을 돌렸다. 정말 재판부여겐 책임이 없는가.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조항이 있음에도 '위력'에 대한 판결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강간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을 두루 고려하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에도 진정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단 말인가!

#미투 운동은 한국사회의 만연한 성차별·성폭력을 드러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대표적인 예로 이 사건의 공정한 판결은 #미투 운동의 강력한 요구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8월 14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남여성회 기독교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겐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경제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논평]

‘저출산’ 문제의 해법은 성차별 해소다.

9월 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출산주도성장’이라는 시대착오적이고 성차별적 주장을 했다. 이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제1야당 원내대표의 저급한 현실 인식을 여파없이 드러낸 발언이다. 여성을 비롯한 우리 사회 현실과는 무관하게 ‘저출산’ 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그의 인식이 개탄스럽다.

‘저출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에 있다.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을 여성에게만 그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그것이 일터에서의 성차별로 이어지고, 여성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성차별과 불평등이 출산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와 과도한 노동시간 또한 사회구성원들의 재생산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고용, 교육, 주택 등 사회 전반에서의 차별과 격차가 사라져야 비로소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도 전환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저임금과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자율에 맡기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돈으로 해결하자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은 여성들의 현실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빛나간 대안이다.

출산을 비롯한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사회구조적으로 고려해야 할 통합적 사안으로 보지 못하고,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시각은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전 복지 실태조사’ 과정에서 개별 가구의 현관문에 ‘전국 출산력 조사 대상자’ 메모를 붙여놓은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성차별적인 사회 전반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인구결벽은 해결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제1야당 대표는 여성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라. 정치권과 정부 또한 제대로 된 현실 인식으로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힘쓰라.

2018년 9월 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울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전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희생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논평]

한반도를 핵위협 없는 항구적인 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평양공동선언을 환영한다.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 없는 항구적인 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선언은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한걸음 더 진전된 실질적 선언이다.

평양공동선언은 남북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조속한 이행에 대한 구체적 합의서로 명문화 되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최초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여 정전협정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군사조치 마련으로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평양공동선언이후 북미, 한미, 남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중 4자 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의 시대가 열리기를 희망한다.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남북정상이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모든 공간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는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다. 이제 빠른 시일 안에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합의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평화협정의 핵심은 전쟁상태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중단하고, 남북한의 공동 번영을 위해 평화 공존의 조건을 남북 양당사자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남북정상은 우리 한반도의 문제를 남북이 주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동북아, 세계 평화에 한반도의 주도권을 세계에 선언한 것으로 세계사적으로 역사적인 전환이 될 것이다. 평양공동선언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상실적 이산가족 교류 등 인도적, 문화적 교류 협력 및 남북의 여성교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러한 평화 체제 구축 이후 남북의 여성들이 지속적인 일상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단으로 인한 특권과 비리, 반인권적 상황, 전시성폭력 문제 등 산적한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UN안보리 1325 결의안을 준수하여 평화협정 논의와 체결 과정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성평등 의제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의 성주류화를 위해 남북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위해 싸워 온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주체로서,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함께 할 것이다.

2018년 9월 20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
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남여성회 기독교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
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
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
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태권연합 한국여신
과학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성명]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라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약속을 이행하고 보육을 반드시 포함하라

'저출산' 문제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해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출발은 낙태죄로 인한 출산의 강요가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삶의 조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어야 하고 그것은 보육의 공공성 확보이다.

자본주의적 발전주의는 경제 성장을 가져왔지만 본래의 부정의를 초래했고 갈수록 삶의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 자신의 삶조차 책임질 수 없는 현실에서 결혼과 출산은 공생이 아니라 모험이 되어버렸다. 결혼 제도 속에 들어간 여성들의 노동은 사회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별고정관념은 여성에게 입과 생활의 균형은커녕 독박육아와 가사노동의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어린아집 사고에 대해서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 엄마에게 그 책임을 묻기까지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출산' 현상은 필연적인 사회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의 책임에서 비껴나 있는 남성과 사회,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이는 보육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나 아동의 인권 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도 맞닿아 있다.

현재 보육 현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 여성의 노동력이 필요했던 국가가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이라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은 방기하고 그 주도성을 민간에게 내어준 것이다. 시장논리를 탈피 할 수 없는 민간주도의 보육 현장은 열악한 보육 노동 환경과 그로 인한 아동 인권의 침해 등 많은 문제들을 파생시키고 있다. 각종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미봉책에 그쳐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단발적인 대응이 아닌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사회서비스로서 보육을 포함한 돌봄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

현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보육과 요양(시설/재가), 장애인복지, 사회복지와 같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목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집권 2년차 정부의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한 추진 상황은 매우 미흡한 상태다. 관련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예산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적극적이지 않다. 게다가 보육을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까지 일어나고 있어 매우 문제적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한 논의가 왜 나왔는지를 복기하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흔들림 없이 구축해야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해왔다. 사회적 돌봄을 통해 누구나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담보 없이는 우리는 '저출산'을 극복할 수 없고 아동과 보육교사의 인권, 노인의 인권 침해를 막을 수도 없다.

우리는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 비참하게 죽음을 기다리지 않는 사회, 돌봄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를 원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고, 보육을 반드시 포함하라

2018년 10월 11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
 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남여성회 기독교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
 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
 산여성회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썬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
 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래인연합 한국여신
 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논평]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환영한다.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를 환영한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문제 해결을 약속한 '2015 한일합의'에 따라 일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결정으로, 한국과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각국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권리를 박탈하였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본들과 함께 여성연합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2015 한일합의 전면 무효화와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을 줄곧 요구해왔으며, 지난 8월부터는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을 위한 1인 시위를 지속해왔다.

이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으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길이 다시 열렸다. 화해·치유재단 해산은 끝이 아니라, 한일 양국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 항의하지 말고 피해자의 의사를 받아들여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에 나서야 한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진정한 해결로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되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희망한다. 여성연합은 이를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8년 11월 21일 수요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명]

이것은 지위를 악용한 명백한 성폭력이자, 성소수자 혐오범죄다
· 해군간부 2명에 의한 성폭력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규탄하며

2010년 경 해군 A중위는 직속상관인 B소령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이후 당시 함정
 이었던 C중령이 해당 사건을 알게 되었고, C중령은 A중위를 위로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불려
 내 또다시 성폭력을 행사했다. 해당사건은 B소령과 C중령, 두 명의 가해자가 자신이 군대
 내에서 가진 지위를 악용하여 지속 부하직원을 성폭력한 중대한 범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19일, 고등군사법원은 2명의 가해자에게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
 서 내려진 B소령 징역 10년형, C대령 징역 8년형 선고를 뒤집는 결과였다.

2심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피해자의 상황」이 지항하기 불가능한 정도라고 볼 수 없다',
 '사건이 오래되어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들었다.
 이는 장간직의 구성요건인 '폭행 및 협박'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성폭력 범죄의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증언이라는 특성에 대해서도 돌아서로 일관하고 있어 매우 문제적
 이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남성중심적인 군대에서 함정이라는 고립된 공간의 유일한 여성
 군인이었다는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고립감을 느끼기 충분한 상황이었다는 점, 해군소령
 과 중령 - 해군 중위라는 명백한 권력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자신의 직장과 신념을 지키
 기 위해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상황이라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결
 하여야 한다.

또한 B소령은 피해자가 여성 성소수자라는 점을 빌미로 "남자 맛을 알게 해주겠다"며 성폭
 력을 행사했다. 피해자의 성적지향이나 성적채성을 문제삼아 이성에게로 '교정'하겠다는 빌
 미로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은 전형적인 혐오범죄의 유형이며, 이는 명백한 성소수자 혐오
 에 기반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 이와 같은 성폭력과 혐오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
 을 실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혐오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그동안 군대 내 성폭력 문제는 오랜 기간 지적되어왔다. '2015~2017년 행사공판 사건 성
 범죄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5~17년까지 보통군사법원에서 성범죄로 재판을 받은 군인은
 1,729명에 달했다. 하지만 징역형 선고는 11.57%(148건)에 그치는 등 처벌이 미미한 상황
 이다. 남성중심적인 군대 조직 문화 속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위 통계치만 드러난 사건에 대한 처벌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매우 심
 각한 문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해당 사건이 1심 징역 10년, 징역 8년의 유죄가 선고되었
 다는 점을 고려하면, 2심 재판부의 무죄판결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국방부와 군대는 철
 적히 반성하고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며, 대법원 판결에서는 합당한
 판결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심념과 자금심으로 일했던 A증위의 피해를 국가는 '무죄판결'로 외면했다. 이런 판결로 A증위는 물론 수많은 여성들과 소수자들이 깊은 분노와 좌절을 느끼고 있다. 국가는 이 사건을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된 대책마련과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1월 21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
 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
 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울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
 산여성회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권미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
 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
 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미투법안 발의안만 쏟아내고, 처리는 나 몰라라?
일기 내내 직무유기, 국회를 규탄한다!**

올해 초 미투운동이 촉발하면서 여성들은 성별 고정관념과 성별 권력관계에 기반한 성차별적 사회구조에 대한 변화를 정부와 한국사회에 끊임없이 요구해오고 있다. 국회는 이에 반응이라도 하듯이 미투법안을 정쟁하듯 쏟아내었다.

하지만 12월 7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일정을 불과 일주일 남짓 남겨둔 지금, 쏟아진 미투법안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번년도 정기국회에서 기결된 미투법안은 소수에 불과하다. 국회의원들은 연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미투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발의만 하고, 이후 논의조차 하지 않을 것이었다면 법안 발의는 절절하게 #미투를 외친 여성들을 향한 '쇼'에 불과한 것이었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다원화된 성폭력 범죄의 체계 정착성을 검토하고 법정형의 적절성 등을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성적 자기결정권의 합리적 보호를 위한 성폭력 범죄의 개선방향 연구'라는 이름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 중에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법안'들이 모두 올해 #미투운동 이후 새롭게 제기된 법안들이 아니다. 여성단체들은 이미 2000년대 초부터 폭행과 협박이 아닌 피해자의 동의에 기반하여 성폭력 범죄를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십 수 년 동안 끊임없이 해왔다.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성별 불평등과 성차별 시정을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을 구체적으로 요구해온 것이다. 특히 올 한 해는 여성들이 성차별과 성폭력을 끝장내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세계 최고의 성별임금격차를 없애기 위해 수없이 거리에서 싸웠다.

#미투운동과 관련해 국회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야 법적 종합성 운운하며 미투법안 논의를 내년으로 또 미룬단 말인가? 11월 27일에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웰하드 카르텔을 끊을 수 있는 강력한 규제나 처벌과 관련한 법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이외에 여성의 삶을 파괴하고 뒤흔드는 성폭력과 성차별을 근절할 수 있는 법안들은 여전히 산적해있을 뿐이다.

또한 법사위 위원들의 태도에서도 미투법안에 대한 안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1월 28일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9월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심의하며 발의안 내 내용과 용어 등을 이유로 들어 관련 법률 12월 3일 진행되는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로 회부시키며 "1주일을 못 참습니까?", "오늘 통과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나?"라고 말하는 안일함을 드러냈다. 여성들은 하루가 급한 마음으로 미투 법안의 통가를 바라고 있지만, 법사위 의원들은 여가위에서 통과된 법률 아무렇지 않게 미뤄버리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들은 안전을 위협받고, 일터와 학교를 비롯한 일상에 단연한 성차별과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국회와 정부는 성차별적인 한국사회를 향한 여성들의 분노에 구체적인 대응으로 반응하라. 우리사회 불평등한 사회구조 변혁을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정부와 국회 대상으로 미투법안 가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관련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여성들은 과거로 절대 돌아가지 않으며,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8년 11월 2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교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예.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평화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참여

평화여성회의 회원이 되시면,

- ❖ 문화행사, 토론회, 연구활동, 캠페인 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 관심분야에 따라 자원활동 및 다양한 회원모임에 참여합니다.
- ❖ 정기회비 납부로 평화여성회 활동을 후원합니다.
- ❖ 소식지와 자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 원 가 입 서

이 름			주민번호		
이동전화			전자메일		
집 주소					
거래은행			예금주	약정금액	
계좌번호				이 체 일	☐ 10일 ☐ 25일
관심 분야	☐ 정세대응 ☐ 통일과제 ☐ 국방과제 ☐ 남북교류 ☐ 갈등해결 ☐ 전쟁반대 ☐ 평화교육 ☐ 평화문화 ☐ 여성운동 ☐ 기타()				
가입 동기					
가입 일자					

- 후원 388-810005-03104 (하나은행) 예금주 :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계좌 347-01-0018-351 (국민은행) 예금주 :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19년 제23차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기총회

발행일: 2019년 1월 28일

발행인: 안김정애

발행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